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 » 일 시 2022. 11. 01.(화), 09:40~15:00
- » 장 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온국민소통 열린소통공간)
- »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 » 세부일정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 간	내 용	
09:40~09:45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 말씀	
09:45~10:05	발표 및 질의응답 ①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방향
10:05~10:25	발표 및 질의응답 ②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 위한 스마트케어(돌봄·의료) 시범연구 : 충청남도 소재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10:25~10:45	발표 및 질의응답 ③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개발 연구 :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을 중심으로
10:45~10:55	Break Time	
10:55~11:15	발표 및 질의응답 ④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비교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1:15~11:35	발표 및 질의응답 ⑤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와 상인회를 연계한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 강원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11:40~13:10	오 찬	
13:10~13:30	발표 및 질의응답 ⑥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 지역참여제도 기반 커뮤니티와 기금 마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13:30~13:50	발표 및 질의응답 ⑦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을 중심으로
13:50~14:10	발표 및 질의응답 ⑧	청년의 지역정착을 통한 인구구조 개선 방안 : 광역자치단체의 제조업기술집약도가 청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4:10~14:15	Break Time	
14:15~14:35	발표 및 질의응답 ⑨	도농 협력 워라밸 플랫폼 구축(안) : 화성시 및 도농상생지역(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지자체)을 중심으로
14:35~14:55	발표 및 질의응답 ⑩	빈집을 활용한 한 달 살아보기 서비스 플랫폼 개발
14:55~15:00	마무리 말씀	
	폐 회	

목 차 CONTENTS



발표 및 질의응답 ①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방향 1

연구책임자 김현우

발표 및 질의응답 ②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 위한 스마트케어 19

(돌봄·의료)시범연구: 충청남도 소재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김미주 / 공동연구자 이양우

발표 및 질의응답 ③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개발 연구 35

: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재경 / 공동연구자 김호진

발표 및 질의응답 ④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비교 55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태건 / 공동연구자 이슬



발표 및 질의응답 5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와 상인회를 연계한 문화예술 및 77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 강원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현국

발표 및 질의응답 6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 ·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89
 : 지역참여제도 기반 커뮤니티와 기금 마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동희 / 공동연구자 정보영

발표 및 질의응답 7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103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문성남 / 공동연구자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

발표 및 질의응답 8

청년의 지역정착을 통한 인구구조 개선 방안 : 광역자치단체의 125
 제조업기술집약도가 청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여양모 / 공동연구자 김혜지, 김진영

발표 및 질의응답 9

도농 협력 워라벨 플랫폼 구축(안) 145
 : 화성시 및 도농상생지역(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지자체)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여주희 / 공동연구자 정성덕, 차유미

발표 및 질의응답 10

빈집을 활용한 한 달 살아보기 서비스 플랫폼 개발 167
 연구책임자 정혜진 / 공동연구자 김재식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①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방향

—
연구책임자 김현우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 방향

연구책임자 김현우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므로 국가적·지역적 차원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 변화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서구사회가 겪었던 것처럼 높은 임금과 많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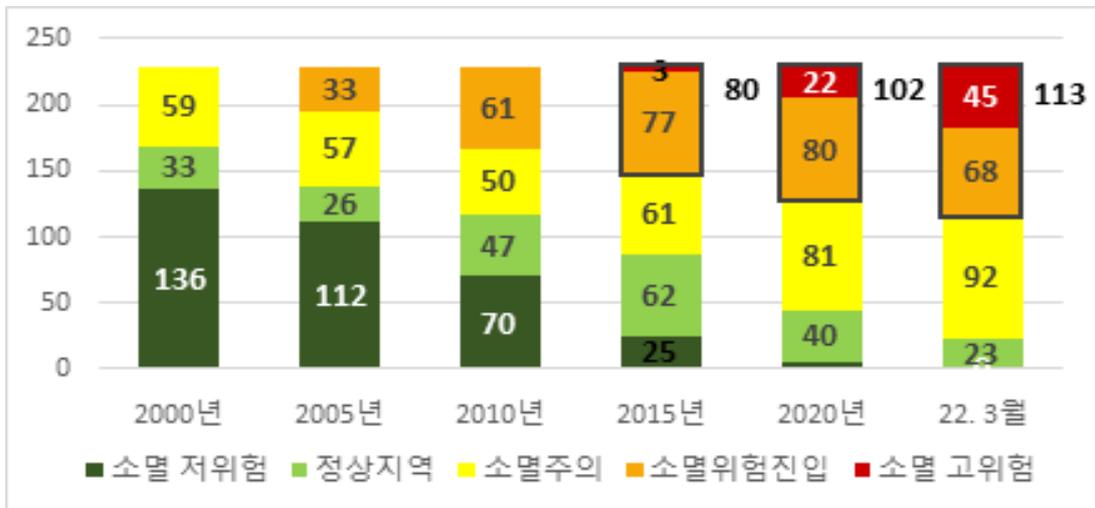
- 국민의 정부부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비수도권과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차 완화되자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재 집중화가 진행

○ 지역 내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도시재정 문제, 사회·문화 여건 약화, 지역 내 SOC 시설 확충 지연, 도심쇠퇴 현상 등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주요 관심사임.

- 지방소멸위험지수(2022년 기준)를 보면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이며, 제조업 쇠퇴 지역(통영시, 군산시 등) 및 수도권 외곽(포천시, 동두천시)으로 확산되는 등 지역인구감소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

[그림 1]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시군구 기준)

(단위 : 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2),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보도자료(2022.4.29.)

주: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함

□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 있음.

- 기존의 우리나라 인구감소 정책은 크게 2가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낙후지역 발전정책 등으로 구분됨.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지원, 아동수당지원, 양육지원(어린이집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노후소득지원, 고령자 의료지원, 고령자 사회참여 등이 있으며, 이외 국토부, 고용부, 여가부에서도 각종 시책을 수행 중
 - 낙후지역 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제정)」을 통해 마련된 균특회계로 추진 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심임*.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은 통해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직접사업, 포괄보조금지원, 제도정비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도 포함되어 있음.
- 최근에는 행안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개)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인구감소정책이 부처 칸막이로 인해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것에 비해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은 범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가동은 단기적으로 지역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

- 지역 인구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요인과 인구가동이라는 사회적 요인 등 3대 요소로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가 변화되는데 자연적 요인과 달리 사회적 요인은 정책, 제도 등 인위적 수단을 통해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 출산율 저하는 지역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기적인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며, 향후 생산 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발시킴으로써, 양적인 인구감소를 통한 지방의 소멸과 함께 질적인 지방의 소멸도 우려되고 있음.
- 지역 간 인구가동은 자연적 요인에 비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정책효과가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지역 간 인구가동은 지역 내 생산력과 소비력, 지방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교부금 및 세수 원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
 - 인구가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인구 연령대와 고령자 및 아동·청소년 등 소비 중심 연령대, 자녀 출산과 관련된 연령대 및 남녀구성비의 적절한 조합이 도시를 유지하는데 기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패키지 형태의 정책 수단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인구감소정책 및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과 특징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
 - 제한된 재정하에서 효율적·효과적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구감소문제의 원인과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
 - 기존 연구는 지역별 인구감소현황과 예측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인구감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특징과 지역특징에 대한 연구는 미흡
- 지역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 내용과 효과, 인구이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
 - 기존 연구는 지역별 인구감소 현황 및 예측, 인구이동 원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또는 특정 지역의 배출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유출인구의 특징을 파악한 연구는 일부만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의 이동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별 특성과 지역산업 및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의 배출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인구감소를 줄이고, 지역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개인적·직업 특성 등을 파악한다면 특정 유형의 인구집단의 유출을 밝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지역 차원에서 유출을 방지하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효율화와 정책효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지역산업과 일자리를 인구유출요인으로 중점적 살펴보고자 함.
 - 유출인구의 연령대, 직업 및 산업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배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개인·산업·직업 등과 관련된 유출인구의 이동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배출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인구감소지역은 11개 시·도의 광역시 구와 군, 비수도권 중도시, 군지역 등 다양한 지역, 도시 규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구감소의 원인과 특징이 차별적일 수 있음. 따라서 인구 감소를 축소시키고 해당 지역의 인구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
 - 맞춤형 정책을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도시의 유형화가 필요하며, 유형화 설정을 위한 첫 단계로 인구감소의 원인과 특징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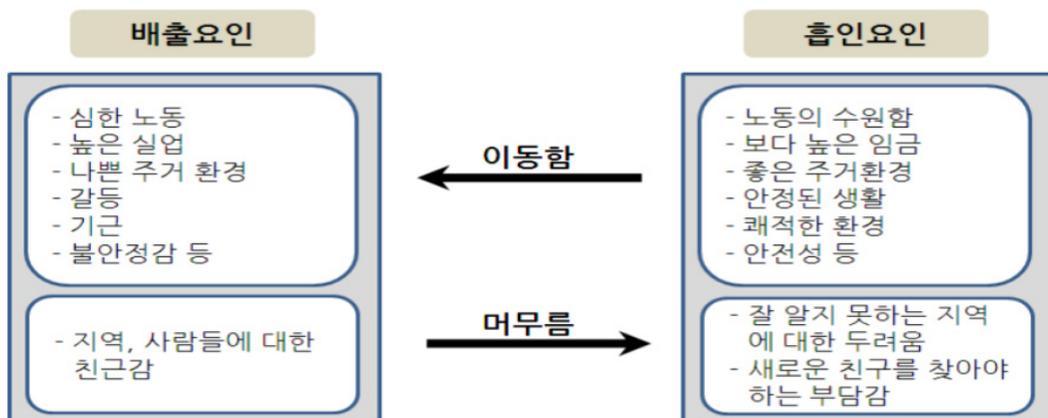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동패널자료 4차 (2001년)에서 23차(2020년)까지 20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을 선택한 개인별 특성과 직업, 소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유출 인구의 특징을 파악하는 목적이므로 노동패널자료의 내용과 부합
 - 노동패널조사는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로서 연령,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제 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임
 - 전국 규모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내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구성원(5천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8년 이후 매년 조사 실시
- 분석대상은 2001~2020년 기간동안 수집된 가구원자료에서 거주지, 성별, 나이, 직업 등 모든 변수의 관측치가 있는 표본은 158,715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남.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추출하여 '이동'과 '비이동'으로 구분하며, 이동 여부는 직전연도 거주지(시·군·구)와 차이를 통해 식별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표본 중 가구원 식별번호를 통해 중복값을 제거하면, 22,140명으로 감소 하지만, 동일인이더라도 이동목적, 이동 당시 개인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복값도 모두 포함하여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함.

II.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이론적 검토

- 중력모델, 배출-흡입요인 모델 등 거시적 인구이동모델의 기본 관점은 지역 간 소득의 차이로 인해 낮은 소득 지역에서 높은 소득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으로 인구이동의 원인을 경제적 차이로 보고 있음
- 중력 모델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 간 특징을 인구 규모로만 설명한다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간 경제적 차이로 인한 이점이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
 - 두 지역 간 노동력 규모 외에 임금과 실업률을 포함하여 지역 간 임금 차이와 고용기회 차이로 인해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노동 과잉공급)이 있는 지역에서 높은 임금과 낮은 실업률(노동 부족)이 있는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가정
 -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주하며, 다른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즉 이동의 개인적 동기, 상황, 사회적 요인 등을 배제한다는 한계가 존재
- 배출-흡입요인 모델(Lee, 1966)은 인구가 왜 이동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있음.
 - ① 기원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 ② 목표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 ③ 기원지와 목표지 사이에 있는 장애물, ④ 개인적 요인을 근거로 하여 인구의 이동량, 이동의 주류와 역류, 이주자의 특성에 관한 가설을 설정
 -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에는 임금, 노동강도, 고용기회, 주거환경, 종교적·문화적 차이, 자연재해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포함
 - 이러한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여부, 직업, 가치관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인구이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배출-흡입요인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은 차이가 있음.
 - 이동의 원인을 현 거주지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배출압력과 이동지에서 사람들을 끄는 흡입력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함.

[그림 2]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배출-흡입요인



자료 :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23쪽

출처 : Knapp, B., Ross, S and McCrae, 1989, Challenge of the Human Environment, p. 80.

2. 선행연구 분석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을 지역 산업·일자리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이 차별적임.
- 최예술(2022)은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함. 본 연구의 주제 및 분석자료 등과 관련하여 가장 연관성이 높지만 주요 설명변수 및 분석모형 등은 차별점이 있음.
- 남형권(2018)의 경우, 인구감소도시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연령, 성별, 가구원수, 소득, 교육수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거주이동이 아닌 노동이동의 경우, 유출인구의 직업, 산업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임석희(2018) 연구의 경우, 인구감소도시의 유형을 인구증감률을 기준으로 지속적 쇠퇴형, 잠재적 쇠퇴형, 불안정 성장형, 안정적 성장형 등 4개로 구분하였으나, 인구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 이외 연구에서도 인구성장모형을 통해 인구증감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 중심으로 진행(기정훈 2011, 이번송 2002 등)
- 본 연구는 유출인구의 특징을 개인적 요인, 산업·일자리 요인으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유출인구와 지역 간 인구이동 전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분석 (최예슬, 2022)	-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유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동패널조사 (2010~2020)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별 특성을 성별, 혼인, 연령, 교육수준, 임금 등의 요인을 통해 분석
	지방 중소 쇠퇴도시의 유출가구 특성 분석(남형권 외, 2018)	- 지방 중소 쇠퇴도시를 대상으로 유출 가구의 특성을 전국 이동가구의 특성과 비교하고,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가구의 특성도 살펴봄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 통계조사 - 통계분석 (이변량프로빗 모형)	-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쇠퇴도시에서의 유출가구의 특징과 이 중 수도권으로 이주한 가구의 특징을 살펴봄 - 쇠퇴도시에서는 연령(-), 가구 원수(-), 교육수준(+), 일수록 이주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임석희, 2018)	- 인구감소도시를 인구 지표에 의한 성장·쇠퇴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적 특징을 살펴봄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 통계조사 - 통계분석	- 인구감소도시(84개)의 인구 추이에 따른 유형분류와 인구 규모,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살펴봄. - 분석결과, 비수도권지역의 비중이 높고, 농촌기반형 중소규모 도시들로 나타남.
주요 선행 연구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기정훈 외 2011)	- 국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 및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함.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 통계조사 -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지역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함께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에서의 유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인구감소정책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간의 시각차이가 현저히 존재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반 구축, 기업지원이 필요
	지역적 특성이 시군구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번송 외, 2002)	- 지역 인구성장에 미치는 지역적 특성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분석함.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 통계조사 - 통계분석 (다중회귀모형)	- 도시의 인구성장을 위해서는 초기년도('80년) 도시의 교육수준, 이주자비율, 제조업 비율 등이 중요 - 도시 성장은 해당 도시의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장래성에 의해서도 결정
본 연구	- 인구감소도시를 중심으로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하는데 기여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 통계자료 조사 - 통계분석 (이변량프로빗분석)	- 인구감소도시 유출인구의 인구 이동결정요인 분석(개인별 특성, 산업, 직업 요인 특성) - 이변량프로빗모형을 통해 표본 편의에 따른 문제를 보완	

Ⅲ. 인구감소도시 이동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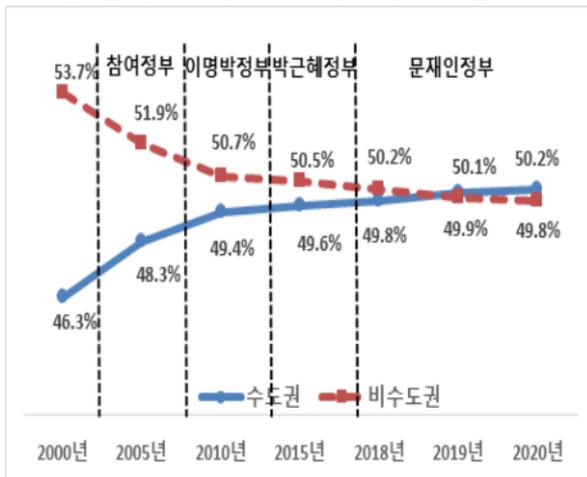
1. 지역 간 격차 및 인구이동 추이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 과정에서도 인구·경제의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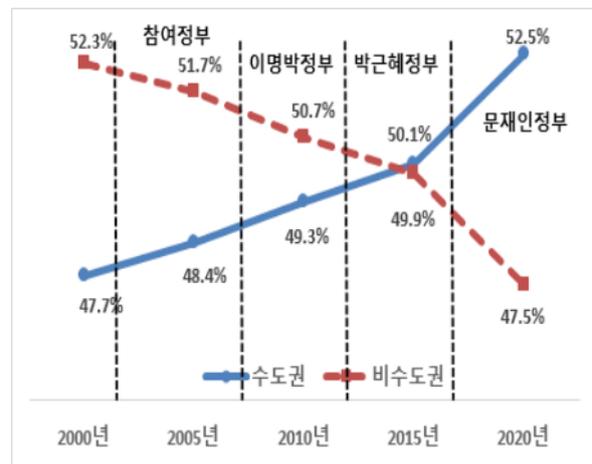
○ 총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지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비중이 지속 감소하여 수도권 역전 현상 초래

- GRDP 격차가 수도권이 우위일수록 수도권 인구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 거주('20년)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10)△1.4%p → ('20) 5.0%p로 확대

[그림 3] 수도권/비수도권 총인구 비율 추이



[그림 4]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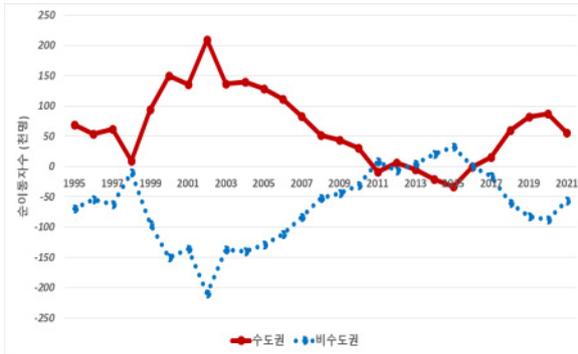
○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200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수도권 집중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비수도권 내에서는 충청권,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영남권, 호남권은 순유출이 발생
- 수도권 이동이 많은 20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였던 중장년층의 탈수도권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대부분 연령층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추세

[그림 5] 우리나라 시기별 인구이동 변화(1995~2021)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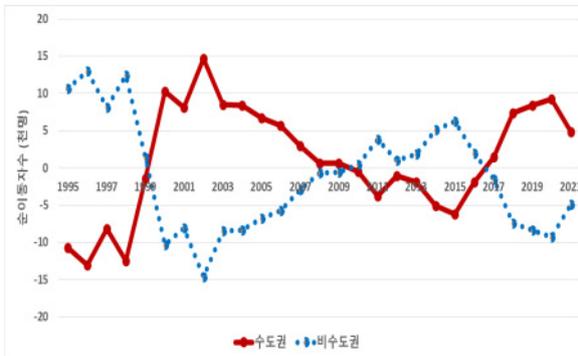
<수도권-비수도권 전체 순이동자수 추이('95~'21)>



<수도권-비수도권 25세-29세 순이동자수 추이('95~'19)>



<수도권-비수도권 30세-34세 순이동자수 추이('95~'21)>



<수도권-비수도권 40세-64세 순이동자수 추이('95~'21)>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

○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대 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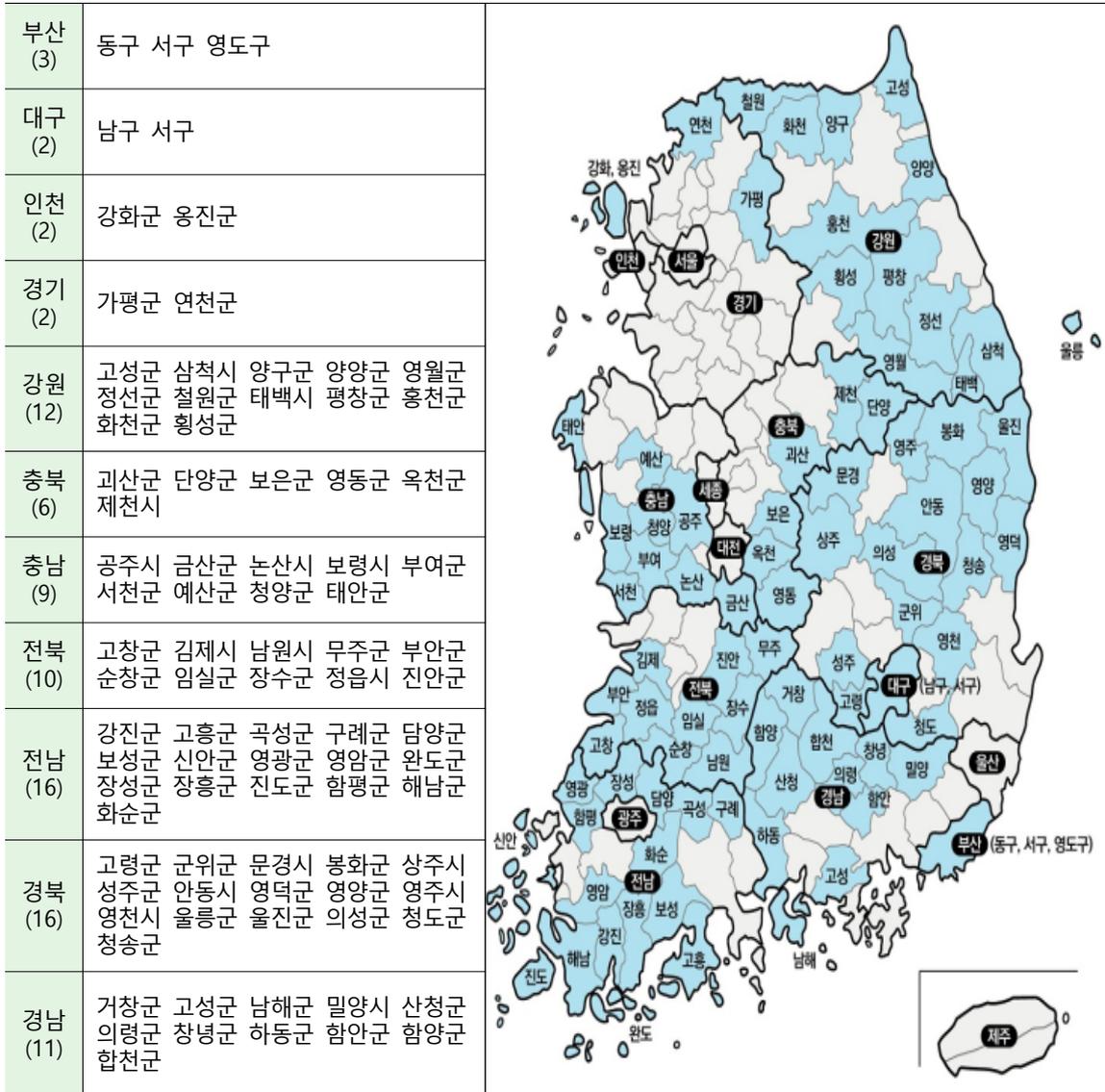
〈표 2〉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및 세부내용

지표명	세부내용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순이동률	·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양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④ 주간인구	·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 최근 5년간 연양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

자료: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2021.10.18.)

○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지역 중에서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강원(12), 경남(11), 전북(10) 순이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등이 있음.

[그림 6]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2021.10.18.)

3. 인구감소지역 유출가구 및 인구 현황 및 특징

1) 인구감소지역 유출가구 현황

□ 인구감소도시에서 이동한 가구는 다른 지역 이동가구에 비해 원거리를 이동하였으나, 동일 광역권내 이동비중이 높았으며, 주로 주택, 가정, 환경 등의 이유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2001~2020년 동안 지역 간 이동을 한 가구수는 총 2,680가구, 이 중 비수도권에서 전출한 가구는 1,112가구, 인구감소도시에서 전출한 가구는 173가구임.
- 지역간 이동을 한 가구의 평균거리는 전체 43.3km, 비수도권 56.3km, 인구감소도시 63.3km 등으로 나타나 인구감소도시에서 이동한 가구는 상대적으로 원거리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도시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시·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

〈표 3〉 인구감소도시 전출 가구의 이주 거리

평균이동거리	거리(km)	가구수
이주가구 전체	43.3	2,680
비수도권 이주가구	56.3	1,112
인구감소도시 이주가구	63.3	173

* 지역 간 거리 시도군청을 중심지하여 직선 거리로 산출하였으며, 특광역시는 구단위, 그 외는 시지역으로 산출

- 이동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에서 이동한 가구의 2/3는 동일 광역권역 내로 이동하였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한 가구는 13.2%, 타 광역권역 34.7%로 나타나 총 이주가구의 이동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중은 크지 않음.
 - 즉, 쇠퇴도시에서 이주한 가구라 하여 수도권이라는 중력 작용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타 광역권으로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인구감소도시 전출가구의 이동지역

구분	합계(A+B)	광역권내(A)	타 광역권(B)	수도권
인구감소도시	173(100%)	113(65.3%)	60(34.7%)	23(13.3%)
총 이주가구(인구감소도시 제외)	2,507(100%)	1528(60.9%)	979(39.1%)	1,687(67.3%)

* 이동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광역권내 또는 타 광역권에서 이동한 경우 모두 포함

- 이주동기 분석결과, 인구감소도시에서 이동한 가구는 내집마련(18.3%) 사유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가족(12.9%), 환경·건강(10.8%), 취업·창업(8.3%) 순임.
 - 전체 이동가구 분석결과에서는 주로 주택 및 통근과 관련된 사항이 이동한 목적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환경과 일자리 관련 비중이 다소 높음.
 - 인구감소지역이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의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되어 이동한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5〉 이주동기(노동패널조사 문항)

항목	총 이주가구		인구감소도시	
(1) 취업/창업	107	6.8%	8	8.6%
(2)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109	7.0%	7	7.5%
(3)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134	8.6%	5	5.4%
(4) 자녀 교육 때문에	52	3.3%	4	4.3%
(5)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29	1.9%	0	0.0%
(6)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67	10.7%	8	8.6%
(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206	13.2%	8	8.6%
(8)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150	9.6%	12	12.9%
(9) 환경 및 건강 때문에	128	8.2%	10	10.8%
(10)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59	3.8%	2	2.2%
(11) 신혼집 마련	22	1.4%	2	2.2%
(12) 내집 마련	298	19.0%	17	18.3%
(13)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17	1.1%	0	0.0%
(14) 기타	19	1.2%	5	5.4%
(15) 계약만료 / 철거, 재개발	48	3.1%	5	5.4%
(16) 독립하고 싶어서	2	0.1%	0	0.0%
(17) 별거, 이혼, 가정불화	6	0.4%	0	0.0%
(18) 경제적 상황 악화	12	0.8%	0	0.0%
합계	1,565	100.0%	93	100.0%

* 이주동기 문항은 2008년부터 조사됨.

2)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현황(추후 보완)

□ 노동패널자료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업·산업·소득과 관련된 자료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시군 지역의 산업 및 직업 구조를 나타내지만,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들은 전체 표본의 산업 및 직업 구조와 유사

○ 전체 표본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18.6%, 65.1%이며,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는 19.2%, 57.6%로 유사한데 반해, 인구감소지역 전체는 농림어업 비중이 높음. 이는 비수도권 지역이 많이 포함된 것이 반영된 결과임.

- 인구감소지역 이동자 산업 비중 중 건설업 종사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지역낙후 수준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SOC 및 주택 건설, 유지보수 등의 일감이 줄어든 것과 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추후보완) 전체 표본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간 인구이동한 개인별 직업 및 산업별 분포를 비교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이동자의 특정 산업분류 비중을 파악하여 지역 경제·산업구조와의 연관성 파악 예정

- 경제기반모형에서 도시나 지역 성장은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비기반산업으로 확대되는 패턴을 보이며, 반대로 쇠퇴할 경우에도 기반산업에서 비기반산업으로 확대 전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

〈표 6〉 인구감소지역 종사자별 산업 분포

구분	전체 표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동자
농림어업	12,672 (8.0%)	4,600 (35.6%)	15 (9.9%)
제조업	29,495 (18.6%)	1,416 (11.0%)	29 (19.2%)
건설업	13,221 (8.3%)	835 (6.5%)	20 (13.2%)
서비스업	103,107 (65.1%)	6,079 (47.0%)	87 (57.6%)
전체	158,495 (100.0%)	12,930 (100.0%)	151 (100.0%)

○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는 산업분포와 마찬가지로 전체표본 비중과 유사

-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과 같은 3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군들이며, 특히 고학력·고소득층과 관련 있는 전문직의 인구이동 비중이 높음.
- 전문직의 경우, 지역산업에서 신산업, 부가가치 창출, 고도화와 관련있는 직업과 관계있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요 인력으로 볼 수 있음.

○ (추후보완)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의 직업 특성을 통해 고전적 인구이동모형에서와 같이 높은지를 확인

〈표 7〉 지역 간 인구이동 가구의 직업별 분포

구분	전체 표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동자
전문직	34,953 (22.1%)	1,475 (11.4%)	32 (21.2%)
사무직	23,966 (15.1%)	1,250 (9.7%)	24 (15.9%)
서비스직	32,575 (20.6%)	2,358 (18.2%)	34 (22.5%)
생산직	18,986 (12.0%)	1,031 (8.0%)	17 (11.3%)
농림어업	11,790 (7.5%)	4,347 (33.6%)	13 (8.6%)
기능직	18,088 (11.4%)	1,058 (8.2%)	12 (7.9%)
단순노무직	17,894 (11.3%)	1,411 (10.9%)	19 (12.6%)
합계	158,252 (100.0%)	12,930 (100.0%)	151 (100.0%)

IV. 실증분석(추후 작성)

1. 분석모형

□ 인구감소도시의 유출인구 특징과 목적지가 수도권으로 간 경우에 대한 분석은 이변량프로빗모형 (bivariate probit model)을 통해 분석

○ 모형은 2차 이상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 있을 때, 오차항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2개의 프로빗 모형들로 구성됨.

-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 간 이동여부를 선택하고, 목적지를 어디로 할지를 동시에 의사 선택하기 때문에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여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해소를 목적으로 함.
- X_{1i} 는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i 번째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내며, X_{2i} 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i 번째 관측치를 의미함. 첫 번째 모형은 선택모형, 두 번째 모형은 결과모형임.

$$y_{1i} = \beta_1 X_{1i} + \epsilon_{1i}, \quad y_{1i} = \begin{cases} 1 & \text{if } y_{1i} \geq 0 \\ 0 & \text{if } y_{1i} < 0 \end{cases} \quad (\text{식 1})$$

$$y_{2i} = \beta_2 X_{2i} + \epsilon_{2i}, \quad y_{2i} = \begin{cases} 1 & \text{if } y_{2i} \geq 0 \\ 0 & \text{if } y_{2i} < 0 \end{cases}$$

- 즉, 종속변수가 지역 간 이동유무(0, 1)인 프로빗 모형과 수도권으로 이동유무(0, 1)로 하는 프로빗 모형을 동시에 분석하여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

V. 결론(추후 작성)

1. 연구요약

2. 정책개선방향

□ 연구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의 개선 및 신규정책 관련 내용 작성

□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나,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미흡

○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방향 제시

발표 및 질의응답②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 위한 스마트케어
(돌봄·의료)시범연구

: 충청남도 소재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
연구책임자 김미주 / 공동연구자 이양우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위한 스마트케어 (돌봄·의료)시범연구 : 충청남도 소재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김미주 / 공동연구자 이양우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소멸고위험지역과 초고령화시대의 진입

- '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을 차지함(49.6%). 군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소멸고위험지역은 45곳으로 '20년도 대비 23곳 증가함(한국고용정보원, 2022ab).
 - 소멸위험지역 : 33곳(2005년)→61곳(2010)년→80곳(2015년)→102곳(2020년)
→113곳(2022년3월)
- '22년 고령인구비(65세 이상)는 17.5%로써 900만 명에 육박,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2년 152.0%로 집계, '25년은 '고령인구 1,000만 시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 1960년 5.3%에 불과했던 노인부양 인구비는 지속적인 사망률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2년 24.6%로 약 4.5배 증가하였으며, '67년 102.4%로의 추이를 보여 세계 국가(지역)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 고령인구비 : 5.1%(1990년)→7%'고령화사회'(1999년)→14%'고령사회'('17년)
→20.6%'초고령화사회'('25년)→46.4%'67년)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5년부터 '45년까지 20년간 1인 가구는 약 689.7만 가구에서 832.4만 가구로 20.7% 증가, 해당기간 1인가구의 고령인구는 70대 104.8%, 80대 134.9%, 90대 209.8%의 상당한 추이를 나타내어(통계청, 2022; 국회입법조사처, 2022) 초고령 1인가구의 사회적 고독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및 지자체의 노인부양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함.

〈표 1〉 부양인구비 및 고령화지수('09~'22)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부양인구비*	37.3	36.9	36.3	36.2	36.2	36.2	36.2	36.2	36.7	37.1	37.6	38.7	39.7	40.8
노인부양인구비**	14.4	14.8	15.0	15.6	16.3	16.8	17.5	18.0	18.8	19.6	20.4	21.8	23.1	24.6
고령화지수***	62.9	67.2	71.0	76.1	81.5	87.0	93.0	98.4	105.1	111.7	119.2	129.3	139.5	152.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부양인구비 :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임

**노인부양인구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임

***고령화지수 : 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임

2. 거점형 스마트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건강·정서적 지원을 위한 IoT 기반 서비스(보건복지부 ‘스마트홈 서비스’ 서울시 ‘스마트플러그’ 인천시 ‘안심폰’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 어려움을 간과한 채, 위급 상황의 대응정책으로 국한된 아쉬움을 토로함.
- 이에, 행안부는 2022년 하반기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진행함. 특히 공주시와 고령군은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구축해 AI 로봇 기반 스마트 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함. 이외에 타 지자체에서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층의 디지털격차를 완화하고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AI, ICT, IoT 기반의 스마트돌봄 일환으로 거점형 스마트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이 운영됨.
- 그러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곧 추진될 도입단계로써 디지털기술 사용 및 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실증적 연구는 전무하며, 예비 타당성 검증은 미진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 어르신에게 스마트경로당의 스마트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며 실제 삶의 긍정·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특히 데이터분석을 통해 다양한 고령층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네트워크 등 협력·연계를 강화하여 향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함.

〈표 2〉 지자체별 거점형 스마트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지역	주제	운영 프로그램	차별성
양평군 (서종면)	‘다시, 청춘’ K-스마트 경로당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지기능 향상, 건강증진 기구와 프로그램	
부천시	‘치매! 가장 두려운 질병, 바로 알고 희망을 준비하자’	치매 예방관리교육 치매 현황, 증상, 환자응대방법과 예방수칙	어르신 눈높이 맞춤 설명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여가·건강프로그램 실버로빅, 건강강좌, 웃음치료 등 주 5회 IoT 스마트팜, IoT 헬스케어기기	스마트팜(안전한 먹거리 나눔)
성주군	‘노년과 세상을 잇다(it:da)’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와 생활 정보 서비스, 화상서비스, 문자인식 글읽기 서비스	문자인식 글 읽기 서비스
의정부시	‘스마트건강 청춘경로당’	건강프로그램(우울증예방, 만성질환, 치매예방)	각 경로당에 스마트매니저 (대학생) 배치, 세대 간 소통
서귀포시	건강·행복·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심리적·신체적인 건강, 돌봄, 안전 등 지원	제주 사투리로 작동, 조작, 사용 익숙한 지역 여행 VR게임
영통구	‘스마트 시니어 Talk 밴드’	다양한정보 신속 제공, 요청사항 실시간 반영	스마트폰 및 SNS 사용법 등 정보화 교육
유성구 (온천2동)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AI아바타 활용 치매진단/ 예방, 비접촉 터치 기반 방식의 건강측정 등	
공주시	‘행복 이어유~ 스마트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인공지능로봇의 치유돌봄서비스, 메타버스체험 공간	스마트팜(일자리 창출)
고령군	‘대가야 건강 누리 마을조성’	스마트 건강샘터서비스, 생체정보 측정/건강 지표확인서비스	

*해당 지자체별 기사와 자료 참고하여 표로 정리함

II. 연구 방법

1. 스마트경로당 및 디지털 정보화 인식에 대한 예비조사

- 본 조사 이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단계로써 스마트경로당 및 디지털 정보화 인식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함. 먼저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 문헌연구를 토대로 인터뷰 문항들을 추출하여 초기질문의 틀을 구성함.
-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 따르면, 고령층(55세 이상)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1%(19년도 대비 0.5%상승)로 저소득층(95.4%), 장애인(81.7%), 농어민(78.1%) 취약계층 중 가장 낮음으로 시니어 세대의 휴대폰 사용법, 디지털 기기 어려움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함.
 - ※ 디지털정보화수준 :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의미함.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 ▶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디지털접근수준(0.2)+디지털역량수준(0.4)+디지털활용수준(0.4)
 - 접근수준=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역량수준=PC 이용능력(0.5)+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0.5)
 - 활용수준=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 한국 노인의 복지서비스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김신영, 2006; 김정숙·최선미, 2019; 문진영·장익현, 2021; 이성은,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당수의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노인은 정보로부터 더욱 소외되며 고령층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다음으로 실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이 도움이 되는지와 한계점 여부 및 인식 조사를 위해 전문가 집단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현상적 심층면담법(phenomenological in-depth interview)을 시행함. 면담법은 스마트경로당 및 디지털활용, 노인복지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 수요자를 대상자(〈표3〉참조)로 선정하였고, 1차로 구조화 되지 않은 설문지(unconstruct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의도적인 응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최대한 경청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함.
- 심층면담 결과, 고비용으로 스마트경로당 인프라를 구축하나 RPA(Robot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빅데이터 분석 엔진의 난해, 보안과 인증 시스템화 오류, 장비의 노후화, 상황 인식 오류 등 실시간 안전관리 및 비효율성을 우려하여 도입을 망설임. ‘왜 굳이 ‘로봇’ 이어야 하는가?’ 쉽고 재미있게 주도적으로 건강을 측정하고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함.

특히 고령층의 우울증 진단 및 정신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 및 정신재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제한, 고령층 대상 건강관련 전수 설문 조사의 응답에 고충을 토로함. 로봇시스템도 좋으나 실질적인 벽지 장판, 설비 교체 등을 요청함. 아무리 훌륭한 정책 지원이라도 대상자에게 인지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 지자체별 사회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나 소수만 참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로 대면학습이 제한됨. 현장에서 기초교육부터 반복 지속하되 노노케어(노인이 다른 노인을 돕는 일)를 통해 일대일 눈높이 교육이 필요함. 더욱이 교육이 필수이나 무작정 노인세대에 '쫓아오라'는 일 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공감이 중요함. 오프라인에 익숙한 부모세대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족애로의 교육이 최선임을 조언함.

〈표 3〉 심층면접 조사대상자 프로필

대상자	성별	소 속	대상자	성별	소 속
1	남	기술연구소 연구교수	6	남	경로당 관리자
2	남	디지털기기 교육 기업 대표	7	남	70대 고령층
3	여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8	여	70대 고령층
4	여	지자체 디지털배움터 담당자	9	여	시부모님(80대) 케어
5	여	신경정신과 전문의	10	남	70대 경로당 회장

2.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조사 이전에 스마트경로당 인식의 예비조사 결과, 스마트경로당의 긍정적 측면도 높게 인지한 반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고령층의 소외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고비용 대비 비효율성이 제기됨. 특히 고령층은 시각, 청각, 감각 인식능력이 저하됨으로 디지털 기기의 모듈 소형화, 세심한 조작, 복잡하고 과다한 정보량 등으로 직접적 사용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현 정부의 ‘약자중심’ 복지를 위해 노인 복지 예산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나,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비중 축소와 절대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인당 조세 부담으로 현실적인 재원 확대규모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중앙일보, 2022). 우리나라는 (지역별 대동소이하나) 1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약 30여명의 독거노인을 케어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방문 케어가 축소됨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움. 더욱이 스마트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소멸고위험지역의 지원 공백 완화를 위해 현실적인 비용 구조의 복지제도를 고려하여 정책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령층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체지방 증가 및 근육량 감소 등의 생리적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이환되어, 신체적 불편과 심리적 부담감은 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킴.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만성질환율은 89.5%로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가지며, 14.9%는 기능상의 제한 즉,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60세 이상 노인 중 6.9%,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3%가 허약노인에 해당되며 허약노인 24.8%가 한 개 이상 일상수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이처럼 허약하기 쉬운 노인은 신체적 불편 및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 및 응급 발생 시 주도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는 독립성 상실과 우울감 증가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하며, 결국 절망감으로 자살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노인성 우울증을 단순 기억력 저하의 일환으로 여겨 사회적 인식이 낮고 정신건강 질환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에게 가장 부담 주는 10가지 질환 중 3위가 우울증이었으며, 2030년에는 우울증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우울증은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울 증상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필히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함. 그러나 노인성 우울증을 간과하는 독거노인의 증가,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만성질환과 합병증 관리는 물론 생활습관과 건강의식이 변화되어 자발적인 건강상태 파악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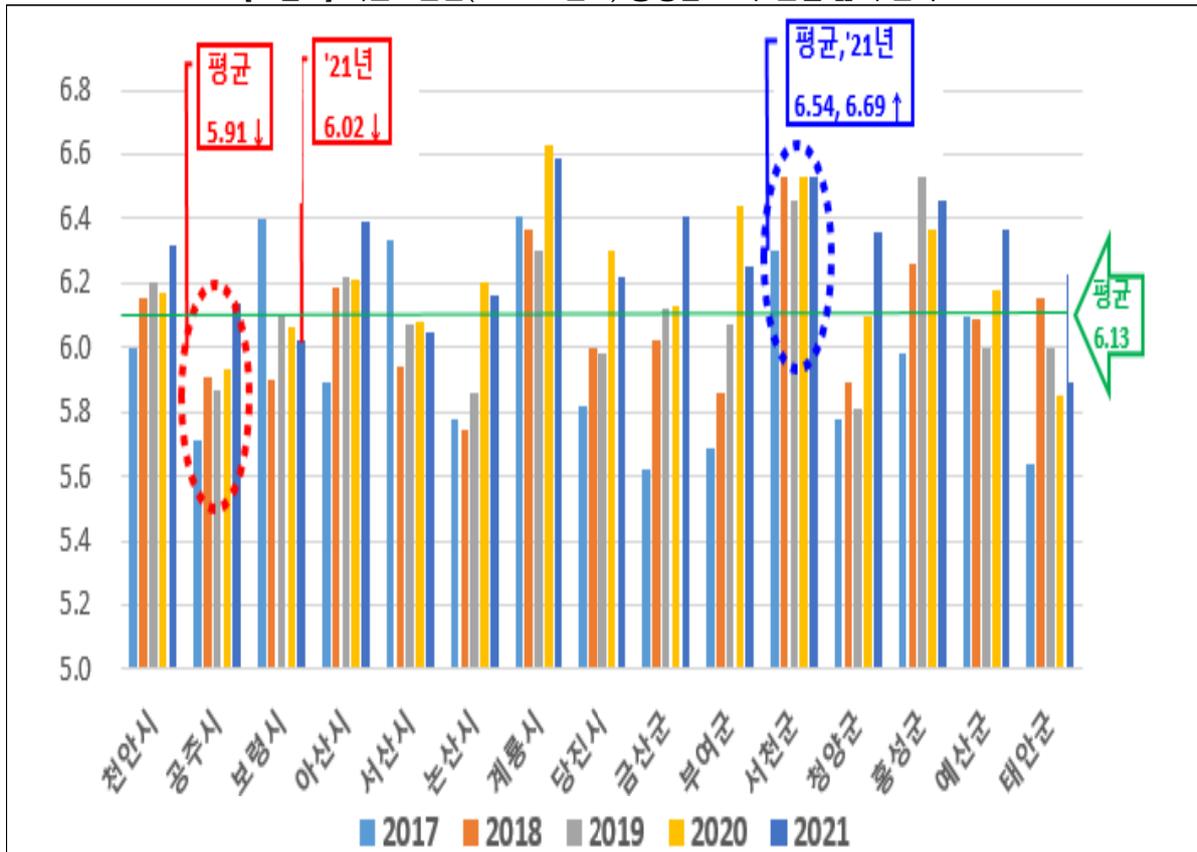
- 특히 우울증이나 심리적 고립감이 클 때,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에 소극적이며 진료를 기피함으로써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의 자발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은 매우 중요함. 적극적인 신체활동은 만성질환 진행도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이용 재가노인 대상으로 규칙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만성질환 진행도 저하, 체력수준 향상과 심폐기능의 향상, 혈압과 혈당의 개선, 근력의 증가, 수면 습관 개선, 불안, 우울증상 및 절망감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치유 및 회복으로 고령층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상과 같이, 초고령 1인가구의 사회적 고독과 우울증 진단 및 정신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며 읍면동 마을단위의 자구적 노력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에게도 충분한 복지가 지원되도록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전환이 절실함.
- 이에, 스마트경로당의 고비용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되, 저렴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마트 돌봄-건강프로그램 ‘편편(fun-fun)한 건강 경로당’ 도입, 자발적 운영이 지속화되도록 간단하고 재미있는 시스템과 콘텐츠, 맞춤형의 단순반복교육이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노인 복지서비스의 제고로 인한 돌봄 신(新) 시장을 창출과 경로당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지능형(스마트) 기기와 정보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임

3. 본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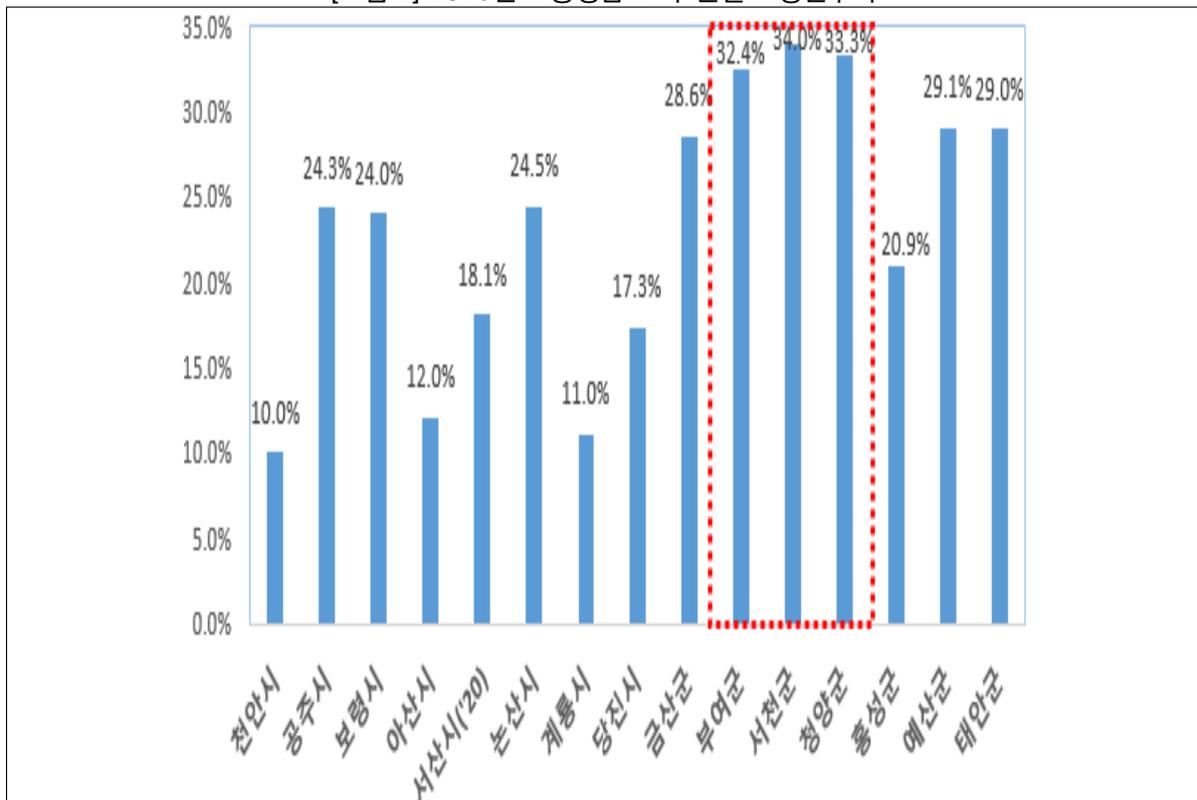
1) 표본 설계

-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소멸위험지수, 고령인구비 및 삶의 만족도지수를 토대로 충청남도 공주시와 서천군을 선정하였음.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와 서천군지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경로당 2곳에서 2022년 11월부터 약 1개월간 스마트 돌봄·건강프로그램 ‘펀펀(fun-fun)한 건강 경로당’ 실태조사를 진행함.
- 우선 11월 7일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주공4차 경로당에서 70대 이상 고령층의 여성 20명, 남성30명 대상 조사를 시행하며 해당 지역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스마트섬기미로 교육·배치하여 어르신과 젊은 세대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함.
- 지자체 중 충청남도를 선정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20년 대비’ 22년 3월 신규소멸위험 진입 기초지자체 수 조사결과, 11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은 충남 서산(0.492)이 2순위로 조사, ’21년도 충청남도의 소멸지수는 천안시를 제외하고 소멸위험지역 7곳, 소멸고위험지역이 3곳으로 집계(한국고용정보원, 2022a;2022b)되어 소멸위험성이 높음.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국회미래연구원, 2021ab) 결과, 17개 지역 중 ‘5년 전 삶의 만족도’는 충남(5.81)이 가장 낮게 평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는 경북(5.90), 강원(6.25), 충남(6.27)순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한편, 충청남도 시·군별 소멸지수는 서천군(0.15)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조사되었고, 2019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인구비 또한 서천군(34.0%)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음. 최근 5년간(’17년도~’21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삶의 만족도는 공주시(mean: 5.91)가 가장 낮게 평가된 반면, 5년간 삶의 만족도와 ’21년도 기준 삶의 만족도 모두 서천군이 가장 높게 나타남(mean: 6.54, 6.69).

[그림 1] 최근 5년간('17~'21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삶의 만족도



[그림 2] 2019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인구비



*통계청 「충청남도 사회통합」 데이터 토대로 정리함.

고령인구비는 충청남도 15시군 중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의 '20년도 데이터가 미기재 되어 '19년도 기준으로 분석함.

2) 분석방법

- 본 조사에서는 스마트 돌봄-건강프로그램 ‘펀펀(fun-fun)한 건강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및 관찰조사, 얼굴인식 생체 측정 시스템, 어휘 기반 노인감성 모델링을 병행함으로 검증함.
변수추출은 스마트경로당에 관한 연구가 현재 전무하여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문항을 본 과제에 적합토록 수정 및 보완하여 1차 설문지를 구성함. 전공분야 교수와 전문가에게 문항 구성에 관한 의견 수렴하여 2차 수정 및 보완 작업 후, 고령층 어르신 대상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3차 수정 및 보완 작업으로 설문지를 최종 완성함.
 - AI 얼굴인식 생체 측정 시스템은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노인의 얼굴데이터를 저장하고 혈압계 연동을 통한 경로당 출입부터 퇴실까지의 체온 및 혈압을 측정하여 저장하는 시스템을 사용함. 얼굴인식 온도체크 시스템과 검증받은 인바디의 생체 측정 시스템을 결합하여 최소 오차의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 및 저장함.
 - 어휘 기반 노인감성 모델링은 먼저 Life Logging 어휘 기반의 노인 어휘를 수집함. Social Life Logging 환경에서 발현되는 노인 사회감성을 분석하고, ‘사회감성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표현된 다량의 일상적 노인 사회감성 어휘 데이터를 수집함 (선행연구에서 1차 및 2차 어휘 분석 대상 총 24개 선정, 최근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업데이트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 다음으로 문헌기반 어휘 수집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일반 어휘 및 감성 어휘 자료 수집함으로써, 어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함.
- ① 일반 어휘 수집
 - 국립국어원 어휘 데이터 수집
 - 말뭉치 어휘 연구 관련하여 총 65,535개 어휘를 수집하였으며, 형용사 2,754개, 동사 10,338개, 명사 46,128개 등으로 구성됨
 - 국어학의 형용사 연구 기반 형용사 수집
 - 문헌 상 명시된 총 2,926개의 어휘 개수 중 수집 가능한 877개 어휘 수집함
 - ② 노인 사회 감성 어휘 수집
 - 노인 사회 감성의 과학 연구 기반 어휘 수집
 - 공감 감성 어휘 체계화 연구의 총 1,646개의 형용사 데이터 수집
 - 사회감성 연구 기반 어휘 91개 수집
 - 감정단어 범주화 연구 기반 감정표현단어 504개 수집
 - 심리학 연구 기반 감정단어 434개 수집

[그림 3] 혈압계 연동 TC-FT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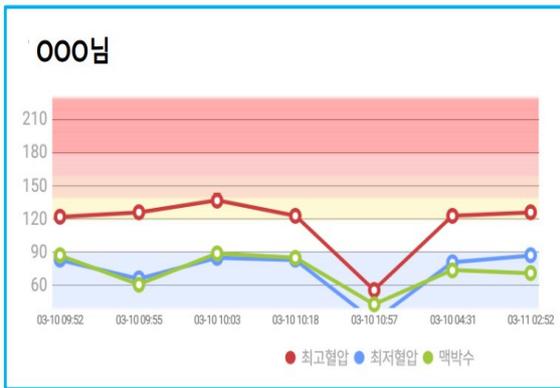
[그림 4] 사용자 데이터 UI/UX



[WEB UI]

측정 정보 표출 및 저장

[그림 5] 단말기 UI 최근 측정 정보 표출



[그림 6] 측정 자료 통계



[그림7] 노인 사회 감성 어휘 Mapping Process



○ 노인의 건강정보 정량적(생체 신호) 측정 및 분석 방법

- 총 50명의 노인 대상으로 혈압계를 체험하기 전 2분 동안 쉬면서 안정적인 심박 데이터를 확보 하도록 함. 측정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의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여 이동성 노이즈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용함.
- 측정된 데이터는 Labview 2013 (National Instrument)을 사용하여 그림의 순서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자함. 먼저 피크 검출기(Peak dete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심박의 최대 정점을 검출하고, 최대 정점의 발생된 시점들의 간격을 계산하는 PPI(Peak-to-peak Interval)를 추출하도록함. 종속변수인 BPM은 수식 1을 통해 계산하며, 수식 1에서 X는 PPI값으로 피험자들의 심박 변화에 따라 Peak 개수가 달라짐.

$$BPM = 60 / \frac{1}{N} \sum_{k=1}^N X_k \quad (\text{식 1})$$

- 두 번째 종속변수인 SDNN는 수식2를 사용하여 추출하며, X는 PPI 값이고 m은 윈도우사이즈 만큼에 평균 PPI값임.

$$SDNN = \sqrt{\frac{1}{N} \sum_{k=1}^N (X_k - m)^2} \quad (\text{식 2})$$

- PPI 값에 시간 축 데이터가 없으므로 2Hz로 리샘플링을 수행하며 그리고 PRV(Pulse rate variability)를 계산하고자함.
- VLF, LF, 그리고 HF의 Power 값은 각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의 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며 VLF 주파수 영역은 0.0033Hz~0.04Hz, LF 주파수 영역은 0.04Hz~0.15Hz, HF는 0.15Hz~0.4Hz를 사용하고자함 추출 변수인 VLF(%), LF(%), HF(%)를 사용하고자하며 VLF(%)는 수식 3으로 계산하였고, 각 변수들의 주파수 영역은 Power 영역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함.

$$VLF(\%) = \frac{VLF \text{ Power}}{VLF \text{ Power} + LF \text{ Power} + HF \text{ Power}} * 100 \quad (\text{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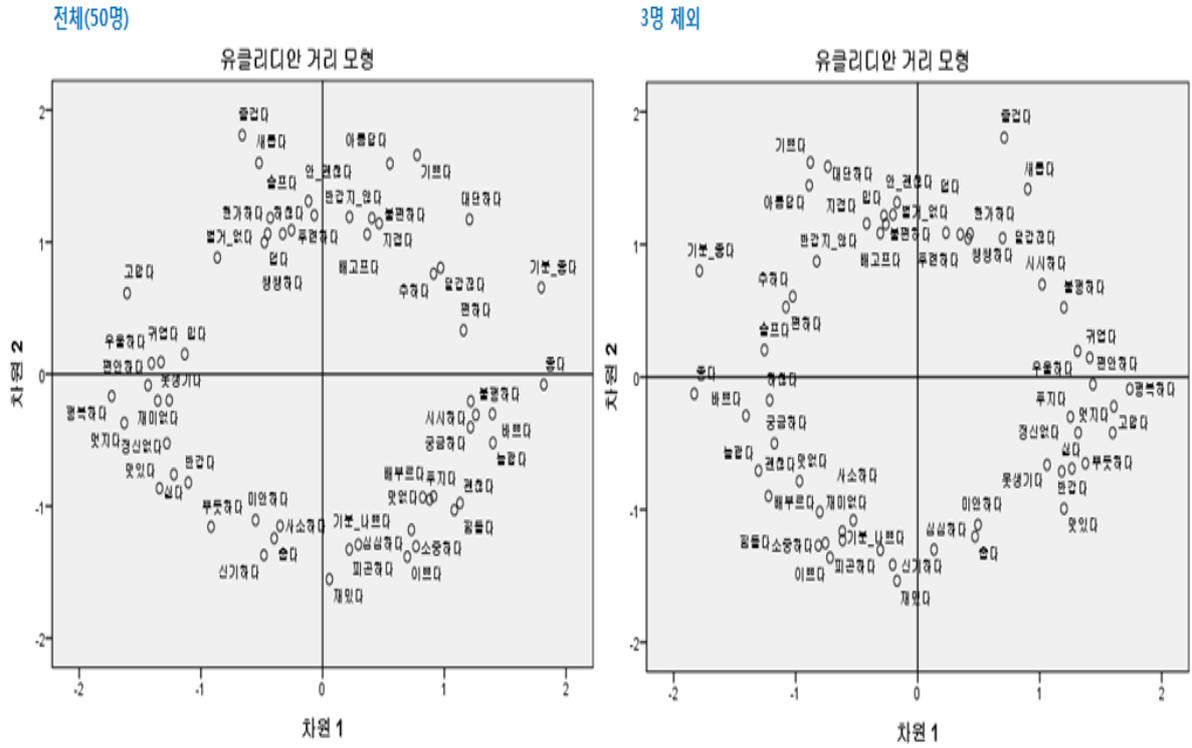
- LF(%)는 수식 4를 사용하여 추출하며, LF Power 양을 전체 Power양으로 나누어 계산함.

$$LF(\%) = \frac{LF \text{ Power}}{VLF \text{ Power} + LF \text{ Power} + HF \text{ Power}} * 100 \quad (\text{식 4})$$

- HF(%)는 수식 5를 사용하여 추출하며 HF Power양을 전체 Power양으로 나누어 계산함.

$$HF(\%) = \frac{HF \text{ Power}}{VLF \text{ Power} + LF \text{ Power} + HF \text{ Power}} * 100 \quad (\text{식 5})$$

[그림 8] 노인 대상 다차원척도 분석



III.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방소멸 및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심리적 외로움 해소 및 건강증진, 봉사자 및 민관 네트워크 효율성, 특히 노인부양비용을 절감하고자 AI, ICT, IoT 기반의 스마트돌봄은 필수불가결한 당면과제임.
 - ‘저점형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 단편일률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별·마을별 고유성과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 돌봄-의료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단지 운영의 초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제고됨.
 - 고령인구비 및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타 지역으로 확장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경로당 & 행정 & 지역사회 민·관·협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버넌스 파트너십의 업무 효율성 및 공동체 결속을 강화함.
 -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실버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나는 마을’로 회복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전환됨을 확신함.

[그림 9] 초고령사회 균등한 삶 보장 위한 스마트케어 시범연구의 목적 및 기대 효과



- 스마트 돌봄건강프로그램의 ‘편편(fun-fun)한 건강 경로당’은 ‘AI 얼굴인식 생체 측정 시스템’을 통해 고령층의 얼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증하여 혈압계 연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함.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쉽고 간단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발적 지속적으로 즐겁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상대적) 저렴한 가격의 효율성 높은 시스템 여부를 증명하고자 함.
- ‘노인의 생체신호 측정’을 통한 심박수 확인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건강을 결정짓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 요소의 조합에 따른 건강모델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신호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함.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021년 디지털 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3월 24일자.
- 국토연구원(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WP 22-06.
- 국회미래연구원(2021a).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1-22호, 12월31일자.
- _____ (2021b).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심층분석 보고서」. 21-23호, 12월31일자.
- 국회입법조사처(2022).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 「2022년 사회문화조사실장기과제 보고서 III」, 제1963호, 6. 16.
- 김신영(2006).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결정요인연구. 노인복지연구, 32, 99-117.
- 김정숙·최선미(2019).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1), 185-220
- 문진영·장익현(2021). 여성노인 1인가구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이 복지서비스 인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4(2), 31-54.
- 미래연구포커스(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 「FUTURE HORIZON」, 09, 13-18.
- 중앙일보(2022). 65세 노인 기준 연령, 점진적으로 올려야. 10월18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935>
- 통계청(2021). 주요연령계층별 추계인구 <https://kosis.kr/>
- _____ (2022). 장래인구추계
- 한국고용정보원(2022a).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4월 29일자.
- _____ (2022b). 노인 돌봄 노동시장 현황과 전망. 7월 14일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 ③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개발 연구
: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재경** / 공동연구자 **김호진**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개발 연구 [중간보고 자료]

-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재경 / 공동연구자 김호진

■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p>01 도시형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필요</p> <p>02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공동주택 중심의 새로운 마을기업 사업모델 제안</p> <p>03 생활권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공동주택형 마을기업</p>
2. 연구의 내용	<p>01 연구질문</p> <p>① 공동주택단지 내 서로돌봄 현황은 어떠한가?</p> <p>② 공동주택단지 내 서로돌봄 사업화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p> <p>③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선행요건은 무엇인가?</p> <p>02 연구대상</p> <p>서로돌봄을 주제로 하는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각 1개소</p> <p>① 마을기업 (※새벽수라상 - 어르신 돌봄 성서보성화성타운아파트</p> <p>② 공동주택 주민모임 옥포오픈 - 아동 돌봄 대구옥포11천년나무3단지아파트</p> <p>03 연구방법 :</p> <p>①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 연구(마을기업, 주민모임 대상)</p> <p>②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사업기획, 조직설립 지원과정 연구(주민모임 대상)</p> <p>05 연구기간 : 2022년 9~11월</p>
3.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01 살던 곳에서의 사회적 돌봄을 이끄는 공동주택 기반 마을기업 모델 발굴</p> <p>02 전국 단위로 확장 가능한 도시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발굴</p> <p>03 마을기업을 통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p>
4. 연구경과	<p>10.04. 2022 「도전 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 선정</p> <p>10.06. 사례연구 대상 기업 및 주민모임 확정 : (※새벽수라상, 옥포오픈</p> <p>10.11. 주민모임 워크숍(퍼실리테이션) 진행 : 옥포오픈 이해관계자</p> <p>10.20. 기창업 마을기업 사례 인터뷰 1회차 : (※새벽수라상 대표자</p> <p>10.26. 중간보고회 자료 제출</p>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연구경과]

I. 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형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필요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공동의 필요를 해결하는 사업체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을 일반적인 마을기업의 사업모델이다.
- 서울·부산·대구 등 도시지역 마을기업은 평균 약 65개소, 경기·강원·충남 등 농촌지역 마을기업은 평균 130개소로 농촌지역 마을기업의 발굴이 도시지역의 2배에 이른다.
- 인구밀도가 15,699(명/km)인 서울은 101개소 마을기업이 운영 중인데 반해, 인구밀도가 144(명/km)인 전남은 189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으로, 가까운 거리의 협력 가능한 주민의 숫자가 적은 지역에 오히려 많은 마을기업이 운영 되고 있다.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농촌지역에 적용하기 쉬운 사업모델은 다양하게 개발 되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의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하면서 산재한 다양한 삶의 문제해결과 접목한 사업모델은 개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농촌과 달리 물적자원의 한계는 있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도시지역에서의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도시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공동주택 중심의 새로운 마을기업 사업모델 제안

- 한국 인구의 51.5%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광역대도시인 대구인구의 59.2%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2020 인구주택총조사, 2021 대구시 주택통계연감).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주민”은 이미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개인의 필요를 해결하는 경험이 내제되어 있다.
- 공간적, 물질적 자산의 공유를 바탕으로 생활 상의 공동의 필요를 사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마을기업은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1,69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20년에는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마을기업이 대구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마을기업인 (주)새벽수라상은 1994년 건립되어진 성서보성화성타운(약 1,000세대)을 활동거점으로 삼고 설립된 마을기업이다. 단지 내 1인 독거노인가구가 늘어나자 주민들이 반찬 봉사단을 조직해 안부를 묻다가, 반찬 정기배송을 주사업으로 하는 마을기업을

설립한 것이다. 이 마을기업은 새벽에는 반찬배달로 수익활동을, 낮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독거노인들의 돌봄에 힘쓰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통장, 선거관리위원, 입주민 등이 마을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

- (주)새벽수라상을 기점으로 먹거리라는 공동의 필요를 사업화하여, 우리사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독사'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이 비로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 지역주민들이 집적해 살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먹거리, 교육, 돌봄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특정 공간 내에서 공동으로 생산·소비 할 수 있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 들이 사업화될 수 있다.
- 또한 공동의 필요부터 사업화모델까지 공동주택형 마을기업은 사업모델의 벤치마킹을 통한 확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 거주한다는 특성이자 강점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지는 사업모델은 거주환경과 조건이 유사한 규모의 단지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도시지역 마을기업의 돌봄사업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 (참조) 공동주택기반 사업모델 예시

환경친화형	돌봄서비스형	교육·체험서비스형
		
<p>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제품 제작,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서로 교환·판매하는 아나바다장터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p>	<p>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아이를 위해 공동주택 이웃이 시간제·종일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p>	<p>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이 가르치고 주민이 배우는 교육·체험서비스사업</p>
공동구매형	건강먹거리형	공유공간활용형
		
<p>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좋은 품질의 먹거리,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사업</p>	<p>공동주택 단지 내 맞벌이, 1인 가구를 위해 건강한 반찬,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업</p>	<p>공동주택 단지 내 유희공간,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텃밭, 마을 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p>

3)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이드북(2020)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돌봄 등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를 선 비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9년차 아파트인 성서보성화성타운의 주민들은 살던 곳에서 함께 건강하게 공동체로서 늙어가기 위해 마을기업 (주)새벽수라상을 설립 운영했다. 반찬 봉사를 넘어 고독사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조직이 된 것이다.
- 오랫동안 거주해온 아파트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비단 노인계층만의 이슈는 아니다. 아이돌봄 이슈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다. 10년 차 마을기업인 '협동조합 동지'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육아를 위해 설립되었고, 발달장애인부모가 설립한 '행복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녀돌봄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공동일터를 만들고자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서로 돌보며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특히 아동과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4) 공동주택형(APT) 마을기업에 맞는 제도 개선안 도출

- 공동주택(APT)은 지역공동체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민들간의 폐쇄성, 단절성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럼에도 아파트는 다른 공간보다 거주민의 공동의 필요를 발굴하기 쉬운 공간이다. 최근들어 복지안전망의 차원에서 일인가구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고독사 등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문제당사자들의 시선 및 활동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마을기업의 특성은 타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성에 있다. 기존에 시장성이 없으면 제공받지 못했던 상품과 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선이 닿지 못한 부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사자들 스스로 힘을 모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동체이익을 우선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간주된다
- 본 연구는 공동주택(APT)단지에서 '돌봄'을 이슈로 당사자들이 직접 마을기업을 설립한, 혹은 설립하고자 하는 2곳을 선정, 지역의 특성과 문제해결의 현실적 조건에 부합하는 마을기업 육성 모델을 구상, 이후 공동주택(APT)지역의 마을기업 활성화 추진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연구질문

- ① 공동주택단지 내 서로돌봄 현황은 어떠한가?
- ② 공동주택단지 내 서로돌봄 사업화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성의 요소는 무엇인가?
- ③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선행요건은 무엇인가?
- ④ 공동주택형 마을기업이 공동주택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⑤ 공동주택형 마을기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돌봄을 주제로 하는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각 1개소

- ① 기창업 마을기업 (주)새벽수라상 - 노인 돌봄
- ② 창업 준비 공동주택 주민모임 옥포오픈 - 아동 돌봄

3) 연구방법 사례 연구(관계자 심층인터뷰)

4) 자료수집 방법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5) 연구기간 2022년 10~11월

6)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사례분석틀

분석관점		분석대상		방향
공동주택 주민관점	→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기창업, 예비창업)	→	서로돌봄 수요에 대한 공동사업, 조직화 필요성 측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점	→		→	확산 가능한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모델 발굴
행정관점	→		→	공동주택 단지 내 서로돌봄 사업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정책적 지원 개발

II. 연구경과

1-1. 사례연구 대상 선정 : 기존 마을기업

1) 대상개요

- 마을기업명 : 주식회사 새벽수라상
- 대상 공동주택 단지명 : 성서보성화성타운,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99
- 설립일 : 2019년 10월 11일
- 마을기업 지정일 : 2020년 2월 6일
- 마을기업 회원 : 14명(동대표, 선관위원, 통장, 관리직원,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 설립목적 : 공동주택 단지 내 어르신 돌봄문제 해결 ‘반찬을 통해 꿈꾸는 고독사 없는 세상 만들기’
- 주요사업 :
 - ① 새벽 반찬 제조
 - 고독사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제공할 ‘이웃 공동체의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새벽반찬제조
 - ② 새벽반찬 배달 및 고독사 세대 방문
 - 고독사를 예방하는 특급 지킴이역할을 하는 배달수행
 - 마을기업의 시설과 수익금을 활용해 구성원들이 밑반찬을 만들어 고독사 세대 방문
 - ③ 고독사예방센터 개소 및 고독사 버스터즈 운영예정
 - 주민투표를 통해 고독사 위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 개소(2022)
 - 물 사용, 전기사용 등을 점검하여 고독사 위기에 놓인 이들을 직접 돌봄으로써 고독사 해결
- 선정사유 : 대구광역시 소재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마을기업

2) 심층인터뷰 대상 선정

No.	소속	대상자	직책	비고
01	(주)새벽수라상	이00	대표	
02	(주)새벽수라상	최00	이사	
03	(주)새벽수라상	윤00	회원	

1-2. 사례연구 대상 선정 : 공동주택 주민모임

- 모임명 : 옥포오피스
- 대상 공동주택 단지명 : 옥포LH천년나무3단지 대구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2길 15
- 설립일 : 2021년부터 활동, 2022년 8월 주민모임 정식 운영
- 회원 : 10명(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2~6세 아동의 부모)
- 설립목적 : 문화적으로 소외된 옥포 공동주택 단지 아이돌봄 필요 해결
- 예정사업 :
 - ① 주민참여형 체험 북카페
 - 달성군 옥포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한 아동대상 문화공간 운영
 - ※ 현재 예정사업은 가안으로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 컨설팅 과정 진행 중
- 선정사유 및 방법
 - ① 모집방법 :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주민모임을 공개 모집
 - ② 선정사유 : 이미 공동주택내에서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부합

2) 심층인터뷰 대상 선정

No.	소속	대상자	직책	비고
01	옥포오피스	이00	대표	
02	옥포오피스	김00	총무	
03	옥포오피스	김00	회계	
04	옥포오피스	성00	회원	
05	옥포오피스	유00	회원	

2. 기존 마을기업 기초 인터뷰 및 자료조사 | 주식회사 새벽수라상

1) (주)새벽수라상 개요

□ 공동주택명 : 보성화성타운(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99)

□ 세대수 : 1,240세대, 9개동

□ 준공 : 1994년 10월

□ 인터뷰 대상 : 이0울 대표

□ 특성 :

○ 공동주택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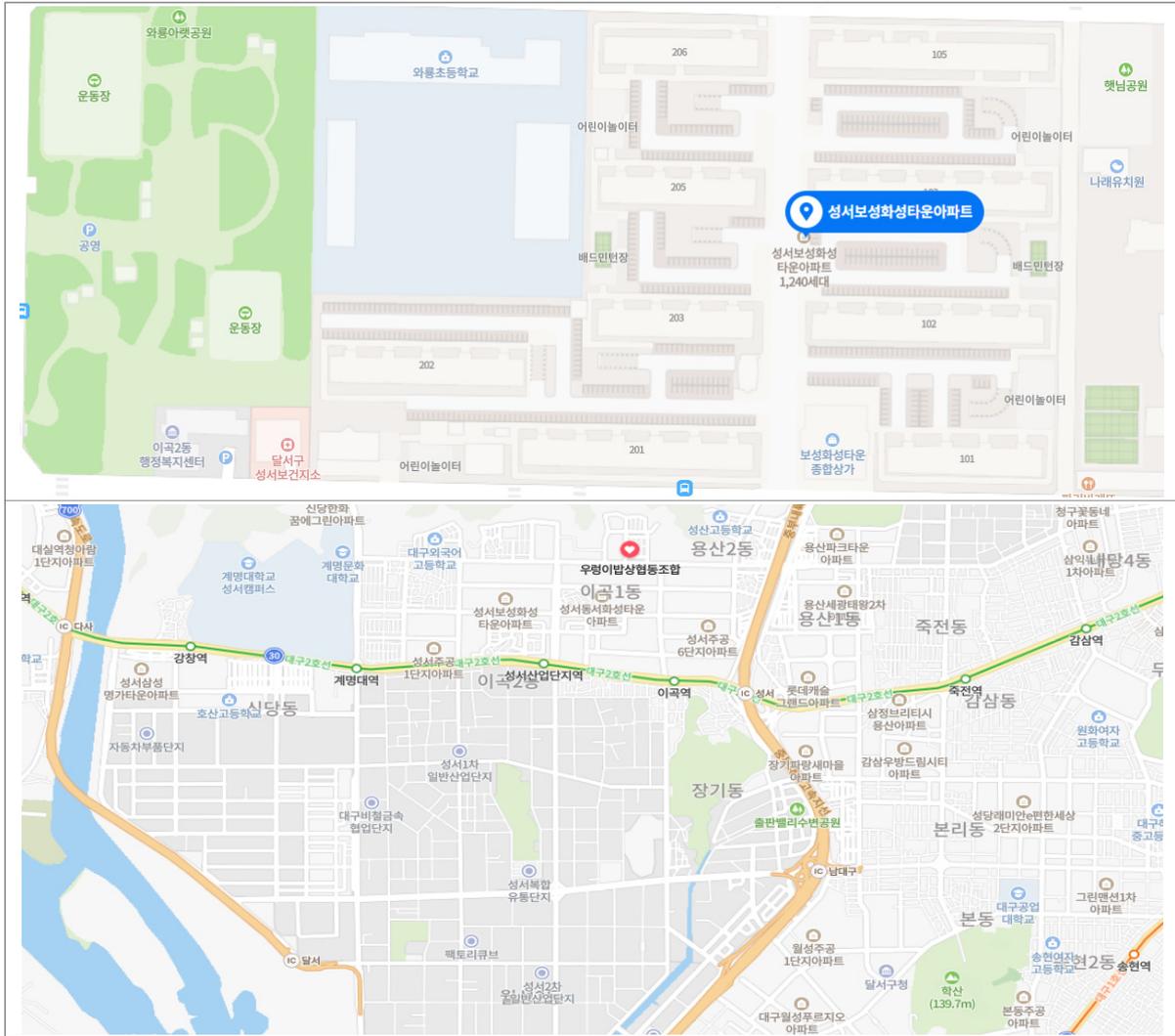
- 준공 25년차 1,240세대의 아파트단지로 24평 중심의 서민아파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세대(212세대)가 많음
- 대구달서구 성서산업단지와 함께 조성된 아파트 단지로 다문화 인구 거주
- 바로 인접한 성서동서서한타운, 성서한빛마을아파트, 성서동서 화성타운 등 4개 단지, 총 5,000세대 이상으로 동일한 사업모델 확장에 유리한 환경

○ 공동체 특성

- 한 단지내에서 노인이 노인을 돕는 공동체로 공동주택입주민과 아파트관리소직원이 합심해 주축이 되어 구성
- 돌봄의 대상에서 주체로의 참여를 통한 고독사예방

○ 경과

- 2019년 3월부터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
-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 동별대표자, 관리소장, 통장 등 약 30여명
- 2019년9월 입주민, 직원 대상으로 펀드조성
 - 14명으로부터 1,000만원의 설립자금 마련
- 2019년 10월16일 14명의 주주로 법인설립(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식회사로 설립)
- 2019년 12월 대구 TBC방송국의 사회적경제기업 오디션 “더 비기닝”출현 상금수여



○ 마을기업 개요

- 입주민, 동대표자, 관리소직원 등이 한마음으로 설립한 전국최초의 아파트내 마을기업
- ‘반찬을 통해 꿈꾸는 고독사 없는 세상’을 표방
-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고독사예방과 지역민의 지속적 소득창출과 소득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
- 주민리더들의 역량, 주민관계방, 관리사무소 등 사회자본의 적극 활용
- 시간나눔과 노동나눔의 원리로 일자리 창출하여 사회가치 실현
- 기존 시장과 공존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화
- 지역내 반찬시장과 경쟁하지 않으며 아파트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고독사 위기가정으로의 사업 확대
- 단기 8명, 정규직 1명으로 고용하고 최소한의 구조로 운영
- 공동주택내 근린시설 활용 고독사 예방센터 “쫓등 고독사 예방 및 커뮤니티 케어센터”개소 및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모델개발 증(반찬을 통한 교류, 텃밭 화분 분양 등 프로그램 운영)

- 공동주택 전산관리 프로그램 활용 고독사 예방 경보체계(수도 전기 데이터 활용) 개발 및 제안 중
- 코로나 이후 친환경 건강도시락 및 호텔 조식서비스
- 지역주차장 개방사업, 플리마켓, 어르신 방범단, 이곡2동 관내 독거노인 화분텃밭 분양사업, 아파트 축제 등 이웃사회 프로그램 운영

2) 인터뷰: 설립동기

- “이곡동은 인근에 성서공단이 위치한 1,240세대 전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212세대의 1인 가구와 118세대의 장애인가구를 비롯하여 많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대상가정, 차상위 계층 등 복지의 혜택과 소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역 내 순수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XPERP)과 같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와 오랜 기간 축적된 신뢰, 참여 같은 사회적 자본 등 관에서 활용 불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1인 가구 세대에 대해 파악하고 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주 1회 무료 반찬배달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마을기업 수익의 아파트 단지 환원을 준비 중입니다. 준공 29년차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2022년까지 승강기 교체 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수익 발생 시 각종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25%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인터뷰: 기업설립 및 사업모델 수립 과정

- (법인 구성) “총 14명의 마을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대표 4명, 선거관리위원 3명, 관리직원 3명, 총장 3명, 입주민 2명의 다양한 공동주택 내 이해관계자가 모여 설립했습니다.”
- (사업구성)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사업에 대해 고민했고, 기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해오던 반찬봉사활동 실력을 살려 새벽에만 판매하는 반찬가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밥 못먹는 주민들, 혼자사는 주민들을 위한 집밥 컨셉의 정기배송 반찬가게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점 성장하며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4) 인터뷰: 사업모델(현시점)

- (반찬가게) “반경 1km 내외의 공동주택 맞벌이 부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정기배송을 진행하는 반찬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 (도시락 납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의료진 대상 도시락 봉사를 시작했고, 이를 본 구의회에서 단체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이 후로부터 도시락 납품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호텔조식 납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예방센터) “적지만 늘어나고 있는 수익금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내 고독사예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고독사예방 서포터즈 양성과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단지 내 공간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했습니다.

5) 마을기업 설립 이후 공동주택 변화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기업이 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2020년 8월 성서보성화성타운 단지 꽃길조성사업 주관
 - 2021년 3월, 11월 성서보성화성타운꽃길조성사업 주관
 - 2021년 10월 30일 마을축제 소통과 화합 전 (주관)
 - 2021년 11월 6일 어울어 더불어 프리마켓 (후원)
-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 의료진 도시락 무상지원 400인분
 - 2020년 고독사 예방 반찬지원 월간 약 20세대
 - 2021년 고독사 예방 반찬지원 월간 약 30세대
 - 2021년 지역 소외계층 반찬지원 500인분 이상

6)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운영시 중요요소

-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공동주택 단지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만 마을기업으로서 활동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도 제가 소장으로 오기 전까지 여러 단체 간 갈등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 관련 법) “공동주택 단지 내부에 아무리 좋은 빈 공간이 있어도 마을기업의 수익활동을 위한 사업장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새벽수라상이 운영되고 있는 공간은 아파트 상가를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와 떨어지지 않으면서 상행위가 가능한 곳으로 찾을 것입니다. 고독사예방센터처럼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활용할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마을기업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변상권과의 충돌) “우리와 유사한 아파트 단지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로 인해 4,0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반찬가게들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직접 매장을 내서 반찬을 팔았다면 반대가 심했을 것입니다. 단지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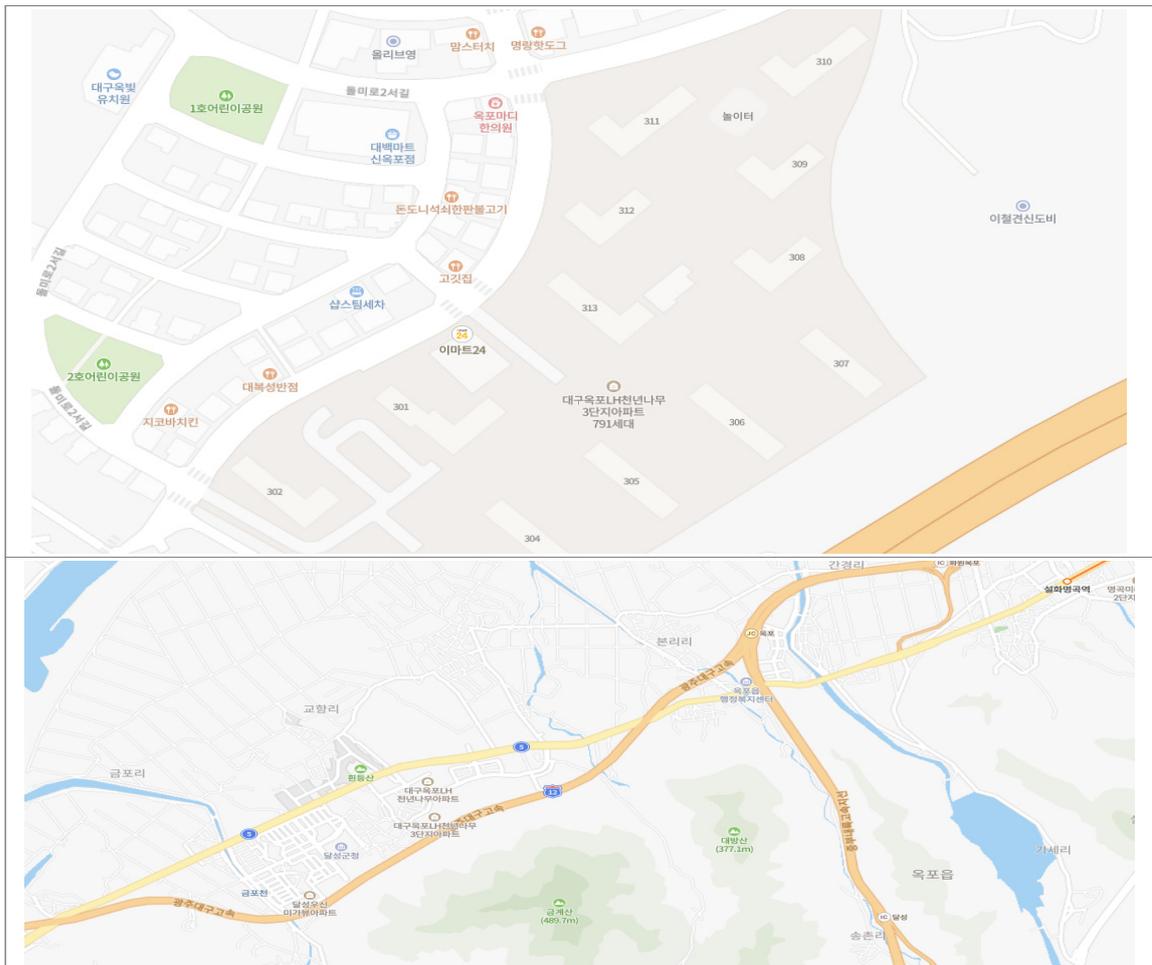
7) 시사점

- 명확한 지역의 사회문제의 인식과 사업모델의 구축
 - 고독사문제의 인식과 예방과 해결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반찬제조 및 배달을 문제해결에 활용연결
- 사회자본의 조직화
 - 주민과의 관계를 활용, 주민리더들의 경험과 관리사무소의 가용자원의 조직화
 -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개입의지, 실천의 결합
- 공동체 의식
 - 주민문제에 대한 공감대확산과 동참한 봉사정신을 가진 주민들, 그리고 지역 기존 시장과의 상생을 고민하면서 공동주택 외부의 고독사문제까지 확대
- 마을기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가능성
- 능동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2. 공동주택 주민모임 기초상담 및 워크숍 | 옥포오픈

1) 공동주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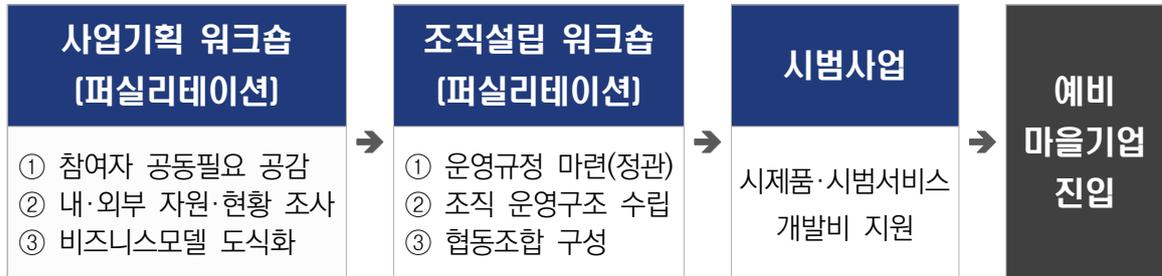
- 공동주택명 : 옥포1내천년나무3단지(대구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2길 15)
- 세대수 : 791세대, 13개동
- 준공 : 2016년 3월
- 인터뷰 대상 : 주민모임 8명
- 특성 :
 - 4~6년 된 아파트 7개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옥포 신도심으로 젊은 부부 대다수 거주
 - 대구시내와 현풍테크노폴리스 사이에 위치하여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는 지역 이미지
 - 신도심으로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생활문화 교육시설 및 주거환경의 미비로, 자차가 없는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문화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의 자기성장욕구 및 미비한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욕구가 큼



2)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기획 및 조직설립 퍼실리테이션

□ 주민모임 역량강화 사업구조

○ 주민모임 역량강화 사업 추진과정(퍼실리테이션 방식)



○ 본 연구 연계사항

- ‘사업기획’, ‘조직설립’ 단계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모임의 설립동기, 가용자원, 돌봄현황, 사업화 요건, 사업모델안 등을 확인

□ 사업기획 워크숍 1회차

- 일시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10:00~13:00
- 장소 : 옥포LH천년나무3단지 커뮤니티룸
- 참석자 : 옥오포튼 주민모임 구성원 5명
- 내용 : 참여자별 생각과 공동필요에 대한 공감

주 제	내 용
퍼실리테이션이란? (Facilitation)	- 협동하는 인간관 마인드 셋 집단지성을 통한 의사결정 방법론 배우기, 사람을 통해 배우기, 경험을 통해 배우기, 실패를 통해 배우기
Who am I	-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가? -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가?
비전하우스 작성	- 옥오오픈 미션, 비전 설정 - 핵심가치, 핵심역량 확인
소감나누기	- 소감 나누기 - 다음 일정 안내

○ 진행사진



○ 주요기록

- 참여동기 :

- ① 주민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동네(옥포) 환경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개선할 수 없겠지만 함께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면 될 것 같다.
- ② 엄마로만 너무 오래 살았다. 다들 가진 역량들이 있는데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엄마에게도 좋은 일이 되면 좋겠다.
- ③ 아직도 인근 상가에 공실이 많다. 발전은 되지 않았는데 임대료는 시내수준이다. 장사도 안 되는데 비싸니 가게가 더 안 들어온다. 아이들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다.

- 마을기업에 대한 기대 :

- ①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좋은 사업을 하면 좋겠다. 특히 공동육아를 통해서 젊은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 ② 엄마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들이다. 자활센터에서 몇 년을 일하고, 치위생사로 몇 년을 일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아이보는 것 외에 사회생활이 없다. 옥포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다. 마을기업을 만들면 엄마들에게도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③ 큰 기대가 있다기보다는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마을기업이 되면 나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옥포라는 곳에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학교 설립이 무산되면서 나간 사람들도 많다. 우리가 잘 되면 인구유출을 막는 역할도 일부 할 수 있지 않을까?

- 드러난 옥포의 특성 :

① 신도시로 대단지 아파트가 민간, 공공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새터민들을 위한 곳들도 많아서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주민모임 참여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고,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다.

② 중학교 설립 무산으로 인해 입주했다가 나간 사람들이 상당하다. 지금 모임에 참여하는 엄마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이사 갈 준비를 해야만 한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③ 회원까지는 문화센터 셔틀버스가 오고, 현풍은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옥포는 중간에서 어느 곳도 가지 못한다. 뚜벅이 엄마들은 아이들과 갈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Ⅲ. 향후 연구 계획 || 2022년 11월 진행

1. 사례조사

- 1) 기존기업 사례조사 : 대표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 심화 인터뷰 및 자료수집
- 2) 주민모임 사례조사 : 내부 워크숍 진행을 통한 인터뷰 및 자료수집

2. 자료분석

- 1)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사업모델 구성요인, 조직설립 구성요인 정리
- 2) 아동, 노인분야 마을기업 사업모델 정리(방향, 전략, 사업개발, 추진단계 등)

3. 결과작성

- 1)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 사례조사 질문구성안

1. 기초질문

- 요인과 항목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 필요(마을기업 4대 요건에 따른 재구성)

요인	항목
동기	1. 마을기업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혹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미션과비전	2. 마을기업의 목적, 운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설립과정	3. 마을기업 설립을 전 준비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사업모델	4. 마을기업의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비즈니스모델)
이해관계자구성	5. 마을기업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주적운영	6. 마을기업의 조직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역량	7. 마을기업의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미옥(2011), 진성희(2016)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질문재구성

2. 성공요인 질문

- 요인과 항목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 필요(마을기업 4대 요건에 따른 재구성)

요인	항목
전략적 요인	
마을기업가정신	
경영역량	
조직적요인	
사업환경적 요인	
사회적네트워크	

※ 김미옥(2011), 진성희(2016)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연구 질문재구성

3. 지원 및 제도개선 질문

- 공동주택형 마을기업 설립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요인	항목
설립단계	
신청단계	
운영단계	

■ 참고자료

- 김미옥(2011), 전남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질문 재구성
- 진성희(2016),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2020), 대구인구주택총조사
- 대구광역시(2021), 대구시주택통계연감
-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이드북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 ④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비교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태건 / 공동연구자 이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비교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태건 / 공동연구자 이 슬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어들었다(통계청, 2021).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예측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2009년 49.0%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1년 50.4%로 상승하였고 최근 4~5년간 그 상승폭이 두드러졌다(국토연구원, 2022). 국가 전체적인 인구축소 상황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까지 겹쳐 이증고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들은 실질적인 소멸위기에 마주하게 되었다. 세부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계층의 감소가 특히 우려된다. <표 1>은 지역 인구규모별 청년인구 증감률을 정리한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감소율과 비교하여 인구 5만 미만 군지역의 감소율이 무려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소년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나 지역 간 격차는 청년계층에서 압도적이었다. 청년들은 인구구조상 지방도시의 활력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다. 따라서 청년이탈은 지방도시가 우선 해결해야할 현안이며, 만일 이들 지역이 구심력을 회복하여 청년들의 귀환이 가시화되면 그것은 경제 활성화를 넘어 사회를 변혁하기 시작하는 징후가 될 것이다(엄창욱 외, 2018).

<표 1> 지역 인구규모별 청년인구 증감률(2011~2020)

단위: %

인구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	-0.7	-0.5	-0.6	-0.3	-0.1	-0.5	-0.4	-0.6	-1.2	-0.6
수도권 및 광역시도 내 인구 5만이상 50만 미만 중소도시	-1.6	-1.4	-1.2	-1.1	-0.9	-0.6	-0.7	-0.8	-1.1	-1.2	-1.1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중소도시	-2.6	-2.3	-2.0	-1.9	-1.5	-1.1	-1.5	-2.0	-2.8	-3.6	-2.1
인구 5만 미만 군지역	-3.7	-3.3	-3.1	-2.5	-1.9	-2.1	-2.8	-3.3	-4.5	-5.9	-3.3

출처: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통계청

주1: 청년계층은 19~39세, 주2: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재인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 청년의 지방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일자리 측면에서 농업 및 창업을 지원하거나 주거공간 마련을 보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청년 유입보다 그들의 자립과 정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전환이 아니라 과정이며, 현행 정책은 대체로 이주 후 영속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과정이라는 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일시적 거주가 아니라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요지라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반드시 주목해야할 요인이 된다. Tibout(1956)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 이론¹⁾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환경 여건이 주민의 이동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비수도권 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을 꼽았으며, 무려 연봉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비도시지역 청년들의 경우 체감하는 주거환경의 격차가 향후 주거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고, 결국 정주의사를 약화시켜 정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정 지역, 단지, 주택유형에 한하여(이지은·이정은, 2018; 이상욱 외, 2019; 손경민·진장익, 2020; 임준홍, 202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를 직접 고려하지 못하였고, 비도시지역 거주 청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주목한다.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첫 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를 비교하여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 둘째, 경제나 주거공간 중심의 시각을 확장하여 정주의사 측면에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적 사항을 도출한다는 점이다.

II. 문헌고찰

1. 근린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일반적 연구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정착 차원에서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 이성준(2014)과 서원석·박기덕(2020)은 다중회귀모형을, 김현민·신현주(2018)와 안용인(2019), 김주현·안용진(2020)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분석과 조절효과분석이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윤은영(2020)은 이웃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에, 전준형·박진아(2020)는 보행환경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분석대상을 세분화, 다각화하여 진행되었다. 윤소영(2021)은 고령자의 주거환경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김세정(2014)은 외국인에, 박효숙·이경환(2018)은 여성에, 권세연·박환용(2014)은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이어지는 ‘2.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거주지역이나 점유형태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서원석(2013)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정착만족도 형성과정을 파악하였고, 원재웅·이재수(2018)는 임대주택 유형별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주거환경만족도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육진·김태연(2020)과 박주현·이경환(2020)은 각각 건강, 범죄 두려움으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1)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수준, 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

범위를 넓혀, 근린 환경요소가 주민의 의식, 태도, 관계에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는 홍영화(2013)와 이경영·정문기(2019)의 연구가 있는데 각각 영역태도,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또 김수영 외(2017)는 삶의 만족도를 통하여 정주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지갑성(2020)은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여성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에 관한 연구

청년들이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큰 흐름은 앞선 내용과 유사하였다. 먼저, 손경민·진장익(2020), 임해린(2021), 서경택(2022), 안균섭·진은애(2022)는 전반적인 청년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모형, 사건연구방법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감안하여 청년 1인가구로 분석대상이 구체화되었다. 이현정·김모운(2019), 김선주(2020), 민충근(2021), 임준홍(2021)은 다중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권정표(2022), 권정표·강정규(2022)는 그중에서 임차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서 지역 및 주택유형에 기반을 둔 접근이 등장하였다. 권세연·박환용(2014), 권영수·최완호(2018), 진혜민(2021)은 각각 서울시, 관악구·동작구, 경상북도로 지역적 범위를 세분하였다. 정영광(2022)은 청년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모형에 투입되었던 기존 변수들 외에 임대료·관리비 수준과 시설 성능, 카셰어링을 비롯한 주거 지원서비스를 추가 투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민동환(2020)은 사회주택을 빈집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구분하여 개별 모형을 구축하였고, 신명철·이재수(2019)는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에서 유의미한 만족도 상승을 검증하였다. 만족도 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지은·이경은(2020)은 만족도가 정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욱 외(2019)는 이주와 이주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를 직접 반영하고 세부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거주 청년들을 비교하되, 요인별 만족도를 통해 연결되는 전반적 만족도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의 범위 및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계획 및 부동산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수행하는 면접조사로 가구특성 및 구성원특성 외에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환경만족도, 주거비용, 주거이동 경험 등을 포함한다(신명철·이재수, 2019). 마이크로데이터는 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원(raw)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년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현재 청년의 범위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령의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서울이 「청년기본법」을,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준용하고 있고 그 밖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별개로 각 부처는 추진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등은 각각 ‘39세 이하인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청년실업률과 청년패널조사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며,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거복지로드맵’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을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표 2〉 청년의 범위

구분	범위	비고	
법률	청년기본법	19~34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정책	고용노동부	18~34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창업성공패키지
	국토교통부	19~39세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청년 기본조례	서울	19~34세	「청년기본법」 준용
	부산	18~34세	
	인천, 대구, 광주	19~39세	
	대전	18~39세	
통계	울산, 세종	15~2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청년실업률, 청년패널조사	15~29세	기획재정부, 한국고용정보원
선행연구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15~39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34세	손경민·진장익(2020), 권정표(2022), 권정표·강정규(2022) 등
		19~39세	민총근(2021), 정영광(2022), 서경택(2022) 등

주: 민총근(2021)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2.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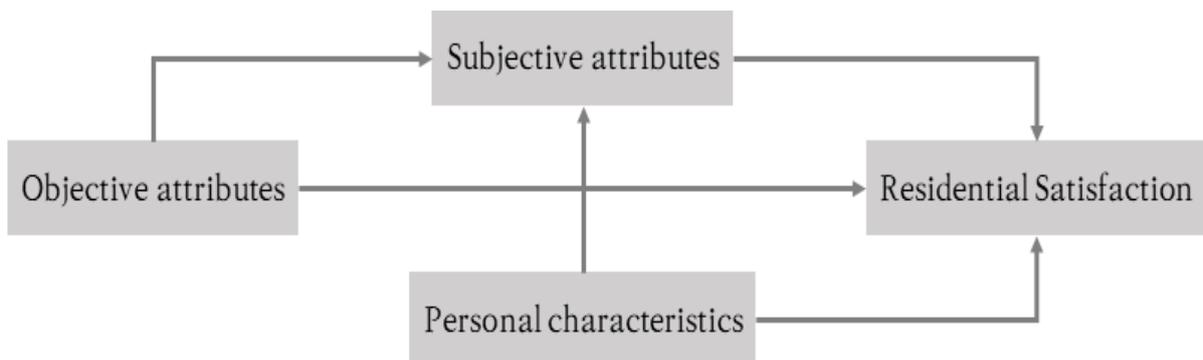
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실태 비교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 세부요소별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주택의 종류나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필요한 주거지원정책 및 정책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현황을 살펴본다.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들 방법론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모를 때 표본으로부터 측정된 분산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두 모집단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독립표본 T-검정은 범주형 독립변수와 연속형 종속변수의 관계를, 교차분석은 범주형 독립변수와 범주형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수단이며 귀무가설은 ‘양 집단의 평균/비율 분포에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양 집단의 평균/비율 분포에 차이가 있다.’로 설정한다.

2)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두 번째 단계는 실증모형을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Amérigo(1992)는 인지(cognitive), 정서(affective), 행동(behavioural)을 포함하여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Amérigo의 주거환경만족도 모형에 따르면, 주거환경의 객관적 속성(objective attributes)은 개인의 평가 과정을 거쳐 주관적 속성(subjective attributes)이 되며 이러한 주거환경의 객관적 속성과 주관적 속성은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지은·이경은, 2018). 또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은 객관적 속성이 주관적 속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본 연구는 Amérigo의 모형 중 일부를 활용(〈그림 1〉)하여 매개효과분석(mediation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매개효과모형은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직접 미치는 영향(직접 효과)과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 혹은 중개변수(intermediary variable)라고 불리는 변수(M)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모두 고려하는 모형이다. 청년들의 거주지역 유형이 주거환경만족도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요인별 만족도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그림 1] 분석의 개념적 틀(Amérigo의 주거환경만족도 모형 일부 활용)



앞선 분석의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각 변수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Objective attributes)는 비도시지역 여부이다. 국가통계 작성 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동(洞)부, 읍면(邑面)부로 구분하여 표본을 설계하고 결과를 집계·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읍면부인 경우 1, 동부인 경우 0으로 입력하여 독립변수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Residential Satisfaction)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이며 매개변수(Subjective attributes)는 세부요인별 주거환경만족도이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시 전반적 만족도 외에 <표 3>과 같은 여러 세부문항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세부 만족도는 그대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지 않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상호 연관된 문항군으로 분류한다. 설문상에서 세부문항의 영역을 공식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별문항의 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문항군을 지정하고 있다(민춘근, 2021; 권정표·강정규, 2022 등). 본 연구는 최근의 유사사례(구한민·김갑성, 2020)를 참고하여 편의성, 이동성, 환경성으로 세부요인을 구분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실증하였다. 요인분석은 문항 간 잠재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몇 가지 대표적인 문항군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자료의 차원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유사한 문항의 중복을 방지하고 결과해석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

〈표 3〉 주거실태조사 중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변수

구분	변수명	구분	변수명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6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1	편의성	7	교육환경
2		8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3		9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4		10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5	이동성	11	대기오염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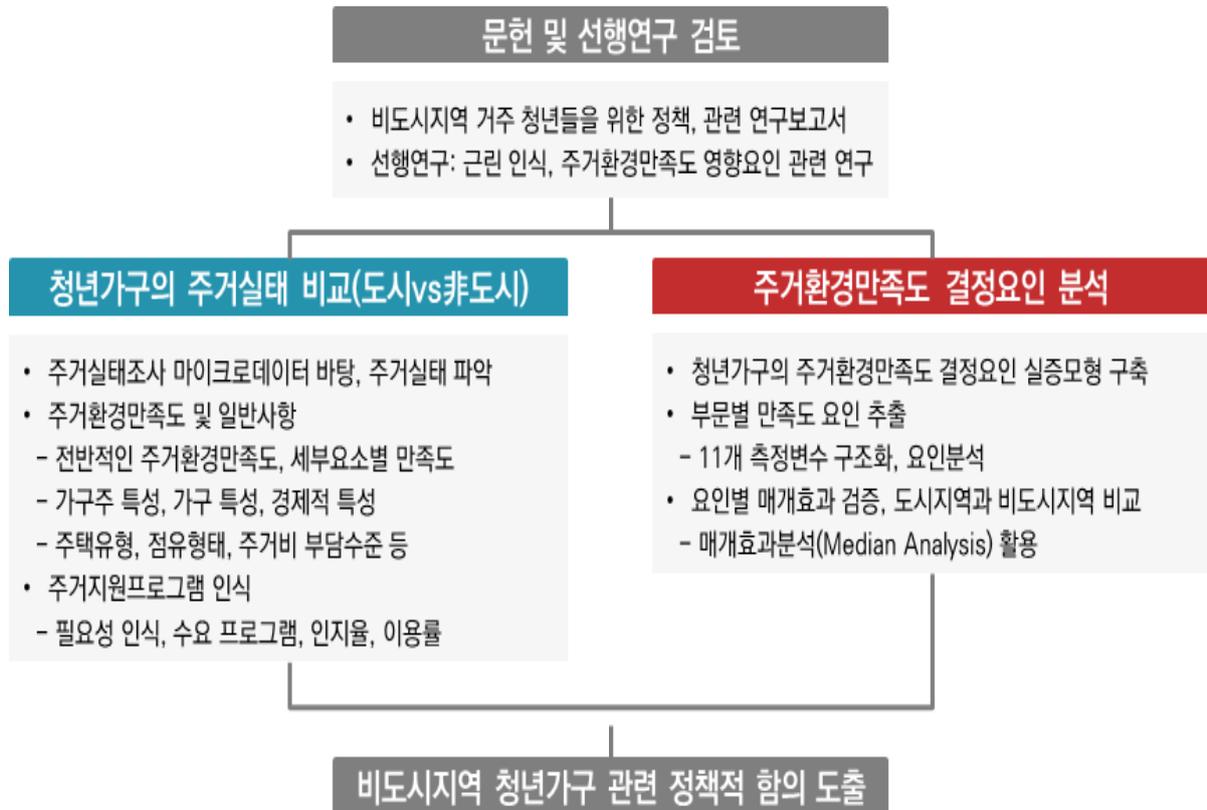
주1: 측정은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짐

마지막으로 통제변수(Personal characteristics)는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와 세부요인별 주거환경만족도 형성에 모두 관여하는 변수이며, 크게 가구주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특성으로 나누어 총 11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구주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로 구성된다. 연령은 전체 범위를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고,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입력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를 1로, 그 밖의 경우를 0으로 하였다. 이어서 경제적 특성은 월평균 소득과 자산, 주거비 부담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월평균 소득과 자산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총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며, 0은 자연로그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1로 변환하여 최종 변수값이 0이 되도록 하였다. 주거비 부담수준은 '전혀 부담되지 않음'부터 '매우 부담됨'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주거특성은 주택유형과 노후주택 여부, 소형주택 여부, 거주기간을 기간을 포함하는데 각각 아파트, 노후주택, 소형주택, 이주한지 2년 이내에 해당하면 1로 입력하였다. 노후주택과 소형주택 기준은 신명철·이재수(2019)에 따라 주택연한이 21년 이상인 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 보았다.

〈표 4〉 실증모형의 변수 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1 = '매우 불만족' ~ 4 = '매우 만족'	
독립변수	비도시지역 여부	0 = 도시지역, 1 = 비도시지역	
매개변수	환경성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	
	편의성		
	이동성		
통제변수	가구주 특성	연령	0 = 만 19~29세, 1 = 만 30~39세
		성별	0 = 남성, 1 = 여성
		교육수준	0 = 그 외, 1 = 대학교 졸업 이상
		가구원 수	총 가구원 수
	경제적 특성	월평균 소득	$\ln(\text{가구의 월평균 소득})$
		자산	$\ln(\text{가구의 총 자산})$
		주거비 부담수준	1 = '전혀 부담되지 않음' ~ 4 = '매우 부담됨'
	주거 특성	주택유형	0 = 그 외, 1 = 아파트
		노후주택 여부	0 = 그 외, 1 = 노후주택(주택연한 21년 이상)
		소형주택 여부	0 = 그 외, 1 =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거주기간		0 = 그 외, 1 = 현 거주지로 이주한지 2년 이내	

[그림 2] 연구의 흐름



IV. 분석결과

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실태 비교

1) 주거환경만족도 및 일반사항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 측정항목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유의수준 1%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는 도시지역에서 더 높았다. 세부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대중교통 접근용이성이 모두 도시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이용과 교통 측면에서 비도시지역 청년들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 자동차 경적 및 집주변의 소음 정도,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대기오염 정도를 포함하는 환경성과 쾌적성 측면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교육환경은 예외적이었다. 가구원 수에서는 비도시지역이 평균 2.56명으로 2.20명을 기록한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았고, 월평균 소득 또한 우위를 보였으나 자산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응답자가 언급한 주거비 부담수준은 임차비용 및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에서 더 높게 형성되었다.

<표 5>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측정항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평균	표준화 편차	평균	표준화 편차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3.01	0.496	2.95	0.540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3.05	0.623	2.78	0.716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3.04	0.634	2.71	0.765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3.05	0.594	2.84	0.715
문화시설 접근용이성	2.80	0.735	2.53	0.820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3.10	0.644	2.81	0.737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3.05	0.556	3.10	0.581
교육환경	3.02	0.578	2.97	0.654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	3.09	0.531	3.12	0.554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2.88	0.668	3.01	0.66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3.09	0.555	3.14	0.571
대기오염 정도	3.01	0.575	3.18	0.575
가구원 수	2.20	1.245	2.56	1.295
ln(월평균 소득)	5.62	0.776	5.73	0.555
ln(자산)	8.75	2.024	8.75	1.914
주거비 부담수준	3.87	0.847	3.76	0.948

범주형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교차분석에서 30대 비율은 비도시지역이, 여성 비율과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자가 거주비율은 비도시지역에서, 소형주택과 노후주택 거주비율은 도시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주택시설 및 성능 부문에서는 양지역이 유사하거나 도시지역이 다소 열악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주택유형의 경우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비도시지역은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집중된 상태였다. 비도시지역에서 일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이 더 큰 반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비중은 더 작았다. 모든 교차분석의 측정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6〉 교차분석 결과 1

측정항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Pearson 카이제곱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30대 여부	71.0%	29.0%	77.7%	22.3%	23.485***
여성 여부	23.0%	77.0%	13.6%	86.4%	54.423***
대학교 졸업 이상 여부	72.1%	27.9%	68.0%	32.0%	8.375***
자가 여부	25.9%	74.1%	27.2%	72.8%	30.039***
소형주택 여부	62.2%	37.8%	50.4%	49.6%	59.650***
노후주택 여부	34.5%	65.5%	21.3%	78.7%	82.144***

*** p<0.01

〈표 7〉 교차분석 결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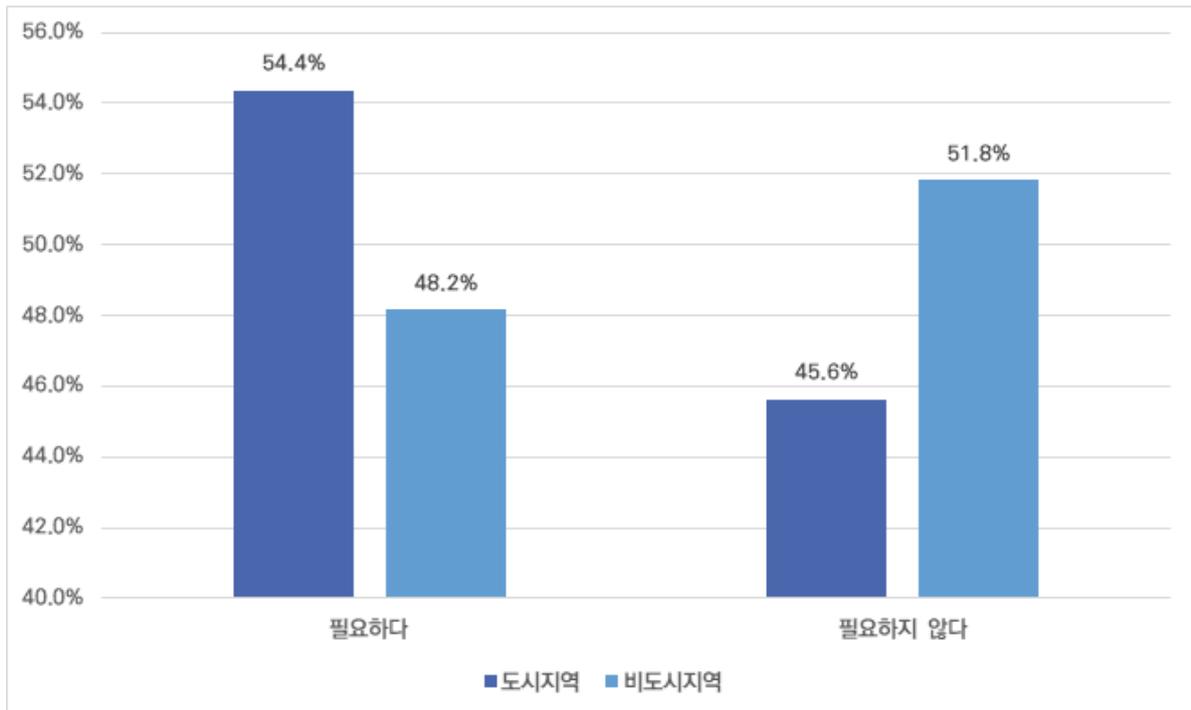
측정항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Pearson 카이제곱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1.7%	4.3%	224.096***
다가구 단독주택	24.4%	21.5%	
영업겸용 단독주택	1.8%	1.1%	
아파트	46.9%	60.4%	
연립주택	3.4%	4.0%	
다세대주택	9.6%	3.1%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0.3%	0.4%	
오피스텔	10.0%	2.8%	
고시원	1.7%	0.9%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0.1%	0.7%	
기타	0.2%	0.8%	

*** p<0.01

2)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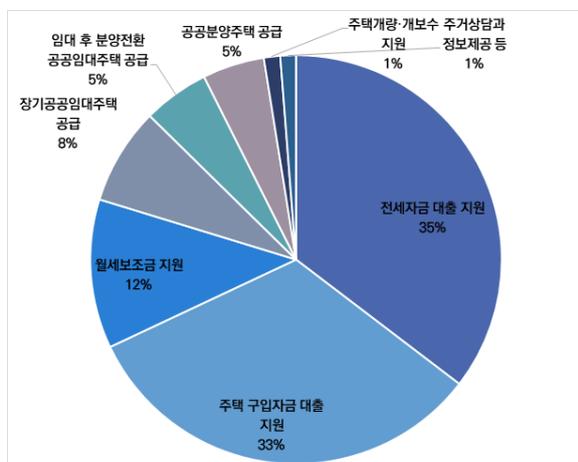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도시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응답자의 54.4%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도시지역은 4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3]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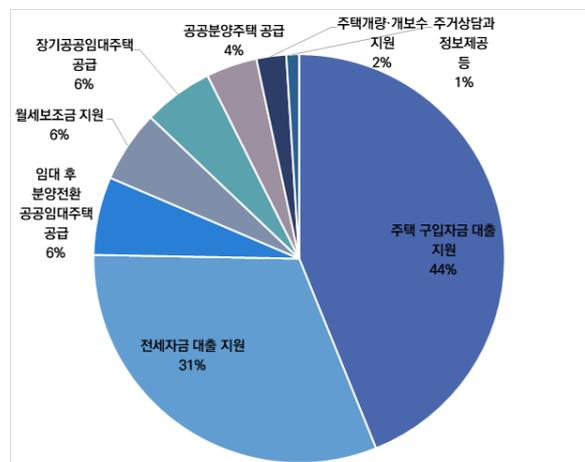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35%),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33%), 월세보조금 지원(12%)이 각각 1, 2, 3순위에 올랐다. 비도시지역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44%), 전세자금 대출 지원(31%), 임대 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을 꼽아 주택 구입 보조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도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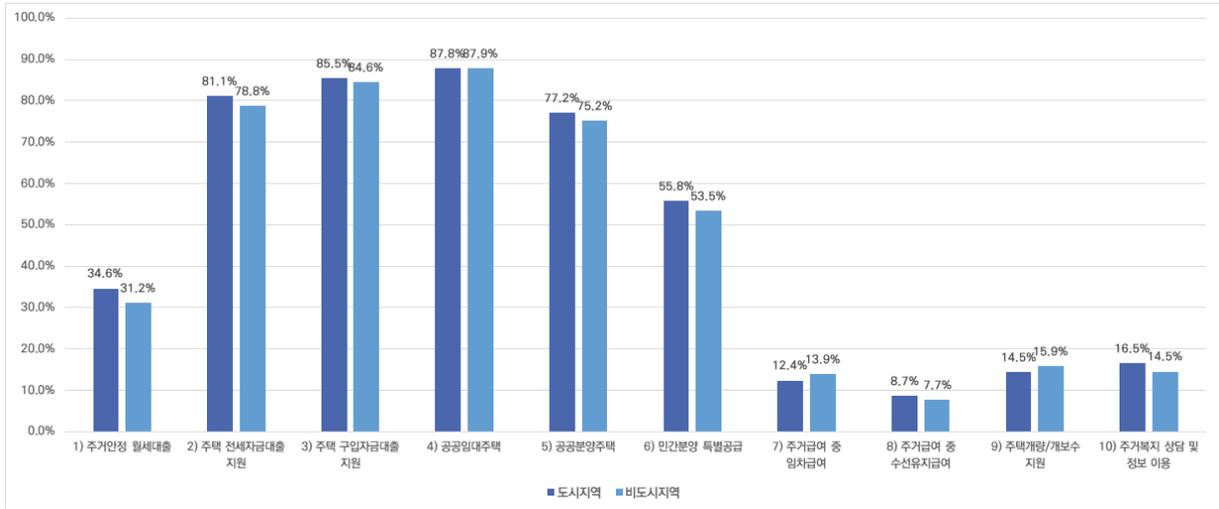


[그림 5]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비도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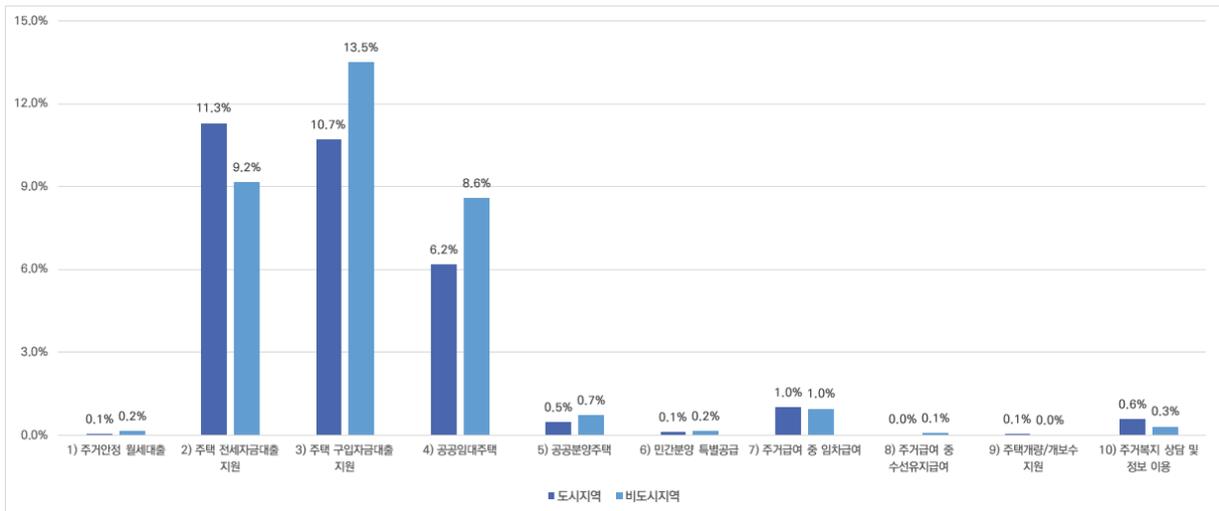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인지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이었으며, 이어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비도시지역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림 6]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두 지역 모두에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나타나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이 높은 경우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도시지역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비도시지역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비도시지역의 주택 구입 보조 수요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도시지역은 공공임대주택 이용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귀농·귀촌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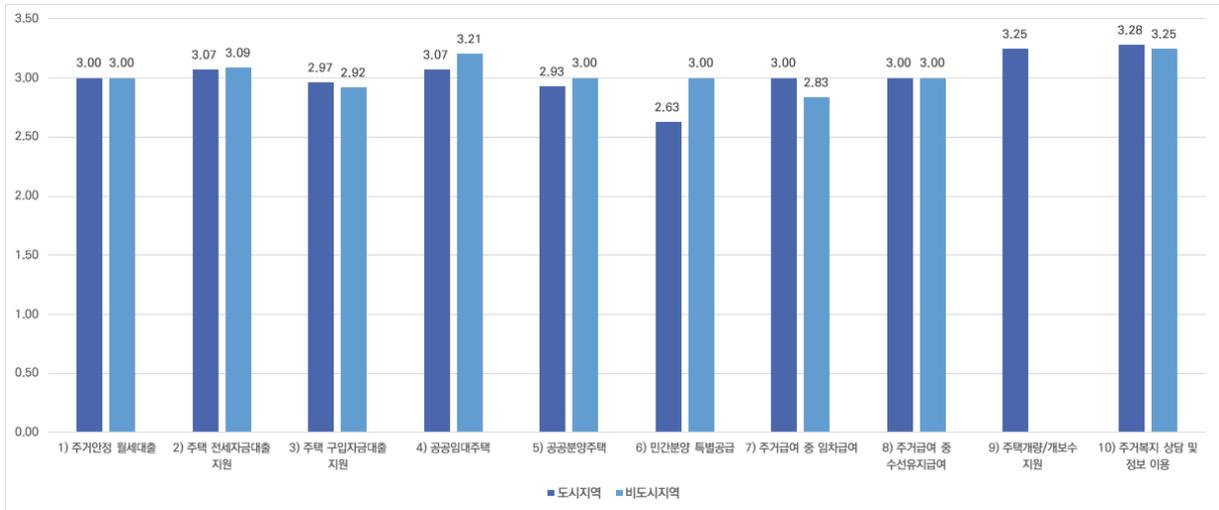
[그림 7]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두 지역 간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민간분양 특별 공급의 경우 물량 부족 및 청약 시장 과열 등으로 도시

지역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8]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2.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1) 요인분석을 통한 부문별 만족도 요인 추출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사전에 환경성, 편의성, 이동성으로 구분한 부문별 만족도 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아래 <표 8>는 요인별 적재값과 검정통계량을 보여준다. KMO 측도는 0.811이며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542~0.587의 분포로 나타났고 요인 지정 시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변수들이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최종적인 분산설명력은 64.423%이다.

요인1은 대기오염 정도,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자동차 경적 및 집주변의 소음 정도, 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교육환경을 포함하는 요인으로 환경적 쾌적성을 나타낸다. 요인2는 문화시설, 공공기관, 의료시설, 상업시설 접근용이성으로 구성되며 생활 편의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인3은 대중교통 접근용이성을 포함하므로 이동성에 관한 것이다.

<표 8>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류	요인별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특성
FAC1	대기오염 정도	0.765	0.045	0.003	환경성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0.748	0.112	0.137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0.730	0.128	-0.061	
	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0.723	0.202	0.176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0.697	0.192	0.212	
	교육환경	0.542	0.465	0.115	
FAC2	문화시설 접근용이성	0.158	0.847	-0.026	편의성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0.197	0.757	0.228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0.119	0.713	0.429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0.158	0.679	0.465	
FAC3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0.145	0.311	0.857	이동성

Kaiser-Meyer-Olkin 측도: 0.908
분산설명(%): 64.42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0
굵은 글씨: 요인 적재값 > 0.5

2) 매개효과분석을 통한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매개효과분석을 위한 실증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9>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지정된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평균은 3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21%가 여성이었고, 연령 변수의 평균은 0.72로 3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71%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2.26명이었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월평균 소득보다 자산의 표준편차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모든 변수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거비 부담수준의 경우 평균 3.86으로 ‘부담됨’에 가까워 다수의 청년들이 임차비 혹은 대출금 상환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와 노후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가구가 각각 49%, 32%, 60%를 차지하였다. 또 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70%에 이를 만큼 거주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매개변수인 환경성, 편의성, 이동성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이동성 요인의 범위는 -5.187~3.671로 가장 넓은 반면, 편의성 요인의 범위는 -4.219~3.258로 가장 좁게 나타났다.

<표 9> 기초통계 분석

구분	변수명		N=5,321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1	4	3	0.504
독립변수	비도시지역 여부		0	1	0.17	0.374
매개변수	환경성		-4.623	3.455	0.000	1.000
	편의성		-4.219	3.258	0.000	1.000
	이동성		-5.187	3.671	0.000	1.000
통제변수	가구주 특성	연령	0	1	0.72	0.449
		성별	0	1	0.21	0.410
		교육수준	0	1	0.71	0.452
		가구원 수	1	7	2.26	1.260
	경제적 특성	월평균 소득	0	7.650	5.641	0.745
		자산	0	12.698	8.749	2.006
		주거비 부담수준	1	5	3.86	0.865
	주거 특성	주택유형	0	1	0.49	0.500
		노후주택 여부	0	1	0.32	0.468
		소형주택 여부	0	1	0.60	0.489
		거주기간	0	1	0.70	0.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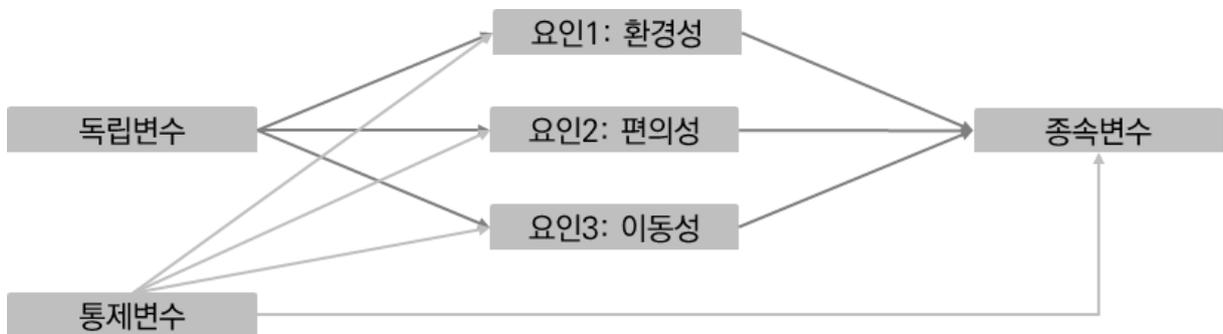
비도시지역 여부가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성, 편의성, 이동성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자 4번의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그 결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가 도시지역 청년가구보다 환경성은 0.201점 높게, 편의성은 0.378점, 이동성은 0.380점 낮게 평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에서 매개변수인 환경성, 편의성, 이동성 만족도의 1단위 증가는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독립변수인 비도시지역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여 부분매개가 아닌 완전매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선형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환경성	편의성	이동성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비도시지역 여부	0.201***	-0.378***	-0.380***	-0.001
환경성				0.221***
편의성				0.214***
이동성				0.115***
상수	0.091	-0.065	-0.121	3.022***
R_squared	0.106	0.028	0.035	0.433
F	52.340***	12.896***	16.127***	270.093***

주: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였음 / *** p<0.01

[그림 9] 완전매개효과 모형



V. 향후 연구계획

지금까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정리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비교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부문별 만족도 요인을 추출하였고 실증모형을 구축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매개효과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계획은 중간보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매개효과분석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혹은 재조정, 신규사업 구상 등 다각적 접근으로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참고문헌

- 서주환·조영배·이준근(2002) “형태지수를 이용한 농촌경관의 선호성 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2), pp.7~14.
- 김호정(2007) “순서화 로짓모형: 설문조사에 적용되는 척도의 종류”, 「국토」, 310, pp.94~102.
- 이상우·황순진(2007) “공간성, 호소유형 및 형태복잡도 지수를 이용한 토지이용과 호소수질의 관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6), pp.1~9.
- 서원석(2013)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재개발사업 이전 주택유형별 재정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요소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pp.39~55.
- 홍영화(2013) “근린에서의 상점이용과 환경인식이 주민의 영역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세연·박환용(2014)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 영향요인 연구”, 「주택연구」, 22(1), pp.77~104.
- 김세정(2014)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도시근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준(201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제·사회·환경적 개선효과가 거주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오찬옥·문경주(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pp.35~43.
- 임혜정(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pp.510~534.
- 최창호·유연우(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 연구」, 15(10), pp.103~111.
- 김현민·신현주(2018) “어메니티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식지표와 객관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pp.115~136.
- 박효숙·이경환(2018) “여성들의 동네만족도와 동네애착,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충청남도 아산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1), pp.71~81.
- 이호연(2018) “대학가 인근 청년밀집지역의 근린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만족도: 서울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재용·이재수(20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근린환경 특성과 주거만족도 비교분석 연구”, 「부동산 정책연구」, 19(2), pp.59~74.
- 안용진(2019)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친 영향”, 「GRI연구논총」, 21(1), pp.241-260.
- 이경영·정문기(2019)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 연구: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4), pp.315~348.

- 김옥진·김태연(2020) “주거환경만족도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네응집력의 매개효과와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4), pp.125~158.
- 김주현·안용진(2020) “근린의 물리적 공간범위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혼합단지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도시정책연구』, 11(2), pp.25~39.
- 박주현·이경환(2020) “CPTED 사업으로 인한 근린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빈곤지역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과 동네만족도, 동네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1), pp.105~111.
- 서원석·박기덕(2020) “경제적 사회거리가 공공주택 거주민의 근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GRI연구논총』, 22(2), pp.53~76.
- 전준형·박진아(2020) “보행환경이 근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 2017 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5(3), pp.29~42.
- 윤은영(2020) “근린환경만족도가 사회적상호작용과 주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갑성(2020) “주거환경요인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pp.239~264.
- 윤소영(2021)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 생활SOC 접근성과 근린생활환경만족도 관계 중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박상우(2022) “지역별 청년층 월세 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 분석”, 『주택도시연구』, 12(2), pp.21~49.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2.07.28.
- 국토연구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2022.05.25.
- 건축공간연구원,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2021.12.31.
- 엄창욱 외, 「청년의 귀환」, 박영사, 2018.
-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2018.12.
- 대한상공회의소,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보도자료)”, 2022.06.08.
- 이지은·이경은(2018)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2호, pp.57-86.
- 신명철·이재수(2019)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 비교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3호, pp.167-195.
- 이상욱·권철우·임영주(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7권 제1호, pp.43-66.
- 손경민·진장익(2020) “지역특성이 노인층·청년층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국토계획』, 제55권 제4호, pp.19-34.
- 임준홍(2021)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주거이동의향 실증분석: 도시와 농촌 차이”, 『주거환경』, 제19권 제1호, pp.13-24.

문건용, 「R을 이용한 조건부과정분석」, 학지사, 2019.

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2020.

김선주(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택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pp.39-62.

구한민·김갑성(2021)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주택연구」, 제29권 제1호, pp.33-78.

권영수·최완호(2018)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만족도 분석: 서울시 관악구·동작구 거주 청년의 주거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제18집, pp.289-311.

민동환(2020)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특성 및 주거만족도 실증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균섭·진은애(2022)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선택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별, 생애주기별, 소득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3권 제3호, pp.15-28.

정영광(2022)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서비스가 입주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혜민(2021)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경북 청년의 정주만족도 예측요인 탐색”,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pp.151-167.

임해린(2021) “주거복지정책이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충근(2021)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0년, 2019년 주거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정표(2022)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만족도 및 주거이동의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정표·강정규(2022)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LHI Journal」, 제48호, pp.65-79.

서경택(2022) “청년주거정책 시행에 따른 청년가구의 주거만족도 변화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정·김모운(2019) “청년층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수준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0권 제4호, pp.55-64.

Amérigo, M., 「A Mod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Socio-Environmental Metamorphoses: Builtscapes, Landscapes, Ethnoscapes」, Aristotle University Publications, 1992

Tiebout, C.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4 No. 5, pp. 416-424.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 ⑤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와 상인회를
연계한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 강원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현국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와 상인회를 연계한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강원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현국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 이후, 2019년 12월 10개 혁신도시에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2020년 12월에는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그 중 강원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3,596km²의 부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2011년 20,287명이었던 반곡관설동의 인구는 2021년에는 43,998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양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보이는 듯하나, 실상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계획인구의 87.1%만 달성하였고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전율은 65.3%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임
- 선행연구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이 미진한 부분을 문화여가의 부족으로 지적하고 있으며(김현우 외, 2022), 거리문화공연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제고,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음(박하늘, 2016)
- 이에 강원 혁신도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II. 연구 목적

- 지역 문화예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소비자(지역주민), 공급자(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자(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고찰하고 각 관련 주체가 민·관·공으로서 서로 연계해 나가는 기능을 정립하며, 나아가 본 연구의 내용을 타 혁신도시의 발전·활성화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Ⅲ. 연구 범위

- 강원 혁신도시에서 이전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내 동호회인 심평원 연주자 동호회가 혁신 도시 상인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ESG 담당부서인 사회적가치부와 강원 혁신도시가 위치한 반곡관설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22년 5월부터 매월 실시 중인 ‘핵x심 페스티벌’ 행사를 중심으로 고찰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주자 동호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에서 원주로 이전한 직후인 2017년에 취미활동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친목 도모,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어 2022년 10월 현재 21명의 회원이 활동 중임
- 지역사회 내에서 강원문화재단 및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각각 지역사회봉사단,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내외 공연활동 등을 시행 중임

2. 핵x심 페스티벌

- ‘혁신도시 상인회 X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페스티벌’의 의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내 동호회인 연주자 동호회가 주축이 되어 혁신도시 상인회, 반곡관설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민·관·공이 연합한 혁신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임
- 2022년 5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점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에서 상인회에 제의하여 매달 핵심 페스티벌을 개최 중임
- 시행 초기에는 동호회와 상인회만 관여하고 있었으나 이후 소속기관의 사회적가치부와 관할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도 연계하고 있음

IV. 연구 방법

- 공연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고 논의를 확장하도록 함
- 또한 생활문화 동아리의 문화예술 행사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객을 대상으로 양적으로 분석하고, 문화의 소비자(지역주민), 공급자(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자(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함

1. 선행연구 검토 및 적용

- 1) 김현우 외(2022)의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지표 중 문화여가부문의 하위 10% 지역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95.7%를 차지함을 보여줌
이를 근거로 지방이전 후 비정착의 사유를 수도권 대비 문화적 혜택 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본 연구를 시행함
- 2) 박하늘(2016)은 거리문화공연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제고,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
이에 대해 강원 혁신도시의 사례를 대입하여 재증명 하고자 함
- 3) 서동진(2007)은 거리예술을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즐겁게 하거나 관객 감상비를 받을 목적으로 실연(實演) 되는 아마추어의 소규모 공연 행위”로 정의함
동호회의 활동도 이 정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4) 객민봉(2013)은 “재능기부 공연은 쌍방향성, 수평성 등의 새로운 특성으로 인해 기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고, 개인의 능동적 기부참여를 확장시키며, 나아가 미래사회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동호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연주를 통한 재능기부 공연이며,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통합을 위한 것임
- 5) 배기형(2012)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체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 함
동호회의 행사는 공연장에서 실시하는 공연사업에는 해당이 없음
- 6) 박주원(2014)은 공연예술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폭넓은 공연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함
동호회는 동호회가 수행가능한 밴드 등 연주로만 프로그램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역 내 아마추어 예술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사에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가 많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구연동화팀과 협업하여 행사를 시행 중임

- 7) 이강봉(2012)은 축제의 운영 요인인 프로그램, 몰입감, 서비스 등이 축제 개최성과의 회귀식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축제의 성격을 갖는 개천예술제의 축제 운영이 지역축제의 개최 성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함
동호회는 이 점에 착안해 몰입감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충해가고자 함
- 8) 박태환(2021)은 “최근에는 공연예술 축제 중에서도 음악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음악 축제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우리 역시 음악 축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관광객들 역시 문화행사로 음악을 선호하는 만큼 특별한 음악 콘텐츠를 연계한 축제야말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러 다양한 음악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연예술 축제보다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는 성공적 개최라 여기기 어려울 만큼 지역적·장르적 쏠림 현상이 심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치밀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음악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함
동호회의 활동은 연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 있음
- 9) 최영화(2018)는 거리공연 사업과 생활문화 정책이 상호 진흥하기 위해서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음
동호회는 지자체 및 문화재단 등과 협조하며 생활문화 정책이 연계된 공연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음
- 10) 황경수 외(2018)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며 거리공연자들이 인허가와 등록, 협조를 얻고자 할 때 다양한 기관과 관계를 가져야 해 이러한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주는 방식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동호회는 공연 허가 등 행정적 사항을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인회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였음
- 11) 안지혜(2014)는 거리 공연문화의 한계 중 하나로 거리 공연자와 관람자의 정보교류의 부재를 들었음
동호회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상시로는 상인회 회원 영업점에 배부하여 게시 중인 페스티벌 포스터의 큐알코드와 연계된 혁신도시 상인회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단체 및 행사를 홍보하고 있으며 행사 시에도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 12) 김충언(2012)은 공연예술시장에서의 마케팅은 공공성이나 예술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들이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하며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CRM 전략 활용을 주장함
동호회는 상인회 네이버 카페를 통해 관심 있는 관람객을 회원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13) 이정하(2015)는 일회성 공연의 반복이 아닌 교류와 교육적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지역 주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축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함
동호회는 매월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공 연계를 통해 교류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음
- 14) 이수진(2013)은 지속가능한 축제경영을 위한 5가지 과제로 방문객의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탈성, 놀이성, 대동성) 기획,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축제운영조직 구축, 축제의 수익구조 다양화, 축제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일회성적인 이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인 축제평가시스템 확보를 주장함
동호회는 상인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문화 지원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익창출과 평가분야에 대해서도 고려중임

2. 연구 설계

1) 양적 분석

- 설문지를 이용해 관람객 대상 조사 실시예정
- 10월, 11월, 12월 총 3회, 회당 약 100명

2) 질적 분석

- 면접지 개발 및 면접 수행 예정
- 11월 중, 문화 공급자(연주자 동호회), 문화 수요자(관람객), 문화 지원자(상인회 등) 각 2명

V. 분석 결과

연구 추진 예정

VI.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연구 추진 예정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연구 추진 예정

참고 문헌

- 김현우, 이준영(2022),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 박하늘(2016), 도심 축제의 거리문화공연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성안길 거리문화공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중심으로
- 서동진(2007), 우리나라 거리예술(busking)의 현황과 발전과제
- 곽민봉(2013), 재능기부공연 활성화 시스템 연구
- 배기형(2012),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박주원(2014),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 이강봉(2012), 문화예술축제 환경단서가 지역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개천예술제를 중심으로 -
- 박태환(2021), 음악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축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활성화 연구:
한국, 러시아의 축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최영화(2018), 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황경수, 이관홍, 양정철(2018),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갈등사례분석과 협력방안 제안 연구
- 안지혜(2014), 스마트 시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개발
- 거리 공연문화 활성화 중심으로 -
- 김충연(2012),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CRM의 전략적 활용방안
- 이정하(2015), 공연예술축제 활성화 사례연구
- 스키 타다시의 2015 토가국제연극 축제를 중심으로 -
- 이수진(2013), 지역살리기와 축제

설문지

본 설문지는 심평원 연주자 동호회와 혁신도시 상인회가 혁신도시 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월 시행하는 공연행사인 ‘혁신심 페스티벌’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시행하며 설문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커피쿠폰 증정을 위한 선택적 핸드폰 번호 수집(쿠폰발송 즉시 폐기)

귀하의 진솔한 답변이 더 즐겁고 활기찬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매우 소중한
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8문항, 2분 소요예상)

[공연 만족도 및 문화발전 기여도]

연번	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구연동화 공연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2	밴드 공연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3	행사 전반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4	동 행사가 혁신도시 문화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관람객 특성]

연번	설문 문항	답 변					
		혼자	가족	친구	연인	기타 (서술)	
5	관람객 구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6	동 행사가 열리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알고 왔다			모르고 왔다		
7	동 행사의 홍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수 답변)	못 봤음	혁신도시 상가 내 포스터	상인회 네이버 카페	네이버 동네이웃 소식	심평원 사내 게시판	기타 (서술)
8	동 행사의 몇 번째 관람입니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상권 활성화]

연번	설문 문항	답 변					
		예			아니요		
9	행사 당일, 행사 전후로 혁신도시 내 상가를 이용하셨거나 하실 예정입니까						
10	(이용한다면) 어떤 가게를 이용 하십니까 (복수 답변)	식당	주점	카페	마트	편의점	기타 (서술)
11	(이용한다면) 지출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1회, 1인 기준)	1만원 이내	1~2만원	2~3만원	3~4만원	5만원 이상	

[기타 의견]

12. 동 행사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술)

[인구통계학적 분석]

연번	설문 문항	답 변				
		남성		여성		
13	성별					
14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5	거주지	혁신도시 내			혁신도시 외	
16	혼인 여부	미혼			기혼	
17	(기혼자) 자녀 여부	0명	1명	2명	3명 이상	

18. 커피쿠폰 발송을 위한 전화번호 기입 (서술)

※ 기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쿠폰발송 즉시 폐기)

발표 및 질의응답 ⑥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 ·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 지역참여제도 기반 커뮤니티와
기금 마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동희 / 공동연구자 정보영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 지역참여제도 기반 커뮤니티와 기금 마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동희/공동연구자 정보영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인가구가 전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가구수의 31.7%를 차지함
 - 유럽의 경우 스웨덴(51%), 덴마크(44%), 리투아니아(43%), 핀란드와 독일도 40% 이상 (Eurostat, 2020).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도 2040년에는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

□ 1인 가구 급증과 맞물린 3년여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화된 개인 간 단절과 고립

- 1인 가구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 맞춘 대안적 공동체와 연대를 요하는 한편, 절대적 빈곤, 돌봄, 고립의 위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한편의 사회문제로 작동할 우려
- 개인주의의 심화와 전통적 공동체 해체에 맞물린 코로나19의 여파로, 1인 가구는 자유로운 시민의 삶을 연상케 하기보다 고립과 고독사 문제로 연관
- 사회진입을 요하는 청년층의 경우 이후로도 연쇄하여 부정적 영향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생애주기 이행을 요하는 특성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는 청년층

- 베이비부머세대 이상의 1인 가구는 실직·가족해체·파산 등으로 고독사, 절대적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청년세대의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회 안착 연령이 늦어져 발생하는 문제 등에 노출
 - KDI(2020)는 첫 취업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진다고 추정

□ **사회진입이 장기화 될 경우 구직시장 진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구직단념 및 은둔으로 이어지며 생애 전반의 문제로 귀결될 소지가 있음**

-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취업 가능성이 있는데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구직단념자'가 2020년에만 60만5200명으로 2019년 53만3000명 대비 13.6%(7만 260명) 증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¹⁾
- 청년재단에서는 한국의 고립 청년을 약 13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며²⁾, 국내 은둔 청년 규모를 약 37만명으로 추산한 전문가들도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만 18~34살 2041명 중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6%로 2017년에 비해 1% 증가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40살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³⁾

□ **은둔·고립된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해법을 찾기 어려워(씨즈 이은애 대표, 2022.8.) 지원이 시급함**

- 청년층은 현 사회구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과거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겪음과 동시에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들로 발생한 다양한 격차들이 향후 중장년·노년기의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소정 외, 2008).

□ **비단 은둔형 외톨이 뿐만 아니라, 감염병 사태와 고용시장 악화로 장기미취업 및 고립에 처한 청년층의 사회재진입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아직까지 사회적 고립·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의 소수의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수준으로, 재원 마련과 지원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2019년, 부산시는 2021년 6월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 고립청년 지원조례를 제정
-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했지만 아직 기초 조사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청년에 대한 정의도, 은둔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

1) 이진혁. 코로나에 달린 취업문... "사원출 대신 알바 명찰 답니다" [2030 코로나세대]. 파이낸셜 뉴스. 2021.07.11 18:10

2) 김세은. 나도 혹시 '고립 청년'?...심리적 단절감 해소책 부족해. 이데일리. 2021-05-28 오전 12:30:52

3) 장수경·신소윤. "은둔이라는 스펙 쌓은 이들이여, 나오라 '땅굴'로." 한겨레. 2022-08-06 13:17

- 그러나 사회적 문제가 된 고립·은둔은 다각적인 접근과 장기적 노력이 요구되어 단편적인 정책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매우 어려움
 - 제도와 재원을 마련해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용기를 낸 당사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이 조달되기도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정책 난이도가 매우 높음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공론화가 되지 못하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지원사업 경험자가 적고 제도가 없으며 인재 부족 등⁴⁾
- 제도권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도록, ‘경력/경험/스펙/공백기’를 고려하지 않고도 진입 할 수 있는 경험의 무대 조성이 절실한 상황
 - 사회와 오랜 단절과 진입 지연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효능감이 크게 저하되어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다시 도전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방어기제가 사회공동체로의 복귀에 지장을 초래
 - 일련의 과정으로 당사자가 활력을 찾아 구직자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경제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면 공백기와 직무 경험 부재로 구직난에 처하여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됨
 -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과 고립 수준에 맞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그러나 지원 제도가 미비한 지역의 청년들은 정보와 인프라, 기회 불균형으로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가중되는 지역격차
 - 지역인재 양성과 자원 연계 생태계를 원활히 할 토대가 미비한 소도시의 청년들은 교육·문화·정보접근·기회 측면에서 지역격차에 따른 차별을 겪음
-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청년시기의 특성에 맞춰, 지역사회를 청년층의 역량을 심본 발휘하며 경험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이환주·이진혁·김도우 "문열고 나와도 잡아주는 손이 없다... 예산없어 문닫는 지원단체 [숨어버린 사람들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서둘러라]" 파이낸셜 뉴스. 2021.11.28 17:47

2.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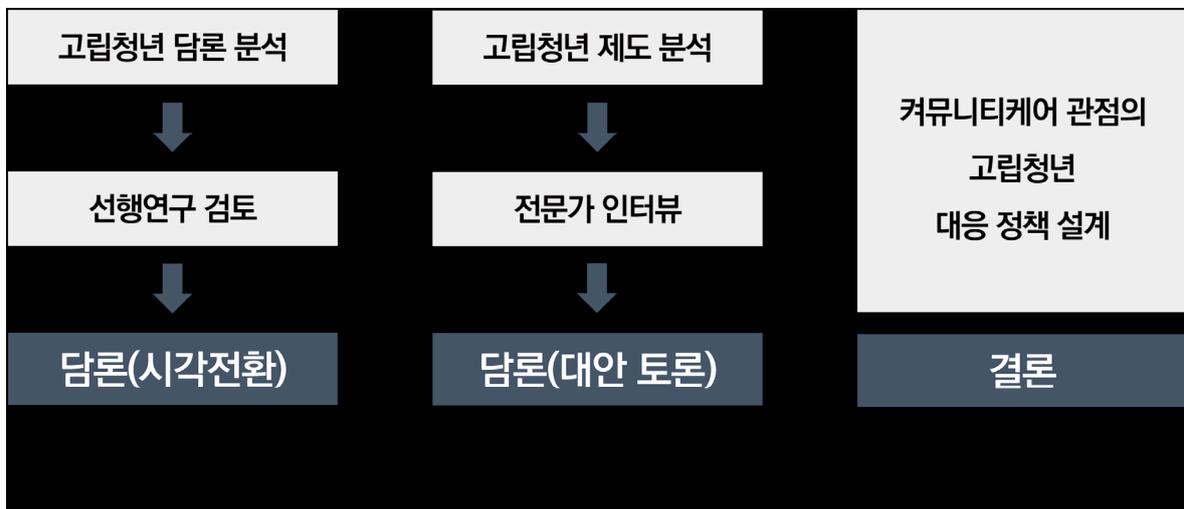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사회가 수요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군과 공동체 모형을 탐색하여, 경험이 부재한 청년들도 자아존중감과 사회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는 현 사회가 고립청년을 ‘고립되어 구제가 필요한 개인’으로 낙인하지 않고, 잠시 ‘이행을 지연하거나 우회하고 있는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접근임
- 고립·은둔을 겪은 청년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도약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원원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모형

-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그림 1).
- 청년층의 고립·은둔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여 관점 전환을 요구하는 접근
- 탈고립·탈은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접근

[그림 1] 연구 모형



□ 고립·은둔 담론의 전환을 위한 연구

- 장기미취업·고립·은둔에 대한 기존 제도·정책에 대한 **담론 분석**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인식 전환의 가능성 검토
- 장기미취업·고립·은둔 지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 제시

□ **고립·은둔 지원 제도 및 정책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 장기미취업·고립·은둔 지원을 위한 **제도 현황 비교 분석**
- 장기미취업·고립·은둔 지원 정책의 **사례 조사 및 검토**
- 장기미취업·고립·은둔 지원 현장의 **전문가 인터뷰**

□ **지역공동체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탈고립·탈은둔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 별 종합 지원 체계 설계**

- 지역(시민)사회의 자원·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직업군을 연계한 일자리 프로그램 설계
 - 펀드레이저/지역문화기획자/영상콘텐츠 기획·제작자/프로그램 개발자 등
 - 지역사회의 기금 마련 수요와 인력 부족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직업인 양성을 연계할 수 있을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시
 - 장기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직무 경험과 커리어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장
- 청년참여제도와 연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설계
 - 현재 지자체 별로 설치되고 있는 청년참여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동일연령 집단 간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청년들이 문화기획 및 공공프로젝트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이는 청년들의 독자적인 지역사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역량 제고하고 지역 사회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잠재력이 있음
 - 이에 실제 청년참여제도와 연결하여 청년들 간 사회관계망 형성을 독려한 사례를 제시하여, 청년들의 단절과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형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비교제도분석**

- 탈고립·탈은둔 지원 제도의 개념과 접근방식을 비교하여 분석
- 제도적 지원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특징과 차이를 조망

□ **문헌 조사**

- 구직 단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담론을 정리하고, 탈고립·탈은둔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과 비교하여 한계점과 보완지점을 탐색
 - 유사한 사회복지 정책 영역의 이론적 접근을 검토하여 커뮤니티케어의 ‘강점담론’의 시각을 토대로 병리적인 차원의 처방에서 나아가, 청년 개개인의 심리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의 필요를 제시하고자 함

□ 전문가 인터뷰

- 탈고립·탈은둔 정책을 다루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존하는 구직단념과 고립 지원의 한계를 확인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과 보완점들을 도출
- 탈고립·탈은둔 지원 프로그램을 다루는 민간 전문가 인터뷰
 - 현장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수집함으로써, 이상적인 고립청년 지원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II. 이론적 논의

1. 선행 연구 검토

1) 사회적 고립 개념의 모호성

사회적 고립은 명확한 개념이 부재하며, 학문분야나 주제, 연구자의 관심 영역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최지현 외, 2022). 다만, 합의된 사회적 고립의 개념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정의된다(이상철·조준영, 2017; 유민상·신동훈, 2021). 또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이나 고독, 은둔의 용어와 함께 혼용하기도 한다(김성아, 2022a).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은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문제 대응의 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유민상·신동훈, 2021). 현대사회에서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은 노년기뿐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확대되어 영국과 일본은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 및 실행중이기도 하다(유민상·신동훈, 2021).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적 고립의 주요 정책과 연구는 노년기와 취약계층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있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정책을 다루더라도, 사회적 고립과 유사한 취약청년의 관해 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김기현 외, 2019; 유민상·신동훈, 2021). 특히, 사회적 고립은 1950년대 후반부터 고립의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일본의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가 대두되었다(김성아, 2022b).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는 집에 나가지 않거나 가족과 대화하지 않거나 방 안에만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의도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유민상·신동훈, 2021).

우리나라 말로는 대체로 은둔형 외톨이로 순화하고 있으며(김성아, 2022a), 국립국어원에서는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를 대신하기 위해 누리꾼들에게 제일 많은 지지를 얻은 ‘폐쇄은둔족’을 다듬은 말로 결정했다. 이처럼, 현재 개인을 나타내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폐쇄은둔족 등의 혼용은 결국, 이에 대한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의 개념 정의를 어렵게 할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의 합의된 개념 정의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학술적 논의와 제도상의 용어 혼용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다.

2) 사회적 고립 개념 정립의 필요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의 현상이 우리사회에서도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 되어진 만큼,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이론적 논리를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주로 개념 정의를 사회자본 관점, 사회적 배제 관점, 사회적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김성아, 2022; 정주호 외, 2022),

먼저, 사회적 고립은 사회자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주로 “사회구성원들의 연결 및 협력을 유도하는 특정 가치, 규범,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 신뢰 등”으로 정의된다(최예나·최영출, 2020). 즉, 사회자본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은 타인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결핍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김성아, 2022a). 두 번째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란 “빈곤의 개념을 넘어서 포괄적인 개념을 뜻하며, 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배제된 상태”로 정의한다. 즉,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은 타인 및 집단과 교류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사회,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 배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성아, 2022a).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존중되고 가치 있는, 그리고 상호 부조와 의무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정의된다(Wills, 1991; Taylor, 2007). 즉, 사회적 지지의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사회적 고립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서로 연관되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 경제, 정서적 측면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은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주호 외, 2022). 정리하면, 사회적 고립은 사회자본이 결핍된 상태, 경제, 사회, 정치활동에 배제된 상태, 사회적 지지의 부족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고립을 연구 초기에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양적 접촉 부재를 강조했다면, 최근의 연구는 보다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민주·이아라, 2021). 정리하면, 사회적 고립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을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한다(유민상·신동훈, 2021). 또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을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으로 분류하거나(김민주·이아라, 2021), 외부적 고립, 내부적 고립으로 분류하고 있다(유민상·신동훈, 2021). 사회적고립을 객관적 고립고 주관적 고립으로 나누는 것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고립되었는지와 동시에 얼마나 주관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민주·이아라, 2021). 객관적 고립이란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분리의 정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고립은 외로움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질적 수준에 대한 지각으로 의미한다(Nicholson, 2012; 이상철·조준영, 2017). 다음으로 외부적 고립이란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내부적 고립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유민상·신동훈, 2021).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은 사회자본이 결핍된 상태, 경제, 사회, 정치활동에 배제된 상태, 사회적 지지의 부족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 주관적 고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부적, 내부적 고립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자본, 사회활동 배제, 사회적지지의 부족으로 나타난 사회적 고립은 이제 취약계층만의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노년층이나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을 연계해서 다루어질 뿐, 청년층과 사회적 고립의 연계는 더욱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과 사회적 고립을 연계하여 살펴보고 고립청년의 사회진입과 관계망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고립·은둔에 대한 담론 전환

□ 커뮤니티 케어, 시민권 등 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붙여 이론적 논의 종합

III. 제도·정책의 현황 및 한계

1.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비교

1) 조례 도입 현황(안)

〈표 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관계 조례의 도입 현황

지방자치단체		제정일자	조례 명	
광역 자치 단체	고립	서울특별시	2021. 12. 3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2022. 10. 11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1. 5.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은둔	광주광역시	2019. 10. 15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2021. 7. 14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라남도	2021. 9. 30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기초 자치 단체	고립	원주시(강원)	2022. 2. 11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서울)	2021. 4. 1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 15 조 (청년의 생활 안정)
		청주시(충북)	2022. 5. 13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은둔	남구(광주)	2021. 11. 4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노원구(서울)	2022. 1.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광주)	2021. 3. 24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미추홀구(인천)	2022. 10.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안동시(경북)	2022. 5. 6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은평구(서울)	2021. 9.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 조례 규정 추진체계(안)

〈표 2〉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관계 조례의 추진체계 규정 비교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실태조사	위원회(자문·심의)	중간지원조직	
광역 자치 단체	고립	서울특별시	5년 주기	가능	미규정	고립청년 지원시설
		대구광역시	5년 주기	의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5년 주기	5년 주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미규정
	은둔	광주광역시	5년 주기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5년 주기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미규정
		전라남도	5년 주기	5년 주기	미규정	미규정
기초 자치 단체	고립	원주시(강원)	5년 주기	가능	미규정	미규정
		청주시(충북)	5년 주기	5년 주기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미규정
	은둔	남구(광주)	5년 주기	미규정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미규정
		노원구(서울)	5년 주기	미규정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미규정
		동구(광주)	5년 주기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미규정
		미추홀구(인천)	5년 주기	미규정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미규정
		안동시(경북)	5년 주기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미규정
은평구(서울)	5년 주기	미규정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미규정		

2.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제도의 접근방식 비교

1) 조례의 개념 규정

〈표 3〉 조례 상의 고립·은둔청년의 개념 정의 비교

범주	개념	세부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례 수
고립	사회적 고립청년 (기간, 관계, 진출, 장기미취업)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	원주시(강원), 청주시(충북)	2
	사회적 고립청년 (기간, 참여, 공간, 장기미취업)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	서울특별시	1
	사회적 고립청년 (기간, 관계, 참여, 장기미취업)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	대구광역시	1
	사회적 고립청년 (기간, 공간, 관계)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1
은둔	은둔형 외톨이 (공간 중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안동시(경북)	3
	은둔형 외톨이 (기간, 공간)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광주광역시, 동구(광주)	2
	은둔형 외톨이 (기간, 공간, 관계)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노원구, 은평구(서울), 남구(광주), 미추홀구(인천)	4

2) 제도적·정책적 접근(근거 조항)

〈표 4〉 조례 상의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접근 방식 비교

지방자치단체		자조모임 /관계형성 (공동체)	일상회복 (치유)	자립지원 (직업)	평생교육 (학습)	문화·예술 ·여가·체육	지역사회 통합	가족지원
광역 자치 단체	광주광역시	X	△	O	O	O	O	O
	부산광역시	O	O	X	O	O	X	X
	전라남도	O	X	O	X	O	X	O
기초 자치 단체	남구(광주)	O	X	O	X	X	X	O
	노원구(서울)	O	X	O	X	X	X	O
	동구(광주)	X	O	O	O	O	O	O
	미추홀구(인천)	O	X	O	X	X	X	O
	안동시(경북)	O	O	O	O	X	X	O
	은평구(서울)	O	X	O	O	X	X	O
	원주시(강원)	O	O	O	X	X	O	X
	청주시(충북)	O	X	O	X	X	X	X

은둔형 외톨이 또는 고립청년에 대한 ‘발생 예방’에 대한 규정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안동시(경북), 남구(광주), 미추홀구(인천), 청주시(충청북도)

3. 비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논의 개진 및 종합

각 지자체가 도입한 지원 제도를 비교하고 한계점을 도출

IV.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설계

- 추진체계 : 조례적 근거, 정책적 처방, 행정전담부서 등 제도적 논의
- 전달체계 : 중간지원조직, 서비스 조달 및 전달을 위한 논의
- 협력적 거버넌스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설계 제안

V. 결론

VI. 참고문헌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김민주, 이아라. "대학생의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대처양식의 군집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및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8.9 (2021): 89-114.
- 김성아. (2022a).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복지연구, 38(3), 115-152.
- 김성아. (2022b).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305.- (2022): 74-86.
- 정주호·한연수·김동욱·조민효.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유형에 관한 연구 -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0), 1011-1045.
- 이상철·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유민상·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지현,조미형 이승영.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74.2 (2022): 53-78.
- 최예나, 최영출. (2020).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4(3). 325-352.
- Taylor, S. E. (2007). Social support.
- Nicholson, R. (2012). A review of social isolation: An important but underassessed condition in older adult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3(2-3). 137-152.
-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56 ships. In M.S. Clark (Ed.), Prosocial behavior (pp. 265-289). 57 Newbury Park, CA: Sage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 ⑦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문성남 / 공동연구자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중간보고)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문성남/공동연구자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 (가나다순)

I. 연구요약

국가 총인구 감소의 영향은 자연적·사회적 증감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총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인구증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도시인구의 성장은 출산율이 아닌 전출입에 따른 영향에서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른 인구증감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총인구 감소는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인구감소지역법을 통해서 정부는 거주민과 정착예상 주민 외에도 '생활인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인구 개념이 통용되기 전, 일본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관계인구'가 쓰였다. 관계인구는 정주하지 않고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개념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국내 생활인구 개념은 법적 개념을 기준화하였으며, 본 연구는 생활인구 유형 가운데 '체류인구'에 한정하여 특성화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I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국가 총 인구감소 현상

1) 총인구의 자연적 증감영향

통계청(2022)에 따르면 국가 총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 총인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총 인구감소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해 어느 한쪽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거주 내국인이 96.8%에 달하는 만큼 인구감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절은 내국인 대상 총인구의 첫 감소가 나타난 2021년을 중심으로 나이, 지역 등 인구 성격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변화에 주목한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증감 차이가 있었다. 유소년(0~14세)과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전년 대비 감소했던 반면, 고령자 인구(65세 이상)는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의 활동이 유소년과 고령자 대상 부양 기능을 부담하는 부양비(比, ratio)를 산정했을 때, 2005년부터 통계 가운데 유소년인구 대상 부양비는 지속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 부양비가 증가세를 지속하여 보였다. 2017년부터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를 통한 사회적 부양 대상이 유소년 중심에서 노년으로의 전환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표 1〉 유소년 및 노년부양비, 2015~2021년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유소년부양비 ¹⁾	18.5	18.1	17.8	17.4	17.0	16.8	16.5	-0.3
노년부양비 ²⁾	17.6	18.1	19.1	19.8	20.8	22.2	23.6	1.3

통계청(2022)의 자료를 재구성

〈표 2〉와 같이 시군구 도시별 출산율 가운데 상위 10개 도시 전원이 비수도권에 위치하였다. 하위 10개 도시의 경우 서울 5개 도시를 비롯하여 전남 곡성을 제외하고서는 9개 도시가 특별·광역시권 대도시에 속하였다. 도시별 출산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합계 출산율 상·하위 시군구, 2021년

합계 출산율 상위					합계 출산율 하위				
순위	시 군 구	출산율 (%)	2020년 순위	전년대비 순위변동	순위	시 군 구	출산율 (%)	2020년 순위	전년대비 순위변동
1	전남 영광군	1.869	1	-	252	부산 영도구	0.381	253	△ 1
2	전북 임실군	1.803	3	▲ 1	253	대구 남 구	0.437	254	△ 1
3	전북 진안군	1.562	7	▼ 4	254	전남 곡성군	0.470	201	▽53
4	강원 양구군	1.518	13	▲ 9	255	서울 강북구	0.523	255	-
5	전남 신안군	1.501	21	▲16	256	서울 종로구	0.525	258	△ 2
6	강원 인제군	1.472	11	▲ 5	257	서울 광진구	0.531	257	-
7	강원 철원군	1.394	6	▼ 1	258	서울 강남구	0.541	256	▽ 2
8	경북 청송군	1.385	40	▲32	259	대구 서 구	0.544	259	-
9	경북 의성군	1.375	8	▼ 1	260	서울 관악구	0.549	260	-
10	전남 해남군	1.361	4	▼ 6	261	부산 중 구	0.549	261	-

KOSIS(2022) 자료를 재가공

2) 총인구의 사회적 증감영향

총인구 감소와 지역별 출산율 격차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에서는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1년 수도권 중심인 서울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1.2%)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시도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인구가 증가(1.0%)하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

〈표 3〉 수도권 인구, 2016·2020·2021년

(단위 : 천 명, %p)

시 도	총인구			2016년 대비		2020년 대비		
	2016년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인 구	전 국	51,270	51,829	51,738	469	0.9	-91	-0.2
	수도권	25,391	26,043	26,082	692	5.8	39.0	+2
	서 울	9,806	9,586	9,472	-333	-3.4	-114	-1.2
	경 기	12,672	13,512	13,653	981	7.7	141	1.0
	인 천	2,913	2,945	2,957	44	1.5	12	0.4
구 성 비	전 국	100.0	100.0	100.0	-	-	-	-
	수도권	49.5	50.3	50.4	0.9	-	0.1	-
	서 울	19.1	18.5	18.3	-0.8	-	-0.2	-
	경 기	24.7	26.1	26.4	1.7	-	0.3	-
	인 천	5.7	5.7	5.7	0.0	-	0.0	-

통계청(2022)의 자료를 재구성

광역권 구분 외 시군구 도시별로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구증감률 상위 10개 도시 중 6개의 도시가 경기도에 속하였다. 반면, 하위 10개 도시는 수도권 외 경북(4), 전북(3), 경남(2), 전남(1)에 속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증감영향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전년 대비 인구 증감률 상·하위 시군구, 2021년

인구 증감률 상위					인구 증감률 하위				
순위	시 군 구	인구 (천 명)	증감 (천 명)	증감률 (%)	순위	시 군 구	인구 (천 명)	증감 (천 명)	증감률 (%)
1	경기 과천시	66	8	13.6	220	경북 청도군	40	-1	-3.2
2	경기 하남시	305	26	9.2	221	전북 부안군	48	-2	-3.2
3	전남 무안군	90	5	6.4	222	전남 신안군	34	-1	-3.2
4	경기 평택시	572	29	5.4	223	경북 고령군	30	-1	-3.2
5	부산 강서구	142	5	3.9	224	경북 울릉군	8	-0	-3.3
6	경기 김포시	492	17	3.6	225	경남 합천군	41	-1	-3.6
7	경기 시흥시	554	19	3.5	226	경북 군위군	21	-1	-3.7
8	세종 세종시	366	12	3.5	227	경남 하동군	40	-2	-3.8
9	경북 경산시	293	10	3.4	228	전북 임실군	25	-1	-4.1
10	경기 파주시	475	15	3.2	229	전북 순창군	25	-1	-4.2

통계청(2022)의 자료를 재구성

출산율 증가율의 상·하위 지역별 분포가 도시인구 증가율을 비교해봤을 때, 수도권 도시는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출산으로 인구 증가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인구가 증하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도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도시의 출산율 증가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총 인구감소는 지역 내 자연적 인구증감 외 도시 간 전입·전출을 통한 사회적 인구증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성재·한국환, 2021).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동시에 일어나는 도시의 인구감소는 비수도권 도시의 현주소다. 인구 감소 또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노령자 사망은 고령화를 통해 지연되고 있어,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출산율이 높은 소도시에서 출산율이 낮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현상이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감소를 설명한다.

2.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지역

사회적 인구이동을 통한 지방 소도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론은 통해 일본에서부터 먼저 소개 되었다. 지방소멸론은 국가 총 인구감소 중에서도 지방인구 감소에 기인하였다는 내용으로, 2015년 번역되어 들어온 서적¹⁾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마스다 히로야는 2013년부터 지방 소멸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이정환, 2018). 이후 ‘마스다 보고서(2014)²⁾’에서는 도쿄일극집중을 막기 위한 지방중핵도시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안하였다. 실제 일본에서는 주민이 없어 소멸한 마을이 2019년까지 4년 동안 164곳에 달하였다(정영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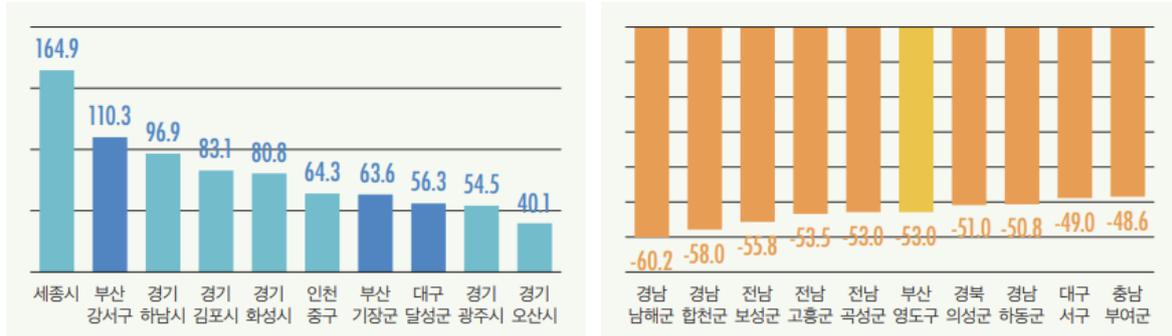
마스다보고서(2014)는 소멸위험지수를 통해 일본 내 소멸 가능성 도시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16년에 마스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조사방식과 지표 등을 참고하여, 국내 분석을 시도하여 소개한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이상호, 2016). 지방소멸 위기에는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가 단편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다.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출산뿐 아니라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절벽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상호, 2018). 이상호(2022)는 <그림 1>처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신·대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농어촌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에 주목하며 관련한 지역 간 청년인구 이동을 지방소멸위험 요인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2021)가 한국만의 인구감소지수를 갖추어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그림 2>의 89곳을 고시하였다. 인구감소지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감소지역도 시군구 단위의 중소도시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에 관한 논할 때 그 척도가 ‘인구’였기 때문에, 인구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로 구성된 지수에 근거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험 도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와이즈베리. (20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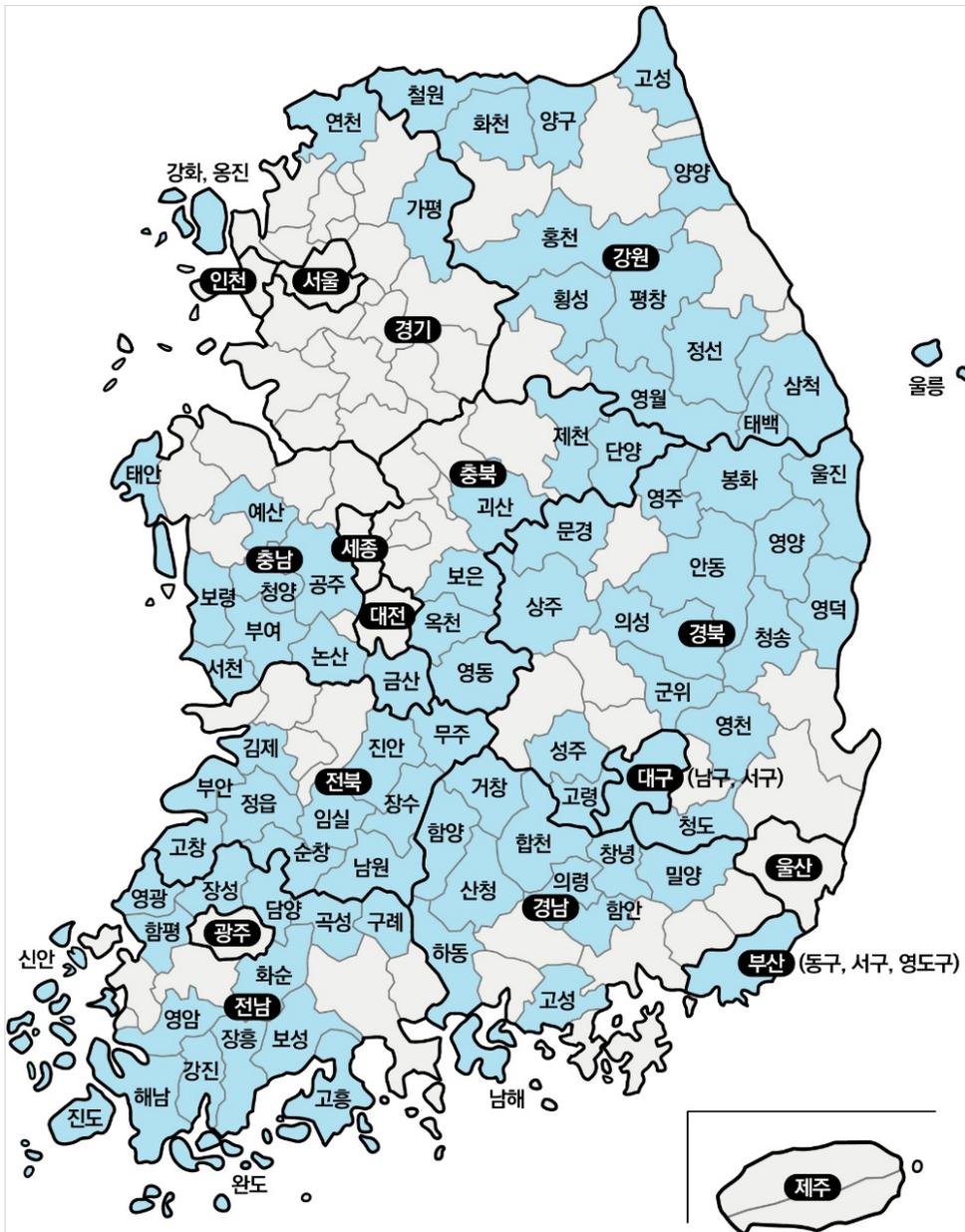
2) 마스다 보고서의 정식명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氣戦略)이다.

[그림 1] 시군구별 청년층(20~39세), 인구 순유출유입률 : 2010~2019년
상위 10개 하위 10개



출처 : 이상호(2022)

[그림 2] 인구감소지역으로서의 지방소멸 위험 도시



출처 : KBS NEWS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연구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마다 미치는 영향 차이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는 사회적 담론으로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되었던 계획주도권이 각 지역으로 이양될 수 있는 상향식 전략을 통해 국가는 불균형을 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인구감소지역법을 통해 국가는 지역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는 지원 역할을 하려 할 때, 인구에 포함되는 시민과 시민이 생활하는 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갖추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정착의 대상으로 보는 ‘청년·중장년 등’에 대한 지원 외에도 ‘생활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였다(법제처, 2022).

법률을 통해 이전 제도에서 통용되지 않던 ‘생활인구 개념’이 정의되면서, 앞으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생활인구에 관련한 사업과 제도 또한 새롭게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학술연구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 기존에 쓰여왔던 ‘생활인구’ 개념이 이번에 법률로 정의된 개념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새롭게 도출하는 작업을 선행할 것이다.

연구 방식으로는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 취했던 선행적 조치를 분석하여,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개념을 구체화한다. 해외에 먼저 쓰인 유사 개념을 참고하되, 이국적 문화차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국내 생활인구 특징을 유형화할 수 있도록 조작적 틀로서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관계인구 개념을 조사하였고, 유사개념 분석으로부터 생활인구를 개념화하였다. 생활인구 유형화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특정 사례지역의 생활인구 개념과 특성을 분석한 이 연구는 한정된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 연구안에서 정의한 생활인구에 대해 유형별 활성화 방안까지 제시한다.

III. 생활인구 개념화

1. 유사 개념으로부터의 고찰

1) 관계인구 개념의 학술적 확장

일본에서 통용되는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은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가운데 영역에 속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관계인구 개념의 출현 배경은 자연적 증감 중심으로 관리하려 했던 인구정책에서 사회적 인구증감 측면도 고려하기 시작한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관계인구는 정주하지 않고도 지방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한국에서 생활인구가 정책적 개념으로 먼저 대두된 것과 달리, 관계인구³⁾ 개념은 2016년 다카하시 히로유키(高橋博之)에 의해 민간차원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사시데 가즈마사(指出一正, 2016)는 관계인구가 교류인구⁴⁾에 비해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 ‘적극성’과 효과를 ‘가시화’하는 이들과라고 설명하였다(류영진, 2020). 사시데의 논의는 관계인구 등장 초기 교류인구와의 유사성을 구분해주고, 관계인구가 더욱 능동적인 인구 형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호가 된다.

“관계인구와 교류인구는 같은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교류인구는 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뚜렷한 목적이 있는 데에 반해, 관계인구는 뚜렷한 목적보다는 더욱 지역을 생각하는 개념, 어쩌다가 지역과 관계하고 싶다는 의식이 담긴 개념이다.” (사시데 가즈마사, 2022)

다나카 테루미(田中輝美, 2017)는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하는 ‘땅의 사람(地の人)’과 대비되는 ‘바람의 사람(風の人)’으로 칭하며,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왕래하며 들락날락하는 관계인구가 지역 활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카하시, 사시데, 다나카로부터의 관계인구 개념은 도입 초기(2016년~2017)의 틀이 되었다. 도입기 이후 교류인구와 관계인구의 연결성을 구체화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야마모토 츠카사(山本司, 2017)는 명예정(町)민과 같은 이벤트를 통한 교류인구 증가가 관계인구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주’와 ‘교류’ 사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다각화된 연구와 논의에서는 관계인구를 지역혁신과 콘텐츠로서도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다사카 이츠오(田坂逸朗, 2018)는 관계인구를 지역 브랜드에 크게 관여하는 인구로 보았으며, 사쿠노 히로카즈(作野広和, 2019)는 관계인구를 단일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농관계’, ‘로컬 이노베이션’, ‘정주인구보완’ 시점으로 나눠서 보아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토 슌지 · 타쿠미 하타사와(佐藤俊治 · 畑澤巧, 2020)는 관계인구가 라이프스타일 다양화의 배경이 되고, 복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계인구 개념이 다각화된 데에 이어, 현재까지 지역과 학교 등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사례를 고찰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오와다 준코 · 카자미 쇼죠(大和田順子 ·

3) 사시데 가즈마사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 타베루 통신의 기적’에서는 관광으로 대표적인 교류는 일회적이거나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상시로 교류가 나타날 수 있는 정주는 실현될 장벽이 높다는 특징을 밝혔다. 정주와 교류에 속하지 않는 인구를 관계인구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주장은 많은 학자 사이에서 인용되었으며, 관계인구의 가장 원형적인 개념으로서 여겨지고 있다(류영진, 2020).

4) 교류인구는 1987년 일본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교류 네트워크의 구상’에 제창된 기본 방침 가운데 교류기회 만들기로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광역교류’가 등장한 데에서 나왔음(한주성, 2019)

風見正三, 2020)는 관계인구와 지역의 협동을 통해 지역과제(사업) 실천과 지방창생 인재 육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카와바타 아키라 외(川端亮 外, 2021)는 대학 구성원을 관계인구 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이 재난 복구 및 부흥 과정과 과소지 마을 구성에 어떤 프로세스를 제공하는지 고찰하였다.

관계인구 개념의 학술적 확장을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이분법적인 성격이자 ‘제3의 인구’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이후 관계인구를 지방재생·로컬 이노베이션에서의 틀 안에서 다각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관계인구가 어떤 매개로서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시도가 일본에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관계인구의 개념은 시기에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인구 개념 확장을 2016년에서 2017년은 관계인구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입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관계인구 학술적 논의가 풍성해지고 개념이 다양화되는 ‘심화기’,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실제 사례연구를 적용하고 있기에 ‘적용기’로 나눈다.

<표 5> 관계인구 개념의 학술적 확장의 시기적 구분과 내용적 구분

학자명	시기적 구분	내용적 구분
다카하시 히로유키(高橋博之)	도입기	관광은 일회적인데 정주는 장벽이 높기에 그 사이의 관계인구를 보아야 함
사시데 가즈마사(指出-正)		관계인구는 교류인구보다 ‘적극성’과 ‘능동성’이 돋보임
다나가 테루미(田中輝美)		관계인구는 ‘바람의 사람(風の人)’으로 지역에 들락날락 하는 인구
야마모토 츠카사(山本司)		명예정(町)민과 같은 교류인구를 관계인구로 연결해야
다사가 이츠오(田坂逸朗)	심화기	관계인구는 지역 브랜드에 관여
사쿠노 히로카즈(作野広和)		관계인구를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봐야함
사토 슌지·타쿠미 하타사와(佐藤俊治·畑澤巧)		라이프스타일과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돼야
오와다 준코·카자미 쇼조(大和田順子·風見正三)		관계인구의 모델 구축 필요성 제시
카와바타 아키라 외(川端亮 外)	적용기	대학 구성원의 재난 복구 프로세스가 과소지 마을 구성에 어떤 상관관계를 끼치는지 살펴봄

2) 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적 확장

관계인구를 정책에서 도입한 첫 지역은 야마나시현이다. 야마나시현은 2017년 ‘야마나시 연계(linkage) 프로젝트’를 통해, 교류인구 중에서도 야마나시와 관련성이 높고 귀속 의식이 높은 인구를 ‘연계인구’로 소개하였다(이소영·김도형, 2021). 연계인구는 앞서 정의된 관계인구와 유사 개념으로, 인구유형의 스펙트럼에서 정주활동으로부터 거리감이 있으나 지역에 호감을 갖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했다(류영진, 2020).

일본 중앙정부에서 관계인구 개념을 언급한 시기는 2016년부터다. 일본 총무성은 ‘앞으로의 이주·교류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검토회’⁵⁾에서 공식적으로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하였다. 2018년에는 관계인구가 지역재생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서 채택하였다. 총무성 지역자립지원과에서는 2018년에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함으로써, 33개 지자체를 채택하고 ‘지역과 관계가 있는 사람’과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관계인구를 구분하였다. 2019년부터 위 사업명이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으로 바뀌면서, ‘관계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창출형’, ‘저변확대형’, ‘저변확대형 외국인형’의 4가지로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용했다. 총무성 관계인구 사업은 2020년에도 지속되었으며, 참여기관에 25개의 지자체가 더해지며 상한 500만엔~900만엔 선에서의 자금이 조달되었다. 2021년부터는 불확실한 평가지표(KPI) 측정을 이유로 사업을 임시로 중단하였다. 관계인구 사업 중단은 관계인구 도입에 있어 명확한 성과지표와 카운트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확한 관계인구 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현 상황으로는 어렵지만, 국토교통성이 2020년 18세 이상 성인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인구수를 1,827만 명(일본 인구의 15%)으로 추정했으나, 이것이 사업의 성과인지는 모호하다.” (총무성, 2022)

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적 확장에서는 사업추진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였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자체의 선도적 시도와 학술적 논의는 중앙정부가 공식화·사업화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표 6>과 같이 관계인구 정책적은 2017년이 ‘도입기’가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총무성 관계인구 사업시기(2018~2020)는 ‘확장 및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오히려 관계인구에 대한 모호성이 대두되었다. 관계인구의 장점은 인정하나,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발전되어야 하며, 사업에 따른 실효성 검증이 요구된다.

<표 6> 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적 확장의 시기적 구분과 내용적 구분

사업주체명	시기적 구분	내용적 구분
야마나시현(지자체)	도입기	야마나시와 연관 높은 인구를 연계인구로 정의
총무성(중앙정부) → 지자체에게 예산 조달	확장 및 정체기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2018)
		‘관계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창출형’, ‘저변확대형’, ‘저변확대형 외국인형’으로 세분화(2019)
		관계인구가 지역과 보다 깊게 연결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조직 심화 지원(원격협동 등 다양한 방식)(2020)

출처 :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5)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2. 새로운 인구개념의 필요성 : 인구특별법 제정과 생활인구

1)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정주민구 증가였다. 이제는 인구의 양적 확대에만 맞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민현정·김병진, 2022 : 152).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아래 <표 7>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인구 유형을 포함한다.

<표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정의

유형	정의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유형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에 따르면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정주민구로서 ‘거주자’, 체류유형과 외국인을 일정 기간 지역에 방문하여 머무는 ‘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인구는 이 거주자와 체류자 분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관계인구가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 사이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인구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법에서 정의한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⁶⁾

한편,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전부터 국내에서 사용한 생활인구 개념은 서울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인구 개념은 ‘서울의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⁷⁾’이며 거주자와 체류자 모두가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 생활인구 개념에서 체류자가 ‘유동인구(流動人口) 관점에서 확대된 유형⁸⁾’이라면, 법적 개념으로서의 생활인구 가운데 체류자는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 관점에서 설정된 유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적 개념으로서 생활인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롭게 정의된 인구개념으로 지역의 정주민구와 체류인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6) 관계(關係)와 생활(生活)이라는 용어의 의미상 차이로 이 연구에서는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함

7)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dataVisual/seoul/seoulLivingPopulation.do>) / 접속일 2022.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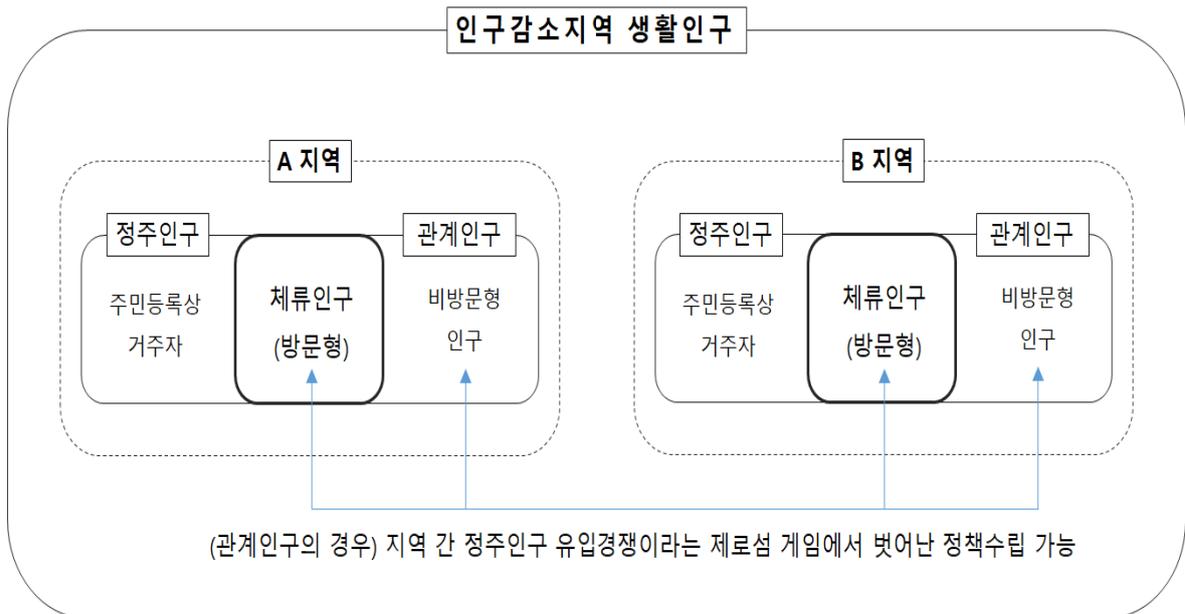
8) 서울시의 생활인구 개념은 유동인구의 개념에 가까우나, 인구특별법상의 생활인구 개념은 흘러 지나가는 인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일정 정도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함(이소영, 2022,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2022.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로 극복하는 지역소멸 / 접속일 2022. 10.23.)

2)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형과 생활인구

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인구 현황과 지역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알맞은 생활인구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용어인 생활인구 개념에서 여러 인구의 유형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법적 생활인구는 크게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참고하면, 체류인구가 아니지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비방문형 관계인구’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수립 시 고려해볼 수 있는 인구유형이다.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지자체의 생활인구 관련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유동인구, 관계인구, 체류인구 등 다양한 정책용어가 활용되고 있다(이소영, 2022).⁹⁾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최상위 인구개념을 생활인구로 설정한다면, 생활인구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관계인구는 방문형과 비방문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림 3] 생활인구 개념에서 정리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형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유형 중 체류인구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전략이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류인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며 체류주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목표집단별 전략과 사업이 강구될 수 있다(이소영, 2022).¹⁰⁾

9) 서울시의 생활인구 개념은 유동인구의 개념에 가까우나, 인구특별법상의 생활인구 개념은 흘러 지나가는 인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일정 정도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함(이소영, 2022,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2022.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로 극복하는 지역소멸 / 접속일 2022. 10.23.)

10) 서울시의 생활인구 개념은 유동인구의 개념에 가까우나, 인구특별법상의 생활인구 개념은 흘러 지나가는 인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일정 정도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함(이소영, 2022,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2022.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로 극복하는 지역소멸 / 접속일 2022. 10.23.)

IV. 생활인구 특성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1. 사례연구 개요

1) 분석 방법과 내용

생활인구 설명요인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는 생활인구 개념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으로 내용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6년 이후 관계인구에 대해 논의한 일본 학술문헌과 한주성(2019) 및 류영진(2020)의 논문 및 국내 관계인구 보고서다. 이 중 관계인구에 대한 정의 및 제시를 한 학자의 문헌을 기준으로 18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대상은 관계인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강원도 평창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설문조사 지역은 평창읍 내 올림픽시장 인근이다.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2년 8월 7일까지 진행하였고 설문 대상은 평창읍에 거주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평창읍을 방문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설문내용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설명 요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총 148부를 진행하였고 결측치를 가진 설문응답 5개를 제외하고 144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Python 3.8버전 statsmodels 모듈과 SPSS 25버전을 교차 활용하였다.

2. 사례연구 결과

1) 내용분석 결과

생활인구 개념의 설명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 및 보고서를 학술콘텐츠 플랫폼(DBPIA)와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를 통해 ‘관계인구’, ‘關係人口’를 입력하여 18개의 문헌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관계인구의 특성을 문장 단위로 정리해보았으며, 이를 비슷한 키워드끼리 묶어보았다. 셋째, 비슷한 키워드끼리 일종의 그룹을 만들어 ‘설문조사 문항’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8〉 설문조사 문항과 관계인구 세부요인 구성

출처	관계인구 설명	공통 특징
류영진 (2020)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들을 새롭게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였음 사시데는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와의 차이를 교류인구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를 가시화(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이들이라고 설명	협력활동 (7)
大和田順子· 風見正三 (2020)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作野 (2019)	외부 주체가 관여함으로써 지역주민까지 촉발되어 새로운 주체적인 움직임을 유발 계속되는 전통이나 시끄러움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자치가 행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지역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作野, 2019)	
총무성 (2018)	담당자로서의 관계인구는 지역산업으로서 지역과 사람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 관계인구의 입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역인재의 육성도 중요해짐	
류영진 (2020)	사시데는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와의 차이를 교류인구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를 가시화(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이들이라고 설명	관계심화 의사 (4)
作野 (2019)	이주와 교류를 통해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	
총무성 (2018)	커뮤니티 간의 지속적인 교류	
山本 (2017)	관계성을 심화시켜 지역과의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의 지역 만들기의 가능성을 넓힘	지속적 교류 (4)
류영진 (2020)	지방에 참여하고 관여함	
한주성 (2019)	해당 지역을 지속적인 드나듦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됨	
총무성 (2018)	커뮤니티 간의 지속적인 교류 지역(고향)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외의 인재와의 지속적이고 복층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이 중요함	
류영진 (2020)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근간을 방문경험에서 도출	지인 (4)
총무성 (2018)	관계인구의 입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역인재의 육성도 중요해짐 지역(고향)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외의 인재와의 지속적이고 복층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이 중요함	
田口 (2018)	외부인이 촉매가 되어 또 다른 외부인과 지역간의 새로운 연계가 창출되기도 함	
作野 (2019)	사시데(2016)에 의하면, 그들은 '로컬'이나 '소셜'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근거하는 생각을, 농산어촌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함	로컬살이 호감 (3)
田口 (2017)	관계인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로 '이주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있는데, '로컬'이나 '소셜'이라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시골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가치관 전환 등으로 '전원회귀'가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국민이 농어촌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을 심화시켜 가는 프로세스	
作野 (2019)	지역과제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지역 자원 활용을 비즈니스로서 실행	지역자원 (2)
作野 (2019)	지역과제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지역문제 (2)
大和田順子· 風見正三 (2020)	스스로 관계인구로서,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	
류영진 (2020)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들을 새롭게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였음	개인활동 (2)
한주성 (2019)	해당 지역을 지속적인 드나듦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됨	

출처	관계인구 설명	공동 특징
丸山 (2021)	관계인구의 그라데이션을 관여 및 관심의 강도순으로 보자면 기부는 물품 구입보다 상위 단계	기부 (2)
	어떤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특산품을 몇번이나 주문하거나 '고향납세'와 같은 형태로 반복 기부를 한 관계인구	
岩永 (2019)	방문 지역 애착을 가진 관계인구가 형성되는지에 대해 전국 관광지로의 여행자 약 2만명의 조사에 의해서 검증됨	지역애착 (2)
田口 (2018)	지역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의지 있는 협력자	
丸山 (2021)	특산품 구입자에게 다른 매력적인 포인트를 알리기 위해 지역 크라우드 펀딩 등을 소개한다.	특산품 (2)
	어떤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특산품을 몇번이나 주문하거나 '고향납세'와 같은 형태로 반복 기부를 한 관계인구	
大和田順子· 風見正三 (2020)	스스로 관계인구로서,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	효능감 (1)
丸山 (2021)	특산품 구입자에게 다른 매력적인 포인트를 알리기 위해 지역 크라우드 펀딩 등을 소개한다.	지역정보 수신 (1)
田口 (2018)	외부인이 촉매가 되어 또 다른 외부인과 지역간의 새로운 연계가 창출되기도 함	지역정보 전달 (1)
한주성 (2019)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과거에 그 지역에서 근무나 거주, 체재 경험이 있는 관련자, 비즈니스나 여가생활, 지역지원자 등을 계기로 지역을 오고 간 타향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음	거주 (1)
		체류 (1)
		근무 (1)
松村茂 (2020)	동경권·긴키권 등 대도시권의 인재가 부업으로 텔레워크로 지방 기업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 지기에, 관계인구가 생겨나고 장차 이주로 이어질 것	원격 근무 (1)
田口 (2018)	이는 도시지역에서 고수입을 얻으면서도 스트레스를 견디는 삶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로컬'이나 '소셜'이라는 도시에는 적었던 연결고리를 찾아 시골을 지향하는 움직임	현 거주지 스트레스 (1)
류영진 (2020)	한 지역의 사회문화 전반에 이르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하여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극을 공급할 수 있는 관계인구가 중요	사회적 이슈(1)

내용분석은 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정리를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로 아래 <표 9>와 같다. 예를 들어 '협력활동'이라는 변수는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의 가시화',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외부 주체가 관여함으로써 지역주민까지 촉발되어 새로운 주체적인 움직임을 유발' 등으로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력 활동 변수를 '해당 지역에서 지역민과 협력활동 진행 경험'으로 정리하였다.

〈표9〉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변수 의미	분석 척도
협력활동	해당 지역에서 지역민과 협력 활동 진행 경험	7점 척도
관계 심화 의사	해당 지역과 관계를 심화시킬 의사	
지속적 교류	해당 지역의 특정 요소와 지속적 교류	
지인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지인이 거주하는지 정도	
로컬살이 호감	평소 로컬 살이에 대한 관심	
지역자원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	
지역문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개인활동	해당 지역에서 개인적인 활동 경험	
기부	해당 지역 개인·기관·단체에 기부 경험	
지역애착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	
특산품	해당 지역의 특산품 구매	
효능감	해당 지역을 바꿀 수 있겠다는 느낌	
지역정보 수신	지역정보를 받아본 경험	
지역정보 전달	지역정보를 보내본 경험	
거주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본 경험	
체류	해당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해본 경험	
근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본 경험	
원격 근무 여부	본인의 직업이 원격 근무가 얼마나 가능한지 정도	
현 거주지 스트레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사회적이슈	어떤 지역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결과로 정리된 변수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값을 요인분석으로 통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총 20개 변수가 4개 요인으로 그룹핑되었다. 요인1은 기부 변수가 제외된 총 5개 변수로 분류되었다. 요인2는 지역정보 수신·전달, 원격근무 변수가 제외된 4개 변수로 분류되었다. 요인3과 요인4는 특산품 변수만 제외되어 각각 3개 변수로 분류되었다.

요인1은 지역자원, 효능감, 협력활동, 개인활동, 지역문제 변수로 구성된 그룹으로 어떤 지역과 관계성이 있는 주체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을 한다는 내용에서 ‘지역기반 활동’으로 그룹명을 설정하였다. 요인2는 사회적이슈, 관계 심화 의사, 로컬살이 호감, 현 거주지 스트레스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개인이 로컬살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지역의 사회적이슈에 관심이 있는지와 이를 심화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 그룹명을 ‘개인의 내적동기’로 설정하였다. 요인3의 경우에는 거주, 장기체류, 근무와 같이 지역에 머무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룹명을 ‘직주 및 체류경험’으로 설정하였다. 요인4는 지속적 교류, 평창애착, 지인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어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룹명을 ‘지역 내 네트워크’로 설정하였다.

〈표10〉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공통성	성분				신뢰도	
		1	2	3	4	Alph 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요인1 (지역기반 활동)	지역자원	.733	.802			.854	.869
	효능감	.709	.732			.833	
	협력활동	.710	.729			.857	
	개인활동	.583	.703			.828	
	지역문제	.626	.694			.843	
	기부	.493	.542			.862	
요인2 (개인의 내적동기)	사회적이슈	.573		.735		.835	.851
	관계 심화 의사	.637		.725		.817	
	로컬살이 호감	.696		.689		.831	
	현 거주지 스트레스	.529		.670		.843	
	지역정보 수신	.666		.586		.820	
	지역정보 전달	.637		.542		.818	
	원격근무	.405		.435		.843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거주	.820		.884		.800	.880
	장기체류	.840		.876		.892	
	근무	.686		.763		.785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지속적 교류	.715			.757	.804	.829
	평창애착	.803			.756	.786	
	지인	.599			.663	.761	
	특산품	.565			.527	.785	
Kaiser-Meyer-Olkin 측도		.86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69.681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					

3) 생활인구 특성도출 소결

우리나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인구의 자연증감량 감소보다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운데 인구의 자연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의 유출은 지방 소도시의 존립마저 위협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에 따라 연구와 정책도 이어졌다. 최근 일본에서는 상주하지 않고도 도시의 활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인구(關係人口)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계인구 개념은 최근 들어 인용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맞는 개념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관계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일본의 연구에서조차 구조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인구 개념의 구체적인 활용을 위해 개념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본의 연구를 토대로 관계인구 개념을 설명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개 설명요소가 도출되었다. 설명요소는 협력활동, 관계 심화 의사, 지속적 교류, 지인 거주 여부, 로컬살이 호감, 지역자원 활용, 지역문제 해결, 개인 활동, 기부 여부, 지역 애착, 특산품 구매, 지역 변화 효능감, 지역정보 수신, 지역정보 전달, 거주 경험, 체류 경험, 근무 경험, 원격 근무 여부, 현 거주지 스트레스이다.

20개의 설명요소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관계인구는 지역기반 활동, 개인의 내적동기, 직주 및 체류경험, 지역 내 네트워크와 같은 크게 네 가지 요인을 참고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둘째, 관계인구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인은 개인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개인이라는 틀에는 개인의 내적동기가 포함되며 지역이라는 틀에는 지역 내 네트워크가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지역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기반 활동과 직주 및 체류경험이라는 요인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관계인구는 개인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인구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관계인구 개념의 논의와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개념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상이 스스로를 관계인구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자주 방문하는 사람 정도의 기준에 그쳤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스스로를 관계인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특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VI. 참고문헌

국내문헌

- 민현정·김병진, 2022,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의 시사점과 과제 -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광주전남 정책연구, 제26권
- 류영진,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1권 1호, 2020. pp. 6-28.
- 이상호. (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Vol.3,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 이성재, 한국환.(2021).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응 연구 - 전라북도 읍면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구,0,21-47.
- 이소영 · 김도형.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2021, pp. 4-23
- 이정환. (2017). 인구감소와 지속가능한 지방만들기 - 지방소멸(地方消滅)을 둘러싼 논점. 일본공간, 21, 194-223.
-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방식>.
- 한주성, “농업교육과 체험에 의한 관계인구의 지역활동 -서울시와 지방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4호, 2019. pp. 439-448.
- 이지윤. (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우리 동네는?.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147>
- 정영효. (2022.04.23). 4년새 사라진 마을 164개…일본 경제부흥 허리 잘렸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236903i>)
- 이소영, 2022,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2022.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를 극복하는 지역소멸 (<https://www.nabis.go.kr/coverStoryDetailView.do?menucd=320&gbnCode=COM&refCode=140&comIdx=713>) / 접속일 2022. 10.23.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dataVisual/seoul/seoulLivingPopulation.do>) / 접속일 2022.10.23.
- 법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https://www.law.go.kr/LSW/lInfoP.do?efYd=20230101&lsiSeq=242885#0000>) / 접속일 2022.10.23.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접속일 2022.10.23.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커뮤니티와 도시설계연구실 2022년 하계답사 인터뷰(2022.08.19.)

국외문헌

- 田坂逸朗(다사카 이즈오), “巻き込みと促しあいのファシリテーション——地域ブランドに関する諸活動からの考察——”, 『広島修大論集』, 제59권 1호, 2018, pp. 89-102.
- 作野広和(사쿠노 히로카즈), “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関係人口の意義と可能性” 『経済地理学年報』, 제65권 1호, pp. 10-13.
- 佐藤俊治 · 畑澤巧(사토 준지 · 타쿠미 하타사와). “若者の社会動態の分析と関係人口を機軸とした移住・定住施策の推進について”, 『地域協働研究 研究成果報告集』, 2020년 제2호, 2020, pp. 30-37
- 山本司(야마모토 츠카사), “「関係人口」を広げる！「まちづくり会社」の「大きな挑戦」～「郡中二百年祭記念事業」に学ぶ～”, 『調査研究情報誌』, 2017년 제2호, 2017, pp. 26-37.
- 大和田順子 · 風見正三(오와다 준코 · 카자미 쇼죠), “関係人口による地域価値共創プログラムと地方創生人材育成モデル-宮崎県五ヶ瀬町「関係人口創出事業」を事例に-”, 『国際 P2M 学会誌』, 제15권 1호, 2020, pp. 164-182.
- 총무성(總務省).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2018, pp. 1-6.
- 川端亮 · 佐藤功 · 宮前良平(카와바타 아키라 · 사토 이사오 · 미야마에 료헤이), “関係人口論からみる大学の地域とのかかわり : 西予市野村地域における事例”, 『大阪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紀要』, 2021년 제47권, 2021, pp. 75-80.
- 日本創成会議, 「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 <http://www.policycouncil.jp/pdf/prop03/prop03.pdf> (검색일: 2017.6.4.)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 8

청년의 지역정착을 통한 인구구조 개선방안

: 광역자치단체의 제조업 기술집약도가
청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여양모 / 공동연구자 김혜지, 김진영

청년의 지역정착을 통한 인구구조 개선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제조업 기술집약도가 청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여양모/공동연구자 김혜지, 김진영

본 연구는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의 기술집약도에 따른 청년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의 출산율과 지방소멸을 막기 역부족이다.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인구의 절반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밀집해서 살고 있으며(통계청, 2021). 2020년 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49.2%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으며 전체 종사자의 52.3%가 근무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집값 상승, 인구과밀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청년의 순유출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기관 이전 완료 시점인 2015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김유현, 2021), 2020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105개로 46%를 넘어섰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년 기간의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로 만들어 분석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기관이 이동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는 제외하였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조업 기술집약도와 청년인구의 이동에 관한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세대가 보이는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할 것이다.

일자리는 모든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역의 순이동률을 증가시키지만(김현우·이두현, 2021:319), 제조업 기술집약도의 차이에 따라 청년인구 이동의 패턴이 다른 세대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기술집약도가 낮은 중기술이나 저기술 제조업의 경우 장년층이나 고령층도 기술 습득이 상대적으로 쉽다. 반대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이나 고기술은 청년층이나 고령층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 즉, 청년들은 장년층과 고령층과 경쟁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청년층이 특화될 수 있는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광역행정구역 안에서 기술집약도 수준이 높은 제조업 사업체가 분포한다면 그에 따른 청년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지역 인구구조도 안정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I. 서론

1. 연구 배경

□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인구의 절반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음(통계청, 2020:2)
 - 2020년 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49.2%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으며 전체 종사자의 52.3%가 근무함(통계청, 2021:10-11)
 - 교육의 경우, 상위 1위부터 10까지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으며, 20위권 이내에 들어간 대학 중에서도 지방에 소재한 대학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3개 국공립대학뿐(중앙일보, 2021)

□ 국토의 불균형발전은 경제적 불평등, 각종 사회 인프라 격차를 확대한다.

- 수도권은 집값 상승, 인구과밀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청년층의 순유출로 생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나타남
- 수도권 소재 115개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김유현, 2021), 2020년 기준 전국 226개¹⁾ 시군구 중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05개임
 -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46%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대도시와 거리가 멀거나, 행정구역상 '군' 단위에 속해 있음

□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유입의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이지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구이동 연구는 미비하다.

-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통계청 기준 2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2020년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가 인정한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음
- 제조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성장 둔화를 최소화하고 고용 안전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함(황경인, 2021:3)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20.12.31.)에 따르면 전국의 행정구역은 226개이다. 광역시의 자치구는 69개, 군은 5개(부산1, 대구1, 인천2, 울산1)가 있다. 도의 시는 75개, 군은 77개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연구 목적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380조 2000억 원²⁾을 투입하였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³⁾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정부 주도의 보육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저소득 가정에 초점을 두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실시함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실시함
 -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을 강화하면서, 미혼자가 빠르게 사회에 정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실시함
 -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에 초점을 두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실시함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실시함

〈표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구분	추진과제	주요 지원 내용
1차 기본계획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률 30% -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추진 - 영유아 보육·교육 확대 - 아동수당 지급 - 불임부부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2차 기본계획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 양육수당 확대 -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3차 기본계획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청년고용지원 - 신혼부부 주택지원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 어린이집 이용 비율 확대 - 난임부부 지원

2) 감사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15년간(2006~2020년) 추진한 사업을 집계한 결과임

3) 조선비즈, 380조원 쏟아부어도 OECD 꼴찌, 합계 출산율 0명대... 줄줄 새는 저출생 대책, 2022-02-23일자 기사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2/23/R63JMBRVMVBNJDTQQMYRTDYDQE/, 검색일 2022-10-24)

구분	추진과제	주요 지원 내용
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2040세대 안정적인 삶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 육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휴가 확대 -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 고용평등 추진체계 확립 및 경력 단절 예방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4차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수당 신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 - 3+3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지원 제도 확대 -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방지와 균형발전 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일자리 부족, 생활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인구구조의 핵심인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과 지방 유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1년 기준, 20대의 인구는 각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7만 명이 순유입되었음
 - 저출산 대책, 일자리 대책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수조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의 관점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취업 지원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한요셉, 2022)
 - 지방기업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 인구 유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함
 -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수도권 집중이 가중될 수 있음
 -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 정책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부추기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별 산업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조율해야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구분하여 청년의 인구이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대한 틀을 제공할 것이다.
 - 제조업은 설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전입 및 철수가 쉽지 않은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⁴⁾ 제공이 가능하여 소비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길은선, 2021:5-6)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업종통계지도⁵⁾에 따르면,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 사업체들이 수도권과 대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가장 낮은 저기술 제조업 사업체들은 같은 기간 강원도와 전라남북도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청년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구이동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핵심요인으로(이상립, 2020:4),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로 대표되는 제조업과 청년의 인구이동을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제조업 고용은 작은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노동 비축(labor hoarding)을 하는 제조업은 코로나19 생산 충격을 고용으로 전파하지 않았다(길은선, 2021:5-6).

5) 2006년에서 2019년까지의 기술집약도에 따른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분포의 변화 결과를 의미한다(출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업종통계지도(sgis.kostat.go.kr)).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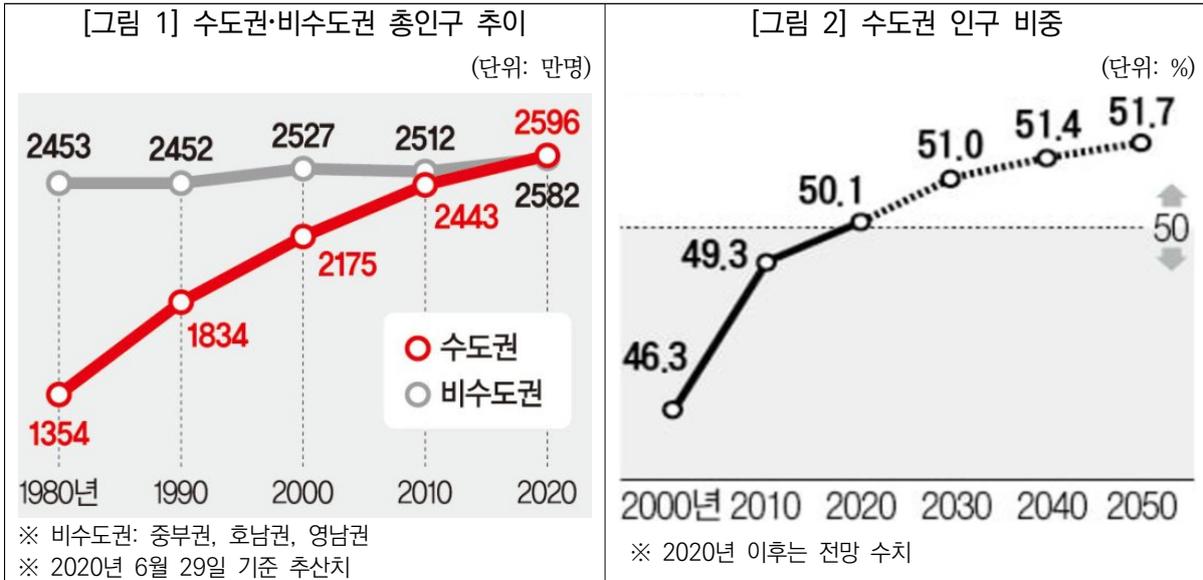
1) 인구이동 현황

□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인구의 전출과 전입은 인구구조와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
 - 실제로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2,583만명)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남(통계청, 2020)
 - 수도권 인구 비율이 2017년 이후 매년 0.2%p씩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로 2018~2021년 4년간 수도권 인구 비율 상승폭이 이전 8년간 상승폭 대비 2배를 기록함⁶⁾
 - 특히 2000~2019년 기간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89%로 비수도권 0.06% 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임(김태환 외, 2020:6)
-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음
 - 김태환 외(2020:10)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40대 미만 인구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대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당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급감할 수 있음(수도권 40대 미만 인구 감소 -2,713,335명, 비수도권은 -5,211,554명)
 - 2020년 기준,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4.4%)이며, 25-49세 주요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세종(42.2%), 서울(39.8%), 경기(39.3%), 인천(38.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국토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된 세종시를 제외하면 주요 생산연령인구는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에 따르면,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서울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2020년 대비 2050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2050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 전남-49.5%, 경북-48.9%, 강원 47.2% 순으로 높고, 세종-28.8%, 경기-36.4%, 서울-37.0% 순으로 낮음)

6) 경향신문, 지방 청년층 '수도권 이동' 심화... 정부, 균형발전·공급 확대 '딜레마', 2022-05-29일자 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5292206005, 검색일 2022-10-25)



출처1: 한경경제,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2020-06-29일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918881>, 검색일 2022-10-25)

출처2: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쏠린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2020-06-29일자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006291821044660>, 검색일 2022-10-25)

□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발생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남

- (인구)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 증가함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3%, 청년층의 5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50.5%, 사업체 수의 47.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김현우·이준영, 2022:25)
 - 비수도권에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시군구가 다수 있음⁷⁾
 - 예시1. 2022년 1월 기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많은 도와 광역시는 경북(19), 전남(18), 강원(16), 경남(14), 전북(12), 충남(11) 순이며, 소멸 고위험 지역은 40곳으로 경북이 19곳으로 가장 많음
 - 예시2. 2022년 3월 신규소멸 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제조업 쇠퇴 지역 및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결국 경기도 포천시와 동두천시 2곳을 제외한 9곳은 경남, 충북, 전라, 강원도 비수도권 지역임
- (경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규모의 차이가 발생함(김현우·이준영, 2022:25-26)
 - 지역의 생산규모를 나타내는 GRDP(지역내총생산)도 수도권이 52.5%를 차지함
 - 1인당 GRDP는 수도권은 3,710만 원, 비수도권은 3,410만 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300만원이나 높음
 -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카드 개인 사용액은 수도권이 75.6%, 비수도권은 24.4%
 - 수도권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의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2022년 6월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6,460천원, 비수도권 2,142천원)

7) 미래한국, [데이터로 보는 세상] 늘어나는 지역 - 도시간 격차, 2022-03-17일자 기사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52>, 검색일 2022-10-25)

〈표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차이(경제지표 기준)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GRDP(2020년)	52.5%	47.5%
1인당 GRDP(2020년)	37.1백만원	34.1백만원
신용카드 개인 사용액(2021년)	75.6%	24.4%
주택매매가격(중위단위값) (2022년 6월 기준)	6,460천원	2,142천원
1,000대 기업 수(2020년)	86.9%	13.1%

출처: 김현우·이준영(2022:25) 발췌

- (교육) 지역에 따라 교육 수준이나 교육시설의 접근성 차이가 나타남
 - 전국 336개 대학 중 수도권 소재지의 대학은 116개(34.5%)이며,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11.3%)은 비수도권의 대학(5.7%)보다 높으며, 서울 소재지 대학의 경쟁률(12.2%)은 비수도권 대학보다 2배 이상 높음⁸⁾
 - 2021년 기준, 서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보면 정시 합격생의 78.4%가 수도권 출신이고, 기타 도 지역은 11.7%, 5대 광역시는 9.9%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울대 입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분포를 보면, 경기도(204개교)와 서울시(195개교)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음⁹⁾
- (기타) 이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발생하고 있음¹⁰⁾
 - (벤처기업·벤처투자·창업기획자 모두 수도권 집중) 첨단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술 집약 벤처기업의 59.3%가 수도권에 있으며, 이 중 매출 천억 이상 기업의 62.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 (연구개발인력 61.8%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은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나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도입도 곤란한 상태임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생산설비 수도권 이동) 기술혁신의 속도 증가로 생산현장과 연구개발의 결합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제조산업 등 생산인프라가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 발생함

□ 따라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는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노동 인구인 청년들은 자신에게 더 높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하게 됨
 - 최예슬 외(2015:27) 연구에서는 노동인구는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선택하며, 자신의 기대효용을 더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소득 수준이나 임금 수준을 제공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8) 경상남도청, 주요시책 소개 - 왜 부울경 메가시티인가?, 2022-09-05(최종 수정일)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1010000, 검색일 2022-10-22)

9) 미래한국, [데이터로 보는 세상] 늘어나는 지역 - 도시간 격차, 2022-03-17일자 기사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52>, 검색일 2022-10-25)

10) 경상남도청, 주요시책 소개 - 왜 부울경 메가시티인가?, 2022-09-05(최종 수정일)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1010000, 검색일 2022-10-22)

- 특히 경제학에서 청년층의 인구이동은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위주로 고려하며,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청년유출은 당연하다고 인식함. 왜냐하면 지방의 노동시장은 취업의 가능성, 임금 격차, 일자리 양과 질, 기업의 규모 등 경제적 변수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임(박진경·김도형, 2020:41)

2) 인구이동 관련 이론

□ 인구이동의 개념

- 인구이동은 지역 사이의 움직임인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함(하상근, 2009:311)
 - 인구이동이란, “지역적 공간적인 인간의 움직임으로 전제하여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주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하상근, 2009:311)
 - 인구이동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덜 우호적인 환경을 피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에 요구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음(이상림, 2009:44)
 - 최근에는 지역이 가진 특성의 차이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김리영, 2019:50)
- 인구이동은 선별적 인구의 지리적 이동으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킴
 - 현대사회에서의 인구이동은 ‘보다 나은 지역을 찾아가는 적응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인구 구조 및 사회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조혜중, 2006)
 - 청년층의 유출이 증가할수록 노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인구구조의 변화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김리영, 2019:50)
 -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저하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이찬영, 2018:708)

□ 인구이동의 발생 원인

- 인구이동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에 따라 발생함
 - (개인적 요인) 인구이동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젊은층일수록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반면 고령층일수록 인구밀도가 낮거나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선택함(홍성효·유수영, 2012:15)
 - (경제적 요인)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쇠퇴,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는 총부양비 증가로 인한 청·장년층의 조세부담을 가져옴(김동신, 2021:180)
 -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나 소속감이 높을수록(김동신, 2021), 의료 및 문화 서비스 혜택이 높은 지역이라고 인식할수록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 및 거주 의사가 증가함(임태경, 2021)

- (정책적 요인) 정책적 측면에서의 인구이동은 Tiebout(1956) 가설에 기초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함

○ 지역 간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거시적 모델과 미시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음

- 거시적 모델은 인구이동의 총제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을 설명하며,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의 시각에서 인구이동을 설명함
- 미시적 모델은 개인의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파악함
- 거시적 모델은 인구 유입의 개별적 특성 요인 파악이 어렵고, 미시적 모델은 인구이동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어려워 두 모델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 수행함(이진희, 2020:11)

○ 거시적 모델은 경제학적 모델, 중력 모델, 배출·흡인 요인 모델 등으로 구분됨

- 경제학에서는 인구이동을 ‘노동력의 이동’의 관점으로 바라봄
 - 노동자 개인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함(Harris & Todaro, 1970; 김유현, 2021:340)
 - 인구는 지역 간 소득 격차를 기반으로 이동하며, 실제 소득 격차보다 기대소득의 격차(실제 소득 격차 x 직장 구할 확률)로 인해 발생함(Todaro, 1981; 하상근, 2009:312)
- 중력모델은 인구이동의 패턴을 잘 설명함
 - 지역 간 인구 이동에 인구 규모와 거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Ravenstein, 1885)
 - 인구 규모는 해당 지역의 거주 편익을 의미하며, 결국 인구이동은 물질이 낙하하는 중력법칙과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됨(김유현, 2021:341)
- 배출·흡인 요인 모델은 경제학적 인구이동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됨
 - 해당 모델에서는 현재 거주지 지역과 목적지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함
 - Lee(1996)은 “현재 거주지에서의 배출요인(pushing factor)과 여러 다른 목적지로부터의 흡인요인(pulling factor)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인구이동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고자 노력함(이상림, 2009:46)

○ 미시적 모델은 인구이동 현상을 개인의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함

- (소비동기이론) 인구이동을 소비재(consumption goods)로 인식하며, 인구이동은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비동기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음(이진희, 2020:21)
- (지역 어메니티 소비이론) 지역의 편의성이나 쾌적성, 학교나 문화시설 같은 공공재 우위성이 인구이동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Shields et al., 2005)
 -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에 대한 선호 차이로 인해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남
- (티부가설) 각 개인은 자신이 주거할 지역의 삶의 질이나 공공서비스 수준을 기반으로 거주할 지역을 선택함
 - 결국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지역 간 차이로 인구이동이 발생함(김유현, 2021:341)

2. 선행연구 검토 (작성예정)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적 측면)

- (지역적 측면)

○ 청년층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청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요인 관련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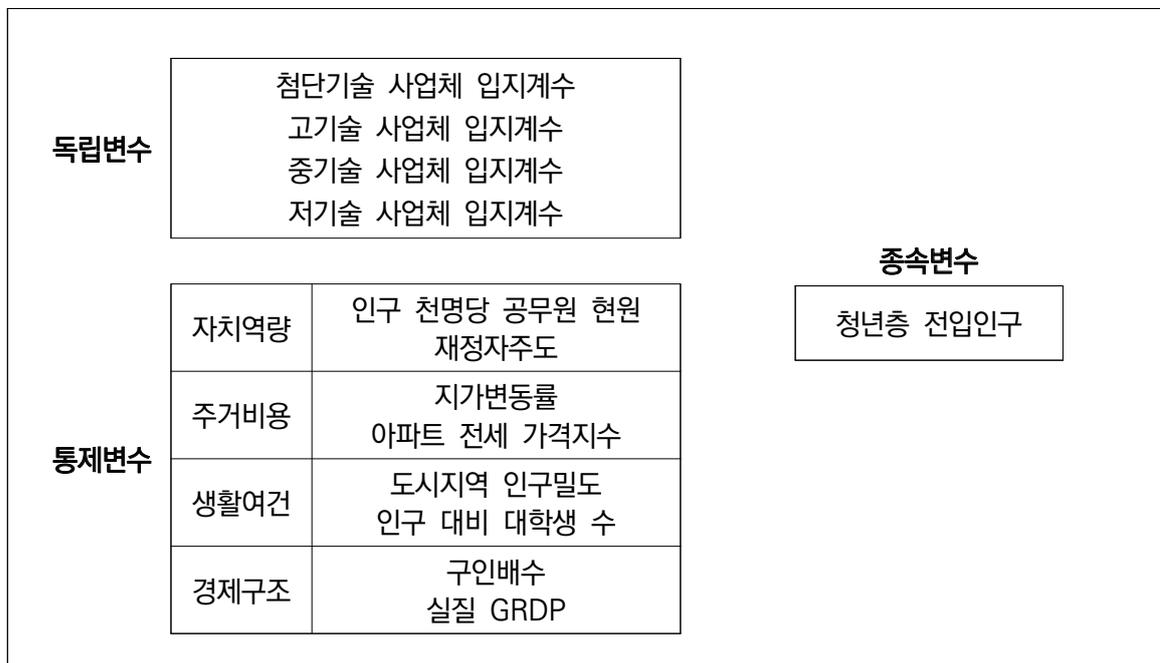
이를 종합해보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작성중)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업 산업 기술집약도가 청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의 특성을 기술집약도 수준별 제조업 사업체 입지계수로 파악하여 지역으로 청년 입구가 전입하는 원인이 되는지 검증하고자 함
 -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동하는 행태를 파악하고자 인구이동의 관점을 전입인구에 초점을 둠
 -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음
 - 기술집약도에 따라 입지계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기술집약도에 따라 청년 인구 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첨단기술 업종 입지계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층 전입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 고기술 업종 입지계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층 전입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림 3] 연구모형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06년부터 2019까지 총 14년 기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 분석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종속변수인 제조업 산업별 입지계수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총 14년으로 함
-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
 -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무원의 유입으로 인구이동의 행태가 분석의 범위를 넘어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함

2) 연구방법

- 문헌적 검토를 토대로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해 광역자치단체 제조업의 기술집약도와 청년인구 이동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년 인구이동 패턴을 연구하고자 함
 - 데이터는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조업의 기술집약도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를 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로 분류하여 수집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년 기간의 패널데이터로 구성함
 -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는 자치역량, 주거비용, 인구 분포, 지역경제상황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함

3. 변수 및 분석방법

1) 변수

2) 분석방법

- 완성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해서 제조업 기술집약도별 사업체 입지계수와 청년 세대 인구이동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독립변수는 제조업의 기술집약도별 입지계수로 측정하며, 예를 들어 첨단기술의 입지계수는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첨단기술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일정 지역이 첨단 기술로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냄
 - 종속변수는 청년 전입인구로 측정하며, 청년층¹¹⁾ 인구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범위를 만 19세에서 34세로 한정함

○ 회귀식(청년층 전입인구 $it = a_0 + a_1 * \text{제조업 입지계수}it + a_2 * \text{통제변수}it + \epsilon it$)은 t시점의 광역 자치단체 i로의 청년층 전입인구와 제조업 입지계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표 3〉 변수 설명 및 조작적 정의

구분		정의	출처	
독립	첨단기술 사업체 입지계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고기술 사업체 입지계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기술 사업체 입지계수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저기술 사업체 입지계수	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종속	청년층 전입인구	만 19-34세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제	자치역량	인구 천명당 공무원 현원	일정 인구단위(천명)로 환산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원	행정안전부 (공무원인사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재정자주도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주거비용	지가변동률	기준시점 대비 해당시점의 지가지수의 상승률(12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전국지가변동률 조사)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을 기준시점과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12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인구분포	log 도시지역 인구밀도	인구를 도시지역 면적으로 나눈 수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 대비 대학생 수	대학생 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	교육통계서비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경제상황	구인배수	구인인원 대비 구직건수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
		log 실질 GRDP	시·도 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통계청(지역소득)

출처: 저자 작성

11) 청년층은 「청년기본법」에서 제시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IV. 분석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예정)

V. 결론 (최종보고서 작성 예정)

1.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지역의 일자리가 인구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김현우·이두헌,2021: 319), 제조업 기술집약도에 따른 청년 인구이동 형태를 분석하였다.
- 다른 세대와 경쟁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청년층이 특화될 수 있는 제조 산업을 갖춘 지역으로 청년층의 인구이동 행태가 나타날 것임

2. 정책적 함의

- (연구 기대효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 본 연구결과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공존 사회를 위한 이론적 지식 구축에 기여하며, 정부정책의 적용가능성 진단에 객관적 경험적 자료 제공이 가능함
- 기술집약도에 따른 제조업 사업체의 연도별 지역별 분포의 변화, 각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인구 분포의 변화 분석, 인구의 유입 유출 추세 분석 등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도출이 가능함
- (연구의 활용방안)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 지방정부의 적정인구 유지 및 지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장기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지역별 청년인구 이동에 내재된 지역 간 환경적 특성 등 고정요인(fixed effects)을 통제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 청년들은 정보통신, 바이오기술, 항공 우주기술 등 첨단기술과 고기술이 발달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검증하여, 이에 따른 전 국토에 균형 있는 분포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연구의 한계 및 제안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유현. (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5(2), 337-367.
- 길은선. (2021).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i-KIET 산업경제이슈. 1-16.
- 김동신. (2021). 지역 청년층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21, 177-205.
- 김리영. (2019). 지역 간 특성차이가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35(2), 49-57.
- 김현우·이준영. (2022).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3-33.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405.
- 이상립.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동.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3), 43-72.
- 이상립.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 & Focus, 395, 1-9.
- 이진희. (2020).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에 근거한 지역 인구 활력 평가. 충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 임태경. (2021).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4), 247-273.
- 조혜종. 2006. 「새 인구론: 인구의 공간적·사회적 접근」. 푸른길.
- 최예술·김민영·임업. (2015). 지역노동시장권의 특성이 핵심생산인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 계획, 50(5), 25-42.
- 하상근. (2005).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 309-332.
- 한요셉. (2022).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KDI 정책포럼. 1-8.
- 홍성효·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황경인. (2021).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버팀목. i-KIET 산업경제이슈. 1-12.

(국외문헌)

Harris, John R., and Michael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126-142.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48: 167-227.

Shields, M., Goetz, S. J., and Wang, Q., 2005, "Outmigration from Northeast US: The Relative Role of Economic and Amenity Differentials", In Green, G. P., Deller, S.C., and Marcouiller, D. W., eds., *Americans and Rural Development: Theory, Methods and Public Policy*, Cheltenham: Edward Elgar, 78-94.

Tiebout, Charles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Todaro, Michael P. (1981).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Longman Inc.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

경향신문, 지방 청년층 '수도권 이동' 심화... 정부, 균형발전·공급 확대 '딜레마', 2022-05-29일자

미래한국, [데이터로 보는 세상] 늘어나는 지역 - 도시간 격차, 2022-03-17일자

조선비즈, 380조원 쏟아부어도 OECD 꼴찌, 합계 출산율 0명대... 줄줄 새는 저출생 대책, 2022-02-23일자

통계청 보도자료,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2020-06-29일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쏠린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2020-06-29일자

한경경제,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2020-06-29일자

발표 및 질의응답 9

도농협력 워라벨 플랫폼 구축(안)

: 화성시 및 도농상생지역
(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지자체)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여주희 / 공동연구자 정성덕, 차유미

도농협력 워라벨 플랫폼 구축(안)

화성시 및 도농상생지역(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지자체)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여주희 / 공동연구자 정성덕, 차유미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지방의 소도시와 어촌 그리고 농촌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유출 및 감소가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이 이렇게 축소 소멸과정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국토의 불균형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짙어짐으로 인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체제가 붕괴될수 있다. 이에 지방의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수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이 아주 많이 회자 되는 단어이다.

“축소도시(schrumpfendeStadt)”라는 용어는 독일의 학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Häußermann and Siebel, 1988). 독일 도시의 인구와 경제 쇠퇴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구(舊)동독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축소도시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축소도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형수 등(2016)에 따르면, 한국의 77개 시(市) 단위 행정구역 중 20곳이 축소도시에 해당된다. 지방소멸의 개념은 일본 지방의 소멸에 대하여 나왔는데 지방소멸이란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고, 청·중년층의 인구가 유출돼 인구가 과소화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가속화되며,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어려워지는 등 자족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유선종·노민지, 2018) 이상호(2018)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은 총 89곳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거시적인 문제점과 영향을 알아 볼수 있으나 독특한 형태나 지자체 등 해당 지역에 커스터마이징된 연구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지역적인 특징 등을 분석하여 실시 해보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행정구역(화성시)의 서쪽지역 면(面) 단위 행정구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플랫폼이라는 대안점을 제시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중에 도시와 농촌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도시는 인구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은 소멸위험을 겪는 화성시를 분석하고,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과 동탄의 2지구를 대상으로 미시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인구 감소와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는 데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에 대한 원인과 징후 및 대책 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화성시 서쪽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을 인지하여 화성시 농어촌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다. 셋째, 추후 분석을 실시하여 화성시 지방소멸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연대감을 위하여 플랫폼과 매칭을 통하여 균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발전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수행된 것이 많다. 농어촌 면(面) 단위 행정구역과 도시의 교류 및 매칭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신도시로 대변되는 동탄 2지구와 화성시의 농어촌으로 대변되는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을 사례로 하여 도농교류의 내용과 주민의 반응 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연구 성격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을 선택 하였다. 화성시는 신도시로 대변되는 동탄2지구 지역이며 서쪽으로,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자체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화성시의 조사와 더불어 미시적인 화성시의 동탄 2지구 도시지역과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과 매칭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는 동탄, 향남, 봉담, 남양과 같은 택지개발 지구와 병점, 발안, 사강 등 구도심지역이 존재하며, 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도시임

- 동탄1·2신도시와 같이 외부 전입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화성시에 대한 정체성과 공동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그래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간 발전 전략과 함께 마을공동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계획도 필요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공생하는 지역의 도농 공동발전을 위하여 도농균형 발전을 위한 선행연구, 문헌자료, 온라인 조사, 보도자료, 지역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연구의 컨셉과 방향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를 하기에 앞서 공간적 범위로 화성시를 지정하였고 미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동탄 2지구와 우정읍을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화성시의 전반적인 현황과 지역의 공동체 사업 등을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동탄의 대표적인 지역 엄마 카페인 맘카페와 해당지역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동체 사업 지역민과 공무원 등 뉴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에 종사자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에게 해당하는 내용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전직 시의원 및 시의회 관계자로 부터도 향후 시정 중에서 도농상생 및 비슷한 사업에 대한 현황 등 자료도 수집하였다.(도표 및 자료는 “2018년도 화성시 동서간 발전전략 수립 연구” 인용 참고)

구 분	주요 자문 내용
진홍석 박사	도농 매칭을 위한 협의, 마이스, 포럼 주민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진익준 청운대학교수	농촌의 관광컨텐츠를 위한 공간 설계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교육
장우철 송실대학교수	농어촌 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기업과 공존을 위한 지역 각종 농어촌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박종현 한림대학교수	도농 교류 플랫폼 구현을 위한 컨텐츠 도시인의 NEEDS 도시와 농촌이 살아 남는법

○ 비전과 중장기전략을 수립함

- 현재 상태의 화성시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정 및 트렌드 등을 파악
- 주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민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며,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매칭전략과 비전을 도출함



□ 화성시 개요

○ 위치와 면적

- 화성시는 한반도 중서부에 속하는 경기도의 서남해안을 끼고 위치해 있으며 육지로는 5개의 시와 접하고 바다로는 서해의 아산만으로 충청남도과 경계되며 서쪽의 용진군과 접하고 안산시 선감도, 대부도를 마주하고 있음
- 화성시 동서간 최대거리는 57.1km, 남북간는 35.3km임

[표 2] 화성시 행정구역 면적

읍면동	면적(km ²)	구성비(%)	읍면동	면적(km ²)	구성비(%)
합계	689.7	100.0	4읍, 10면, 10동		
봉담읍	42.7	6.2	정남면	40.7	5.9
우정읍	59.7	8.7	동탄면	32.1	4.7
향남읍	50.0	7.3	진안동	7.0	1.0
남양읍	67.0	9.7	병점1동	1.5	0.2
매송면	27.5	4.0	병점2동	1.0	0.2
비봉면	38.5	5.6	반월동	4.0	0.6
마도면	31.7	4.6	기배동	4.2	0.6
송산면	54.0	7.8	화산동	11.6	1.7
서신면	43.2	6.3	동탄1동	5.3	0.8
팔탄면	51.0	7.4	동탄2동	2.3	0.3
장안면	67.7	9.8	동탄3동	1.9	0.3
양감면	31.1	4.5	동탄4동	14.1	2.0

자료 : 화성시(2017), 제56회 화성통계연보

* 2018년 1월말 기준, 4읍, 9면, 13동으로 변경([표 1] 화성시 도시연혁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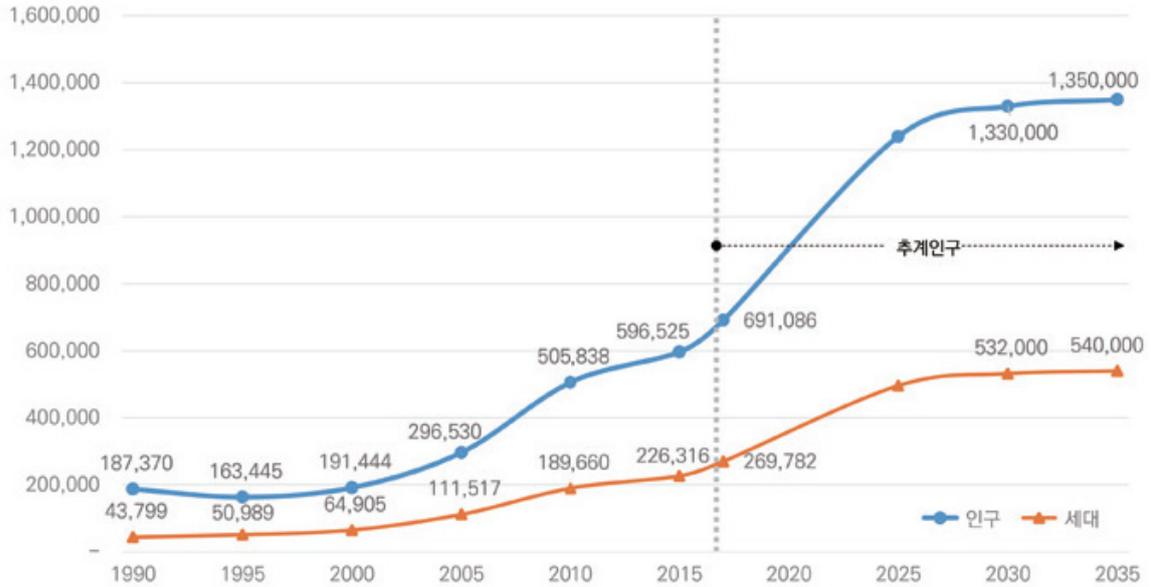


자료 : 화성시(2017),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그림 1] 화성시 행정구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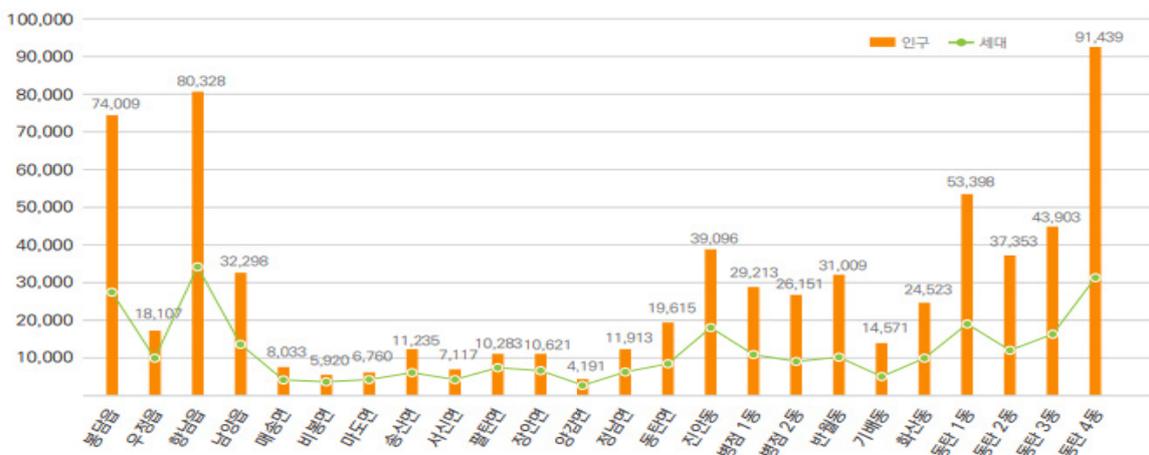
○ 인구 변화

- 2017년 12월 기준 화성시는 269,782세대에 691,086명이 거주함
- 시 인구는 1990년 187,370명, 2000년 191,444명, 2010년 505,838명 등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27년간 약 50만 명 (1990년 대비 약 2.8배) 증가함
-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2035년 계획인구 135만명 예측함
- 동부지역(구 태안, 동탄권)에 전체 인구의 약 61% 거주
- 지난 5년 인구변화, 서부지역 약 4만명, 동부지역 약 12만명 증가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해당 연도(1990~2017) / 화성시(2017),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그림 2] 연도별 화성시 인구 및 세대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7년 12월 기준

[그림 3] 화성시 읍면동별 인구 및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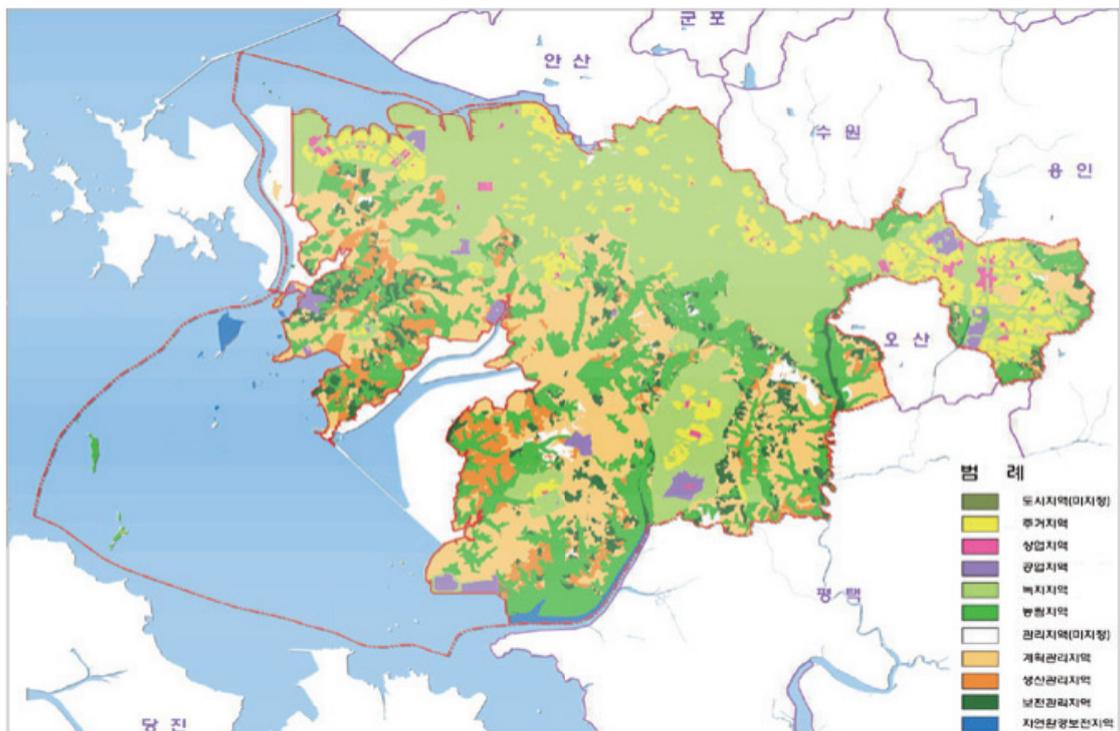
○ 토지이용현황

- 화성시 용도지역별 현황은 2015년말 기준으로 총 1,126.13km² (육지부 844.00km², 해면부 282.13km²)임

[표 3] 용도지역 지정현황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계		1,126.13	100.0
육지부	합계	844.00	74.9
	도시지역	316.57	28.1
	주거지역	51.69	4.6
	상업지역	5.90	0.5
	공업지역	14.56	1.3
	녹지지역	241.53	21.4
	미분류	2.89	0.3
	관리지역	282.10	25.0
	계획관리지역	178.18	15.8
	생산관리지역	47.96	4.3
	보전관리지역	55.71	4.9
	미세분 관리지역	0.25	0.0
	농림지역	134.99	12.0
	자연환경보전지역	4.87	0.4
미지정	105.45	9.4	
해면부	합계	282.13	25.1
	자연환경보전지역	38.96	3.5
	미지정	243.17	21.6

자료 : 화성시(2017),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자료 : 화성시(2017),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그림 4] 화성시 용도지역 현황도

○ 교통현황

- 화성시 광역도로망은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이 위치하여 수도권 전역과 연계 가능
 - 이외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2개, 시도 76개, 국지도 4개 노선 존재
 - 총 도로연장은 2015년 기준 785.9km(고속도로 85.5km, 국도134.5km, 지방도 228.6km, 시도 207.0km, 미개통 130.3km)이며, 포장률은 83.4%임
- 주요 내부 교통축으로 남북을 통과하는 5개축(국도 1호선, 39호선, 43호선, 77호선, 82호선)과 동서를 통과하는 4개축(국지도 82호선, 지방도 310호선, 312호선, 313호선, 318호선, 322호선)으로 구성됨
- 철도망은 남북축으로 수도권고속철도(SRT),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복선전철이 운영중이며, 서해선과 수인선 복선전철은 공사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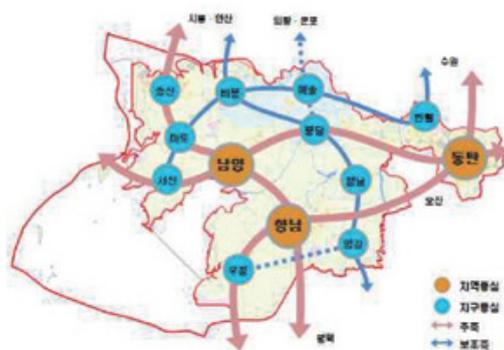
○ 자연현황

- 화성시 지세는 동북쪽으로 비교적 깊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은 저산성 구릉지대, 서쪽은 저평한 평야지대를 이룸
- 화성시의 주 수계방향은 광주산맥의 여맥인 북부와 동부의 구릉성 산지에서 황구지천, 오산천, 신리천, 남양천, 발안천 등으로 유하
 - 화성시내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황구지천, 오산천), 지방하천 23개소에 총 유로연장은 122.17km임
- 화성시 해안선의 총 길이는 72.40km(육지부 54.90km, 도서부 17.50km)이며, 도서는 유인도 3개소(제부도, 입파도, 국화도), 무인도 20개소임
 - 23개 도서 총 면적은 2.00km²이며, 유인도에 397세대 713인 거주하고 있음
 - 화성시 갯벌은 서신면 송교리, 제부도, 궁평리, 우정읍 매향리에 존재
- 화성시 시화호 매립지 일부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지정되어 있음
 - 동·식물상은 제2차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2001년) '수원·화성' 권역의 문헌조사결과 식물 74과 137속 197종, 조류는 66종 등이분포되어 있음
 - 화성시의 생태계 보호관찰지역은 매송면에 위치한 반월 칠보산, 송산면에 위치한 시화호, 남양읍에 위치한 화성호가 있음
 - 법정 보호지역은 총 3개소로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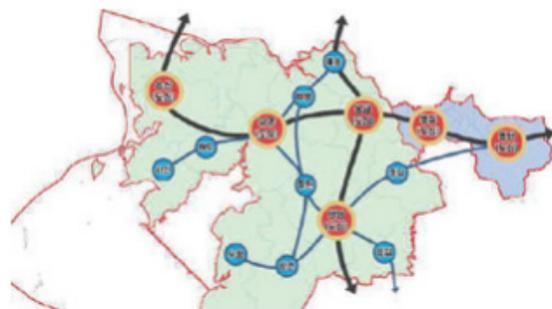
II. 현 화성시 농어촌지원 정책의 문제점

1. 화성시 도시기본계획(“2018년 화성시 동서간발전 전략수립 연구” 인용 발췌)

- 2035년 화성시 미래상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도시, 화성!
- 화성시 인구는 2025년 약 130만명, 2035년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공간구조는 6도심, 9지역중심, 개발축은 2주축, 4보조축으로 구상
 - 동 생활권 : 교통 및 문화, 첨단산업 중심기능의 ‘스마트 정주환경도시’
 - 동탄 : 4차산업, 융복합, 주거·문화·교육
 - 병점 : 역사·문화·관광, 교육, 주거환경
 - 서 생활권 : 교육 및 행정, 관광 중심기능의 ‘에코 생태자족도시’
 - 향남 : 4차산업거점, 융복합도시, 해양관광, 문화
 - 봉담 : 교육, 말관광산업, 주거환경
 - 남양 : 서해안해양관광, 휴양·레저, 역사문화
 - 송산 : 주거, 향만, 6차산업, 말산업



2020년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기본계획

2.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 화성의 본질적 핵심가치 “더 나은 기회의 땅,

화성(The Land of Better Opportunity to Grow, Hwaseong)”

- 화성시 2025년 비전 “서해안 시대 U Creative City,

화성(U Creative City of the West Sea, Hwaseong)”

- 도시 비전의 5대 하위 목표는 환 황해 경제벨트의 지식산업 발전거점, 국제적 수준의 해양 관광레저 중심지, 삶의 품격과 여유가 있는 문화예술 도시, 시민이 주인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자연의 숨결이 살아있는 첨단 전원도시
- 2025 화성의 도시상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1.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강화
2. 해양레저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문화전략을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4. 선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조성
5. 첨단 기술의 적용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표 4] 권역별 발전전략

구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발전 목표	품격의 첨단 문화 예술 중심지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국제적인 산업·물류 중심지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메카(GMT 조성, Art Cluster 벨트 조성) • 첨단산업 육성(IT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고급서비스 거점(병점역세권 개발, 동탄1,2신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관광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USKR 조성, 해양체험관광 개발, 해양생태관광 개발) • 자동차산업 육성 (Auto IT 클러스터 조성, 무탄소 연구도시) • 행정·복지 거점(행정기능 집적, 화성 행정로 조성, 웰빙 실버 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 기반 확대 (제2의 향남단지 조성, 랜드마크 TOD 조성) • 물류 거점(물류 클러스터 조성) • 생태문화 및 휴양관광 (화성호 지역의 경관농업 도입 및 생태관광지화)
구성비			



[화성시 권역구분도]

□ 도시재생 뉴딜사업

- 화성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구분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황계, 병점, 송산)
 - 도시재생 예비사업



화성 '고온항 어촌뉴딜 300' 본궤도



김학석·민정주 기자 발행일 2022-06-20 제9면

+가-

어촌·어항의 기본 인프라 및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고온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화성시는 우정읍 매항1.5리 고온항 일원에 대해 마을 주민의 지역 밀착형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어항과 배후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 어촌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고온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92억9천600만원(국비 65억700만원, 지방비 27억8천900만원)이 투입돼 관광자원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의 성장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화성시 주요 주민 의견

(화성시 동서간 발전전략 수립연구 2018년)

구역	주요 의견
1차 FGI (우정읍, 장안면, 송산면, 서신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제조업 공장 폐수, 미세먼지 배출 심함 • 동서간 공감 이슈 및 공동체 강화 조치 부족 • 폐기물처리장 등 주요 시설 입지 시 주민 의견 수렴 요구 • 지역 산림, 하천, 바다 적극적 보호 및 보전 • 농어촌 일손 부족 및 고령화 대책 필요
2차 FGI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도로폭 협소로 소방차량 등 진입불가 • 주거지역 주변으로 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필요 • 불법 쓰레기 투기 개선 방안 필요
3차 FGI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지 주차난 심각(주차단속, 주차장 설립 요청) • 대중교통 확충 및 자전거도로 개선 필요 • 서부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학습 또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 무단 쓰레기 단속 강화, 불법주차 단속 강화
4차 FGI (화산동,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의,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병점역 낙후지역 개선 • 좁은 보행자도로, 오래된 공원 밝은 가로등 설치 요구 • 미취학아동,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5차 FGI (봉담읍, 동탄면, 기배동, 반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도시이나 동쪽에 비해 상대적 미발전 • 지역 문화시설 부족 • 빌라, 마을 안 공장 등 단속, 규제 강화 • 소규모 동네에도 도시가스 등 확충 필요 • 소방도로 확충 및 주차장 설치
6차 FGI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양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환경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 필요 •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공장으로 인해 주민 생활 어려움 발생 • 지역별 불균형성장 및 소통체계 부족 • 동서를 연결하는 중간연결조직(소통기구) 필요 • 농기구 운행 어려움 발생, 원주민 보호 정책 필요

○ 자문회의 주요 의견(화성시 동서간 발전전략 수립연구 2018년)

- 전곡항을 더욱 매력있는 관광지로 개발시킨다면 화성시의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수산업에서 스마트폰만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양식이 가능한스마트 양식 제안
- 바르셀로나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관광객 니즈에 맞추어 관광도시로 성공한 사례처럼 화성시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비도시지역 난개발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화성시 지역특색에 꼭 맞는 전략 필요
 - 주민을 치유할 수 있는 전략, 포용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
 - 생태 거점마다 서부 지역의 체험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 주민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서부지역 견학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민원 제기하기 전에 화성시가 먼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드론 제시
 - 드론에 가스 센서를 달아 오염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시스템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행정은 사후서비스”라는 개념을 탈피하고자 노력해야 함
-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화성시의 민간업체와 협력하는 방법 제안

4. 화성시 농어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국가 예산 따오는 것만 집중

- 정작 지역의 NEEDS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점
 - 관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스마트 양식 예산 집행
 - 어촌지역의 필요사업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촌 뉴딜
 - 해당지역의 고질적인 특정인물 사업 지원
- 지역민 그리고 사업의 실행에 상반된 의견
 - 일부 지역민만을 위한 민원성 의견
 - 합의되지 않는 지역민들의 다툼
 - 협회, 단체 등 특정 잇권 단체 들의 잇권 챙기기
 - 일부 정치인의 해당지역 챙기기에 따른 예산 집중
- 제대로 된 SWOT분석의 미비
-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
- 주민 참여도와 공감도 부족
- 해당되는 사업의 정책 변화 등

2) 사업의 진행 결과물에 대한 판단

- 단지 계획대로 모든게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을 성공으로 치부
- 5년 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 예산 소요 내용으로 사업 진행 여부 판단(몇 % 예산 소요)
- 예산 소진이 사업의 종료라는 판단 등
- 일부 인원이 밀어붙이는 사업(감시와 견제 등 주민위원회에 회의 등)

3) 화성시민 인식조사(관광개발)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54.55%), 사업자(62.5%), 지역주민(59.26%) 모두 ‘아니다’라는 대답이 우세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특히, 공무원(53.85%)과 사업자(46.67%)가 지역주민(31.2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직접적으로 실무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무원(50%), 사업자(45.83%), 지역주민(40.74%)로 대부분 ‘아니다’라는 대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화성시 문화자원 현황과는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로 문화자원에 대한 홍보나 관심이 약한 것으로 보여 진다.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문화자원의 활용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에 있어 ‘아니다’라는 의견이 공무원(59.09%), 사업자(54.17%), 지역주민(48.15%) 모두 우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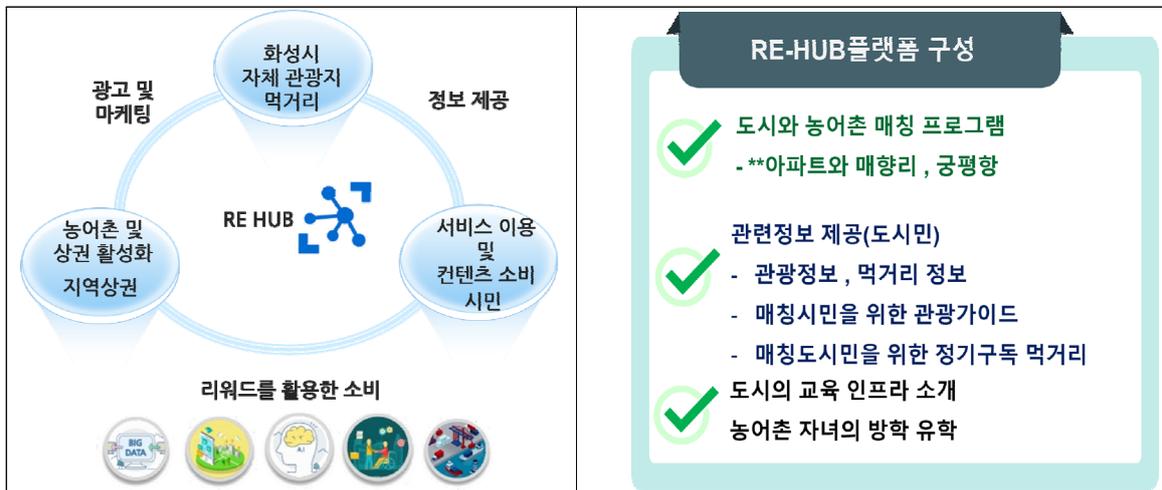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룹 모두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66.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 관광개발에 있어 중요한 질문을 중요도에 따라 선택한 결과에 있어 공무원은 ‘문화자원과의 연계(59.09%)’, 다음으로 ‘입지선정(접근성 등)’을 뽑고 있고 사업자는 ‘문화자원과의 연계(33.33%)’와 ‘주변의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은 ‘주변의 편의시설(38.46%)’, ‘입지선정(접근성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지역 주민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김형일)

Ⅲ. 도농 협력 플랫폼

1) 도농협력 플랫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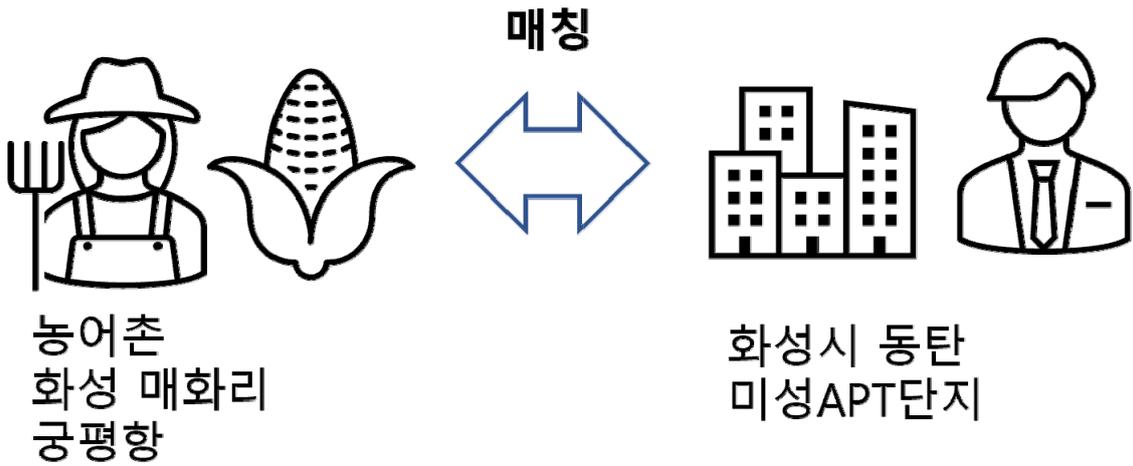
도농협력 플랫폼은 도시민의 NEEDS와 농어촌민의 NEEDS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다. 도시민은 짜여진 일상에서 탈출 그리고 각종 농어촌에서 이루어지는 힐링 프로그램, 관광,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1,2차 식품을 필요로 하며 농어촌에서는 각종 문화적 혜택, 자녀의 교육, 그리고 일자리, 농수산물의 판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서로의 NEEDS를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게 기획 의도이다.

중고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당근”중고 거래 플랫폼이 성공을 하였듯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서로의 필요한 사항을 거래 하듯이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위하여 서로의 자산 및 자원(교육, 관광, 농수산물 등)확인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대학생에게 농촌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과외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로 선정된 화성시는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자체 이다. 따라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지자체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새는 자원들을 관내에서 수용 소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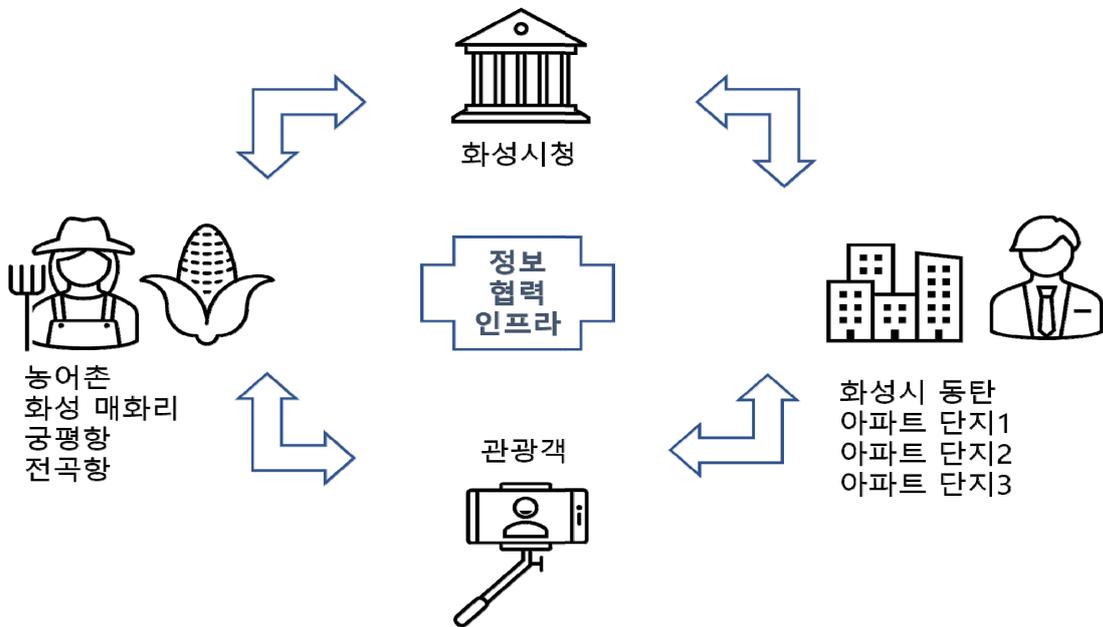


2) 도농협력 플랫폼 내용

- 같은 지자체 농어촌의 한지역과 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및 지역을 연결하여 자매 결연 및 마니또 매칭을 추진하고 해당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축산물을 전담으로 소비하고 홍보한다
 - 농어촌에서 길러지는 농어축산물의 생산되는 내용을 견학, 교육 프로그램화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 된장 고추장 담기, 반찬 담기 등 먹거리 공동 행사 추진
 - 내고장 관광가이드를 추진하여 해당하는 지역의 몰랐던 관광지를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가이드 추진.
- EX)화성시 궁평항 가이드 - 궁평항 어부 출신으로 궁평항 일대를 설명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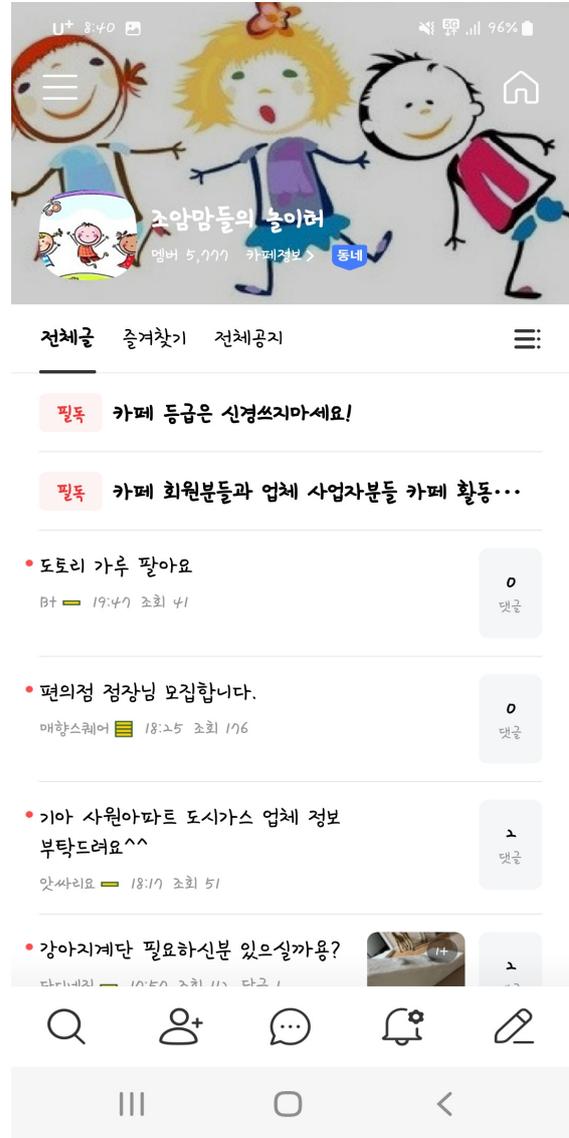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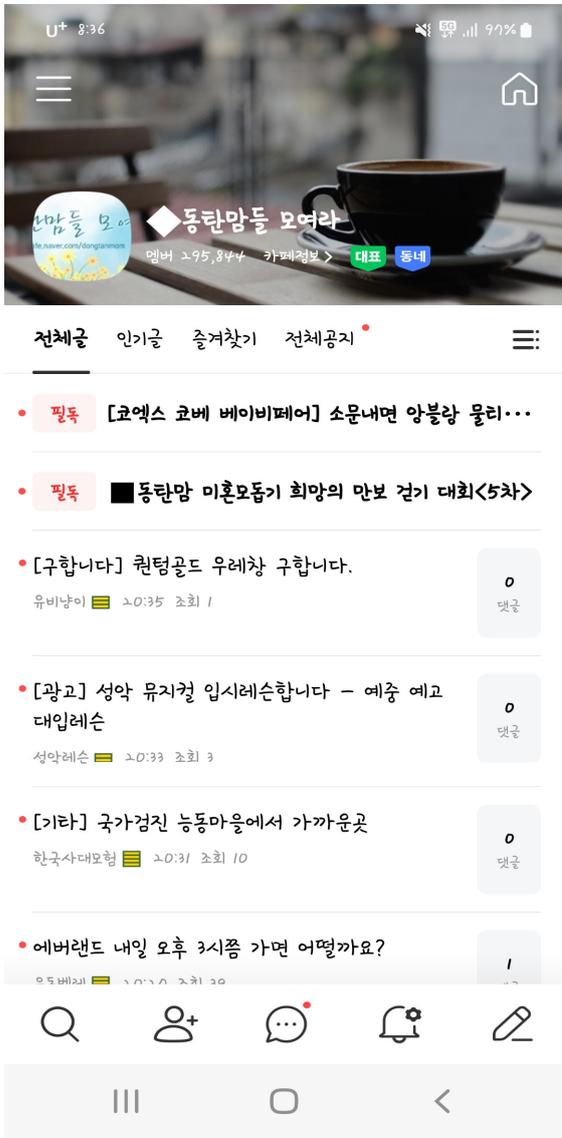
1. 도시 단지와 농어촌 지역 매칭
2. 먹거리 및 관광 단지 연결
3. 도시인에게 농촌의 관광 연결
 - 농어촌 지역 관광가이드
 - 관광가이드는 현지인 교육을 통하여 선발



- 화성시청은 인프라 구축과 홍보 및 행정적, 물리적 지원
- 농어촌 지역은 매칭 도시 전담에 대한 숙지, 최상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도시민은 관내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어축산물을 최단시간에 이용 소비
- 관광객과 도시민은 해당지역의 숨겨진 관광지를 해당 관광가이드를 통하여 저렴하게 관광

3) 도농협력 플랫폼 시민 의견

○ 동탄 맘카페, 조암맘카페 의견 취합 중



○ 해당지역(어르신, 학생) 시민 인터뷰



4) 도농협력 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

이번 연구를 위하여 몇몇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샘플링을 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여 본격적인 시범 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작은 도농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 동탄 주민의 힐링을 위한 우정읍 관광 프로그램
 - ◆ 우정읍에서 동탄주민과 함께하는 김장 관광프로그램
- 동탄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제공 받고 함께 만들어가는 김장 프로그램(초기 지자체 지원)
- 믿을수 있는 화성시 농수산물로 김장 추진
- 김장 시즌만 한시적으로 진행
- 우정읍 김장의 달인(마을어르신) 진행
 - ◆ 우정읍 마을버스 관광투어
- 우정읍 관내를 돌아다니는 마을 버스가 관광자원화(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마을버스에 마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추진)
 - ◆ 우정읍과 매칭된 지역의 주민들만 참여 할수 있는 자격 제한을 둬

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을 과 마을 그리고 도시민과 농어촌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초기 사업을 위한 시범 사업이나 샘플링 사업과는 다소간의 사업적 차이가 날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대규모의 설문 및 트렌드, 인식도 조사 그리고 SWOT분석등의 선행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미흡점 또한 한계점에 다다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시도가 사라져가는 농어촌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 발전 할수 있음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이에 다양한 방식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서 도시와 농어촌이 인접한 지자체가 자급자족과 더불어 도농상생이라는 명제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발표 및 질의응답 10

빈집을 활용한 한 달 살아보기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연구책임자 정혜진 / 공동연구자 김재식

빈집을 활용한 한 달 살아보기 서비스 플랫폼 개발

연구책임자 정혜진 / 공동연구자 김재식

I. 서론

□ 비수도권 지역의 빈집 비율 증가

- 빈집¹⁾ 비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도시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의 빈집 비율이 높은 편임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0년을 기준으로 도시 지역의 빈집 비율은 5.1%에 불과한데 반해, 농촌 지역의 빈집 비율은 11.5%에 달함
 - 빈집비율(%)은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빈집은 각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징은 노후화된 건물이 많으며 그만큼 범죄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표 1>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빈집 변화(2000-2020)

(단위: 호)

빈집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365,466(4.0%)	513,059(4.7%)	727,814(5.5%)	793,848(5.4%)	1068919(6.5%)	
도시	205,092(3.1%)	270,287(3.3%)	420,277(4.2%)	456,509(4.1%)	654,029(5.1%)	
농 촌	전체	160,374(6.1%)	242,772(8.6%)	307,537(9.5%)	337,339(9.9%)	414,890(11.5%)
	읍	41,889(4.9%)	71,884(7.0%)	96,397(7.4%)	108,210(7.4%)	141,843(8.8%)
	면	118,485(6.6%)	170,928(9.4%)	211,140(10.9%)	229,129(11.7%)	273,047(13.8%)

자료: 통계청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 빈집 비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전라남도는 2021년 현재 1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13.0%, 강원도 12.3% 수준인데 비해, 서울은 3.2%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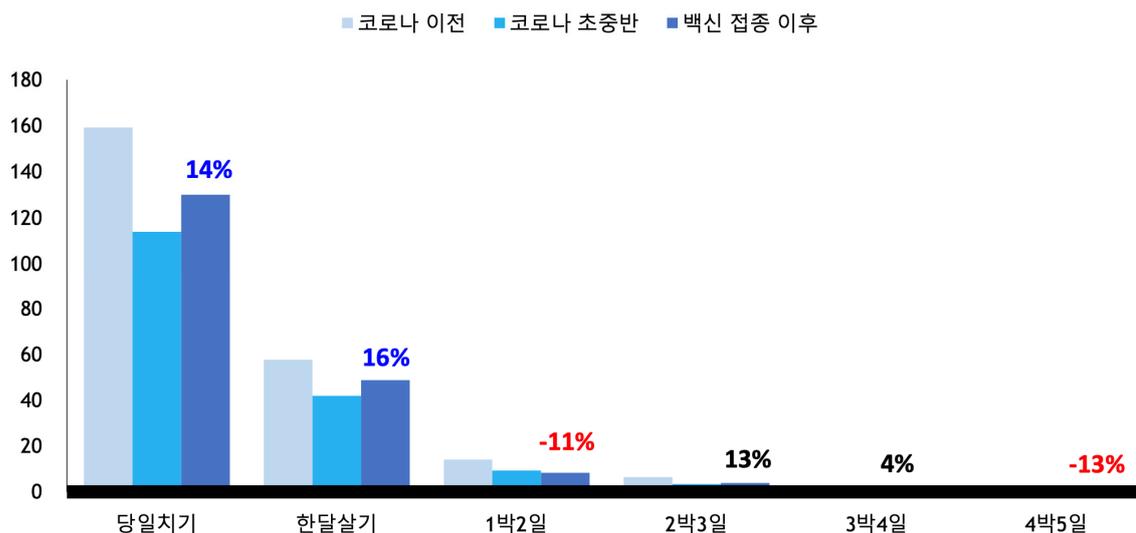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빈집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COVID-19 이후 ‘한 달 살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COVID-19 이후 여행 기간은 당일치기와 한달살기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한달살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16% 증가함(한국관광공사, 2021)

- 재택 근무,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며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1] COVID-19 기간 동안 여행 기간 관심 변화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 또한 한달살기와 가장 높은 관련도를 가진 단어는 “숙소”로서, 한달살기와 관련한 잠정적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약 한 달 여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한국관광공사, 2021)

-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달살이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숙소”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행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주변 환경(바다 등)과 가족(아이)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해석 됨

<표 2> 한달살이 여행 연관어 변화

No	코로나 이전	언급량	코로나 이후	언급량	백신접종 이후	언급량
1	숙소	14,501	숙소	6,650	숙소	3,276
2	아이	6,346	바다	3,167	바다	1,605
3	바다	6,109	가족	2,600	사진	1,243
4	가족	4,564	아이	1,639	가족	1,212
5	게스트하우스	3,404	맛집	1,449	촬영	578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 지자체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자체별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타지자체 거주자를 선정하여 숙박비와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경주의 경우 1팀당 숙박비는 최대 150만 원, 체험활동비는 최대 48만 원 지원
 - 경상남도도 2020년 통영, 김해, 하동 등 5개 시군으로 시작했다가 지원자가 늘어나 2022년 경남 전 지역으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비수도권 지역의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이용자 증대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선도

- COVID-19 이후 한 달살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플랫폼 사업과 서비스 제공
 - 에어비엔비나 팬션 등은 1박당 예약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 달 단위의 장기간 숙박을 예약하게 되면 사용자의 부담 수준이 증가할 수 있음
 - 숙박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관계 인구가 확대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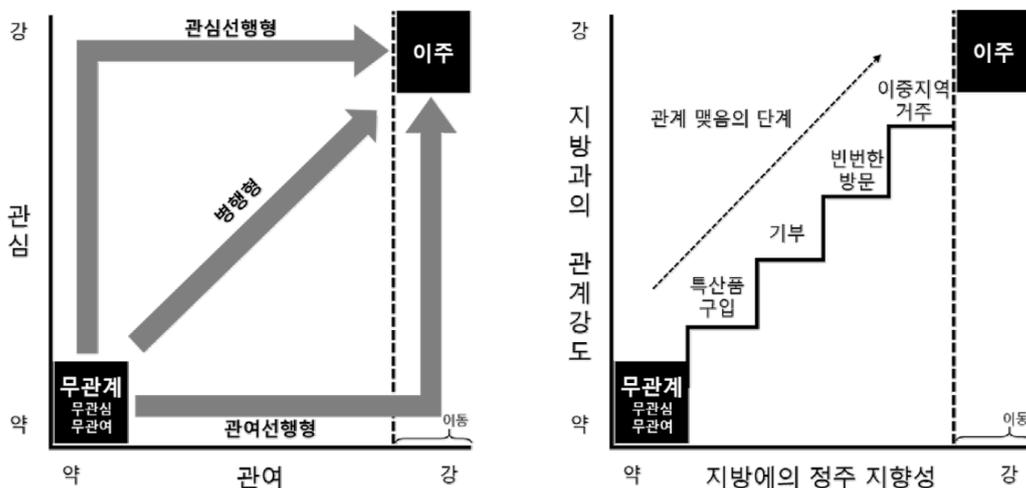
II. 비수도권 지역의 관계 인구 유입과 빈집 현황

1. 관계인구의 의미

□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과소화의 대안으로서 관계 인구 등장

- 일본 총무성(2018)에 의하면 관계 인구는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로서, 근거자, 원거자,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에 대한 관계를 가진자, 해당 지역을 오가는 바람의 인간으로 정의함
 - 관계 인구는 ‘제3의 인구’라고 인정되며,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음(류영진, 2020).
- 국내에서 관계 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라고 정의할 수 있음(이소형·김도형, 2021: 61)
 - 해당 개념에 따르면 관계 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주 인구와는 다른 인구 개념 이라고 볼 수 있음
- 관계 인구는 “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채롭다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주에 대한 인식이나 그에 기반한 정책에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오다기리, 2019: 20)
 - 관계 인구에 대해 오다기리는 지방에 대한 ‘관심’과 ‘관여’를 통해 관계인구의 층위가 다양하다고 제시한바 있음(오다기리, 2017)
 - 관계 인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집단이나 단체로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이 요구될 필요가 있음(류영진, 2020)
- 최근 관계 인구 가운데 관심도와 관여도가 낮은 단순 관광객의 수준에서 이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확산되고 있음(이소형·김도형, 2021)
 - 관계 인구와 이주성 간의 관계에서 이주에 대한 지역의 요구나 필요성에 대한 전제를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주에 대한 무게감을 덜 필요가 있음(류영진, 2020)
 -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 인구는 무관심에서 이주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단계들인 일률적이거나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림 2] 관계 인구의 도식과 단계



자료: 류영진(2020: 12).

2. 지자체 한달살기 지원 사업 현황

□ 한달살기 지원 사업 운영

-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한달살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 제7조²⁾ 및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의거함
- 지자체마다 한달살기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타시 군구의 거주자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온라인 홍보 활동이 가능한 지원자 중에 적격자를 선발하는 형태임
 - 지자체별로 선정기준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참가 목적, 유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서류 심사 상위 순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한달살기 지원사업 선정 기준(2022년 삼척시)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등 급				
		A	B	C	D	E
지원동기 (30)	√ 지원 동기의 적절성 및 충실성 √ 삼척시 이해도 및 참가의지	30	27	24	21	18
참가계획 (30)	√ 참가계획서의 충실성 √ 여행일정의 구체성	30	27	24	21	18
홍보계획 (40)	√ 홍보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홍보방법의 적절성 및 효과성	40	36	32	28	24
가산점 (10)	√ 구독자/팔로워 3,000명 이상 (+5) √ 구독자/팔로워 5,000명 이상 (+10)	총점 순				

자료: 삼척시(2022).

- 지금까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지자체는 주로 참가자 모집, 주거비 지원, SNS 홍보를 통한 여행객의 활동 모니터링 등 행·재정 비용 증대
 - 참가자 모집, 참가자의 활동 모니터링 등을 위한 행정적 비용과 주거비 및 활동비 지원(팀 당 약 200여만 원) 등 재정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표 4〉 한달살기 지원사업의 숙박비 지원(예시)

구 분	지 원 내 역		비 고
	여행기간	지원금액	
숙 박 비	01 ~07일차	(1박 당/팀별) 03만원	숙박차수별 지원 범위 내 숙박 실비 지원 예) 29박 체류 시 총 125만원 1~6박 3만원×6박 = 18만원 7~14박 4만원×8박 = 32만원 15~29박 5만원×15박 = 75만원
	08 ~ 15일차	(1박 당/팀별) 04만원	
	16 ~ 30일차	(1박 당/팀별) 05만원	

자료: 삼척시(2022).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숙박비의 경우 관광호텔, 휴양콘도, 펜션, 농어촌민박, 일반숙박업 등 참가자 자율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증빙서류에서 간이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하여 숙소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임

3. 빈집 현황 및 빈집 정비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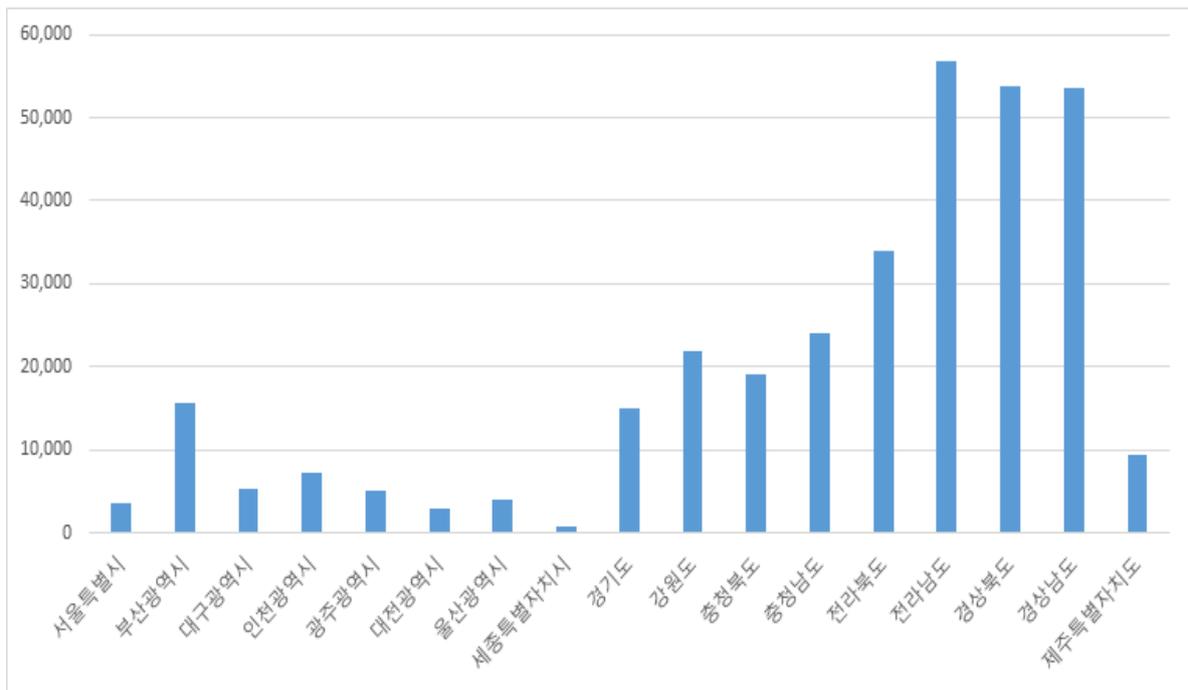
1) 빈집 현황 및 사회경제적 문제점

□ 빈집의 전국 분포와 공간의 종속성

- 2021년 7월 기준 전국의 단독주택 빈집은 331,733호로, 전라남도가 56,855호, 17.14%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빈집 합이 198,096호로 전국 빈집의 59.72%가 집중되어 있음

[그림 3] 전국 단독주택 빈집 분포(2021년)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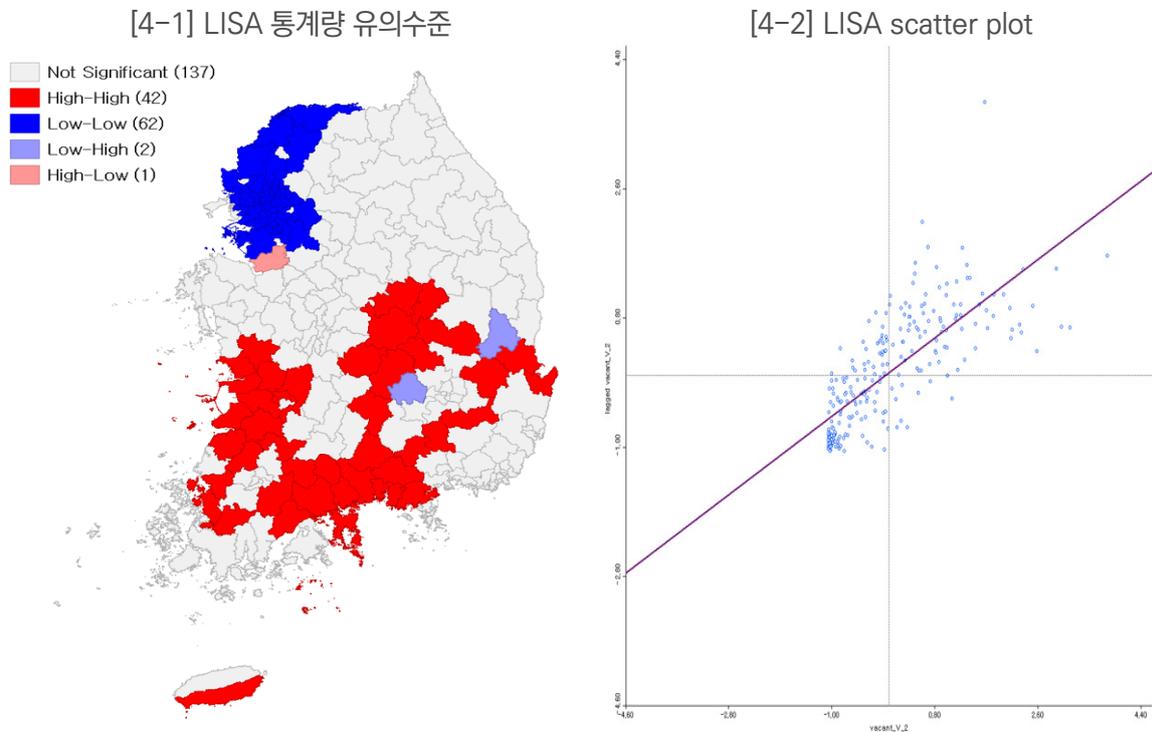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재구성.

- 특히 전라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모든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나, 경상남도의 경우 가장 빈집이 많은 남해군(4,380호)과 가장 적은 창원시 성산구(19호)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GIS와 국지적 모란지수(LISA)를 통해 인접 지역과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구분하여 군집 지역을 구분함

- LISA는 공간 자기상관성 정도를 보여주는 클러스터 맵(cluster map)을 제공하며, 특정지역과 그 주변 지역들을 각각 비교하여 주변지역과 뚜렷이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을 찾는 공간 분석 기법임
-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하는 유형을 지수 값이 높은 지역끼리 인접한 경우 HH(high-high), 낮은 값끼리 인접한 경우 LL(low-low), 높은 값과 낮은 값이 인접한 경우 HL(high-low), LH(low-high)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희연·심재현, 2011)
- 그림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HH(high-high)로 나타난 지역은 단독주택 가운데 빈집 주택이 많은 공간적 상관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빈집 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LL(low-low) 지역으로 공간이 확연하게 구분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전국 단독주택 빈집의 공간적 종속성(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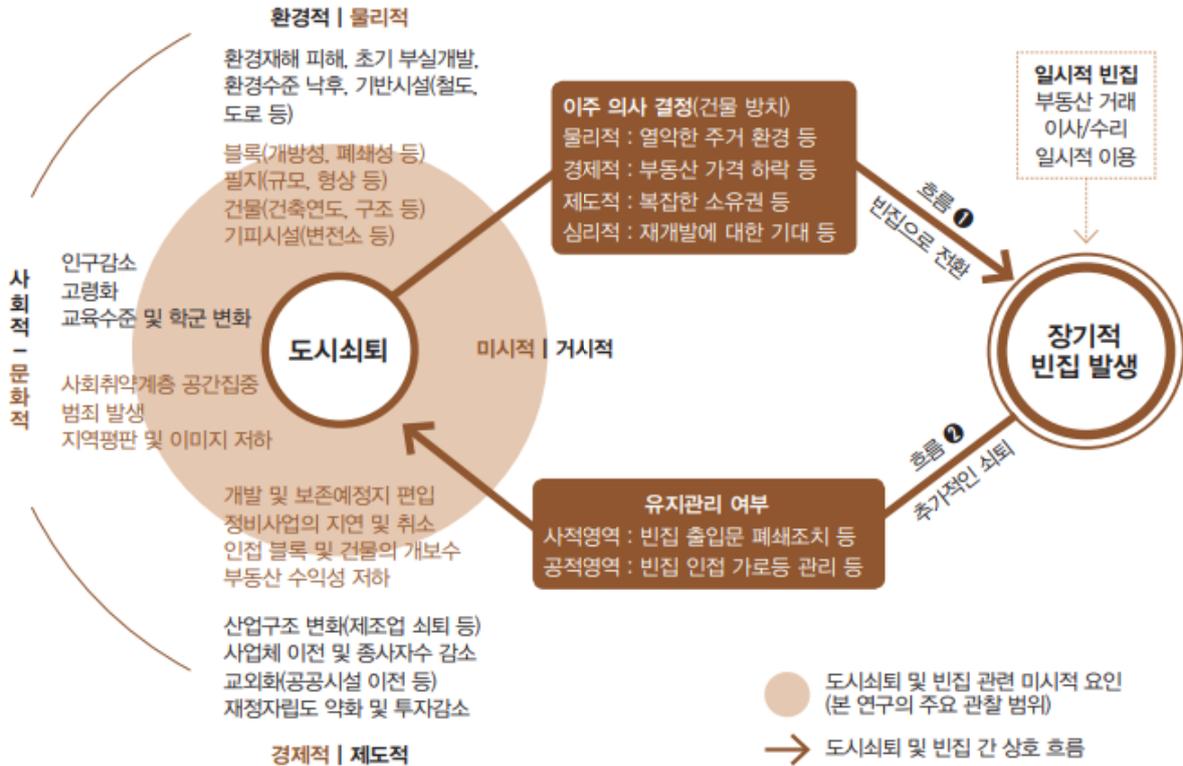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빈집의 사회경제적 문제점

- 주거환경 악화, 미관 저해 등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 범죄 발생 증가, 집값 하락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야기 됨([그림 5] 참조)

[그림 5] 빈집으로 인한 지역사회 쇠퇴 문제 순환 구조



자료: 성은영·윤주선(2017).

-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촌 지역 내 빈집은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 빈집이 증가되고 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촌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김용균 외, 2022)

□ 비수도권 지역의 빈집 원인

- 농촌에서는 고령주택소유자의 사망과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에 따라 주택을 장기간 방치하여 빈집 증가에 영향
 - 소유자가 이사, 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빈집으로 방치될 수있고, 후손들의 상속 후 매매를 하지 않거나 노후에 귀농을 생각하여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 농촌주택이 공실(空室)이 될 경우, 소유자는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로 농촌주택을 방치하거나, 투자에 대한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농촌주택도 방치되어 빈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2020년을 기준으로 농촌주택은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기간(39%)으로 가장 길었고, 3개월 미만(27%), 3~6개월 미만(18%), 6~12개월 미만(16%)으로 나타남
- 농촌주택이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은데다 난방이나 단열 등의 불량이 많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빠른 시간내 흥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2020년을 기준으로 농촌의 주택 노후화 비율은 26.7%로 도시의 15.7%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임

2) 빈집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 빈집과 관련한 관련 법제 및 지원 정책 현황

- 국내의 빈집 정책은 농어촌과 도시로 나누어 진행되어왔는데 이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부에 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표 5〉 빈집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제

구분	관련 법령	빈집 정책
농촌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정비절차 마련(1995)
	농어촌정비법	지사체장 직권으로 빈집 철거 가능해짐(2009)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폐가, 공가 매입과 활용 비용으로 가능해짐(2013)
	건축법	빈집정비절차 규정(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빈집정비사업 지원목적으로 사용 가능해짐(2017)
빈집 (지사체)	118개 광역 및 기초지사체	빈집 관련 조례 시행
빈집 (정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존의 개별 빈집 개선에서 벗어나 빈집밀집구역의 종합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제시
	2019년 주거 종합계획	빈집 정보 은행을 도입하여 빈집 검색 시스템 구축 예정

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2019).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대상

1. 분석 대상

□ 한달살기 지원 사업의 공간적 분석 대상 선정

- 한달살기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 규모와 신청 현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빈집 주택의 공간적 종속성이 높고,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전체 도(道)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남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경남별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경남형 한달살이 프로젝트에는 약 4:1의 경쟁률을 기록

2. 분석 방법

□ 일본, 독일 등 빈집 활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문헌 연구 실시

□ 주요 이해 관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 실시

주요 대상	질문 내용
한달살기 기(既)이용자	- 한달살기 계획 중 불편 사항 - 한달살기 숙소 선택 이유 및 고려 사항(우선순위) - 한달살기를 위한 빈집 이용에 따른 비용지불의사
빈집 소유자	- 빈집 활용 및 정비 계획 - 빈집 임대에 대한 의향 - 빈집 임대에 따른 사용료 수용의사
경상남도 공무원	- 한달살기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 빈집 정비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 빈집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 청취

IV. 빈집 활용 관계인구 유입 확산 정책 방안

1. 한달 살기 지원 사업 이용자 수요 분석 결과

2. 빈집 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

3. WMLP(Weekly-to Monthly Lease Platform) 구축

□ WMLP(Weekly-to-Monthly Lease Platform) 제공자로서의 지자체 역할

-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 달 단위 주거 플랫폼 개발(Weekly-to-Monthly Lease Platform, WMLP) 제안
 - 지방정부의 역할을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과 한 달살기를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자를 중개할 수 있는 역할로 변모
 - 빈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주 단위(weekly) 또는 월 단위(monthly)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정보를 확인 및 탐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 감소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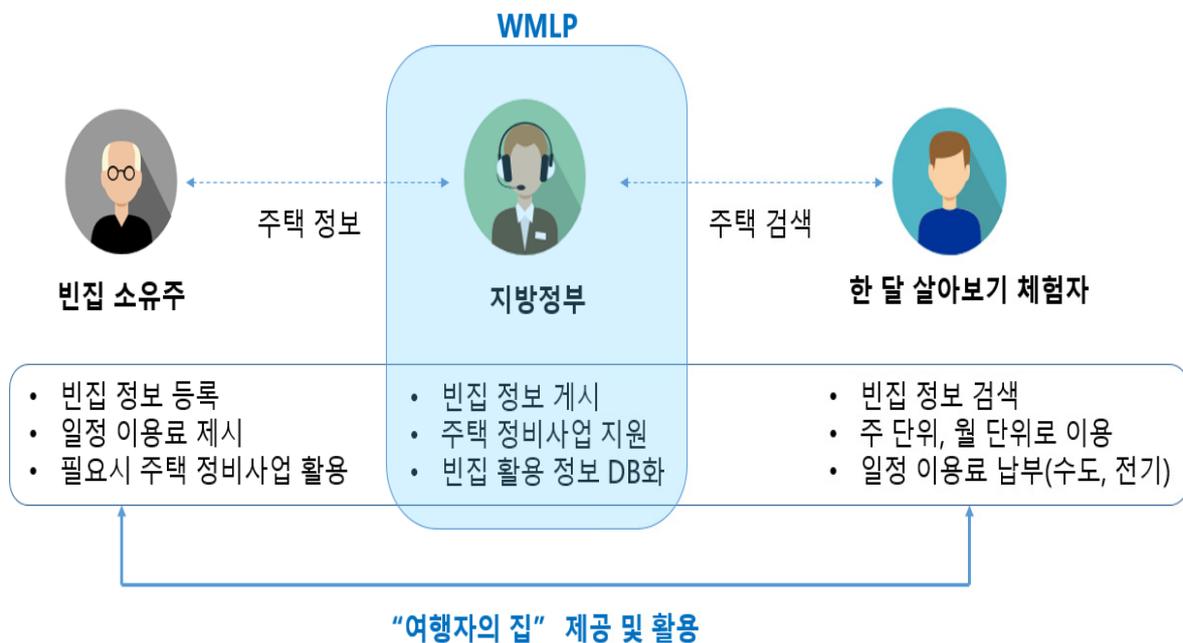
□ 한 달 살아보기 체험자를 위해 빈집을 “여행자의 집”으로 활용

- 비수도권의 지역에서 빈집은 소유주가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에게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침
 - 귀농·귀촌으로 새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넓은 마당과 탁 트인 조망을 원하지만, 오래된 시골 집들은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 빈집은 매매도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소유자의 자식이나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철거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빈집 주변의 주민들은 미관과 사회적 안전의 이유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음
- 빈집 가운데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여행자의 집”으로 활용하여 한 달 살아보기 체험자들에게 제공함
 - 건물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소유주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제공하되 이용자는 최대 6개월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수도 및 전기세 등의 공과금 등을 위한 최소 주거 비용(예: 주당 3만 원 등) 제시
 -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기술자나 건축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빈집 소유주는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사업을 통해 보수 및 안전조치 비용 충당

□ WMLP 기반 여행자의 집 프로그램 활용 방안

- 지방정부는 빈집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여행자의 집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한편,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
 - 건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컨설팅하고, 우수한 활용 사례를 게시함으로써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로 활용
- 빈집 소유주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집을 보수하거나, 상태가 좋은 경우 그대로 임대함으로써 주택의 거주 조건을 유지
 - “여행자의 집” 사업 활용에 필요한 주택 사진, 거주 조건(일정 이용료 및 활용 기간)등을 WMLP에 게시
- 한 달 살기 체험 희망자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숙박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
 - WMLP에 등록된 주택 가운데 희망하는 주택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이용하고(최대 6개월 이하) 소유주가 제시한 일정 이용료를 납부

[그림 6] WMLP 기반 여행자의 집 프로그램 이용 방법



V. 결론 및 기대 효과

□ 빈집 활용 관계인구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최근 인구정책의 트렌드인 관계인구를 활성화 하는 선제적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빈집을 지역의 주거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기존의 지자체 재원(거주비, 활동비 등)을 타지역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 지역의 빈집을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
 - 한 달살기 프로그램의 유연화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감소 유도
 - 기존의 “한 달살기” 프로그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유연하게 (예: 2주, 3개월 등)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농·귀촌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

MEMO

MEMO

MEMO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중간보고회

